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 최종보고 -**

2024. 9.

차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1)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내용 및 연구수행 방법	7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사례분석	7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 행·재정정적 효과성 분석	7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방안 제시	8
II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	13
1.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추이와 우리의 대응	14
1)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적 동향	14
2) EU 지속가능성 규제(European Green Deal)	17
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19
4)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21
5) 국가지속가능발전 지원 기능의 미흡	22
2.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24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 제공의 중요성	24
2)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황	26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과 유사 정보망(포털)	29
4)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관련 타 기관 사례 운영현황 점검결과	33
5)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활성화 필요성	33

3. 거버넌스: 정부지원 기능	39
1) 기존 연구	39
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40
4. 평가 기능	44
1) 기존 연구	44
2)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현황 및 문제점	45
III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사례분석	51
1. 국내·외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	52
1) 국내·외 사례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내용	53
2. 해외 사례분석	57
1)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S)	57
2)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62
3)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 of Columbia University)	68
4) 브루킹스연구소의 지속가능개발센터(CSD)	73
5) SDG 혁신센터	76
3. 국내 연구소 및 부설 센터 사례분석	80
1)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80
2)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4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연구센터(KIPF)·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KIPA)	87
4) KIPA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치 사례	92
4. 사례분석의 시사점	94
1) 사례조사의 요약	94
2) 사례분석의 시사점	96

IV.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성	99
1. 행·재정적 효과성 분석 개요	100
1) 연구의 목적	100
2) 연구 수행 방법	101
2. 델파이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106
1)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	106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118
V.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기능 및 역할	139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와 연구수행 방법	140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0
2) 연구수행 방법	142
2.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위원회 기능별 센터 역할 분석	149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내용 분석	149
2)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3대 잠재적 기능 도출	151
3) 잠재적 기능분석 결과의 종합	162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역할	165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조직구성안 검토	165
2) 조직구성안별 특징	166
4. 시나리오별 장단점 및 기대효과 분석	176
1) 3대 잠재적 기능별 시나리오 분석	176
2)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종합	189
VI.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 방안	195
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모델 도출	196

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모델 도출 방향	196
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196
3) 연구센터 설립·운영 규정(안) 예시	207
2.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216
1)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도출	216
2)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언 (1): 네트워크 허브	216
3)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언 (2): 애자일 조직	219
3. 결론: 연구요약	222

표 / 차 / 례 /

〈표 I-1〉 연구 수행 체계도	11
〈표 II-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긍정적 성과	25
〈표 II-2〉 지속가능발전포털의 기능 및 주요 내용	27
〈표 II-3〉 통계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통계포털	29
〈표 II-4〉 정부 출연(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및 정보망 운영현황 ...	31
〈표 II-5〉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지식과 정보의 목록(안)	34
〈표 II-6〉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지식과 정보의 목록(안)	35
〈표 III-1〉 사례조사 비교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영역	54
〈표 III-2〉 표 예시	61
〈표 III-3〉 SEI 연구주제에 관한 사항	66
〈표 III-4〉 지구연구소의 연구센터(예시)	70
〈표 III-5〉 지구연구소의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 주제 분류	72
〈표 III-6〉 브루킹스연구소 CSD의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	75
〈표 III-7〉 SDG 혁신센터 조직구조	77
〈표 III-8〉 SDG 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79
〈표 III-9〉 KEI의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	82
〈표 III-10〉 ISD의 중점연구 및 주요업무	86
〈표 III-11〉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주요사업('23년 기준)	92
〈표 III-12〉 사례조사의 요약	94

〈표 IV-1〉 델파이 조사 방법 유형	106
〈표 IV-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별 특징 검토	108
〈표 IV-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3대 잠재적 기능	109
〈표 IV-4〉 1라운드 설문지: 전체 5개 파트 설문 내용 구성	110
〈표 IV-5〉 2라운드 설문지: 전체 6개 파트 설문 내용 구성	111
〈표 IV-6〉 2라운드 설문지: 제1파트	111
〈표 IV-7〉 2라운드 설문지: 제2파트	112
〈표 IV-8〉 2라운드 설문지: 제3파트	112
〈표 IV-9〉 2라운드 설문지: 제4파트	113
〈표 IV-10〉 2라운드 설문지: 제5파트	114
〈표 IV-11〉 2라운드 설문지: 제6파트	115
〈표 IV-12〉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타당성(필요성)	123
〈표 IV-13〉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2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125
〈표 IV-14〉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3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효과: 개선의 정도	127
〈표 IV-15〉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4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129
〈표 IV-16〉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5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132
〈표 IV-17〉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6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별 개선 사항	135

〈표 V-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근거조항	149
〈표 V-2〉 3대 잠재적 기능	153
〈표 V-3〉 조사, 연구, 교육 기능관련 법적 근거	155
〈표 V-4〉 정부 지원 기능관련 법적 근거	158
〈표 V-5〉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관련 법적 근거	161
〈표 V-6〉 조직구성안별 특징 검토	175
〈표 V-7〉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시나리오 분석	180
〈표 V-8〉 정부 지원 기능 시나리오 분석	184
〈표 V-9〉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시나리오 분석	188
〈표 V-10〉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종합	193
〈표 VI-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199
〈표 VI-2〉 조사 및 연구부 업무분장 예시	202
〈표 VI-3〉 정책지원부 업무분장 예시	203
〈표 VI-4〉 평가 및 국제협력부 업무분장 예시	205
〈표 VI-5〉 경영지원부 업무분장 예시	206
〈표 VI-6〉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 규정(안) 예시	207
〈표 VI-7〉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출 (2024년 예산기준, 출처: ALIO)	211
〈표 VI-8〉 임직원 수에 따른 지출 회귀분석 결과	213
〈표 VI-9〉 임직원 수에 따른 지출추정 결과	213
〈표 VI-10〉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입 현황 (2024년 예산기준, 출처: ALIO)	214

□ 그림 / 차 / 례 /

<그림 II-1> 2024 한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대시보드 및 추세	14
<그림 II-2>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 이정표	15
<그림 II-3> EU 지속가능 관련 규제 타임라인	18
<그림 II-4> 지속가능발전포털(국조실)	27
<그림 II-5> K-SDGs 세부지표 및 2030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46
<그림 II-6> 지표 총괄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47
<그림 III-2> SEI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영역	63
<그림 III-3> SEI의 조직도	64
<그림 III-4> KEI 조직도	81
<그림 III-5> ISD 조직도	85
<그림 III-6> KIPF 조직도	88
<그림 III-7> KIPA 조직도	89
<그림 III-8> KIPF의 공공기관연구센터	89
<그림 III-9> KIPA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90
<그림 III-10>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지원 구조	93
<그림 IV-1> 델파이 조사 절차	104
<그림 V-1> TAIDA 절차를 통한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 (Lindgren & Bandhold, 2003) ...	146
<그림 V-2> Wright & Cairns(2011)의 절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절차 (배정환 & 박진희, 2013) ...	147
<그림 V-3> 분석의 절차	148

〈그림 VI-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도 예시	206
〈그림 VI-2〉 임직원 수 대비 비용 항목별 규모	212

☐ 참고문헌

참고문헌	225
------------	-----

☐ 부록

부록	229
1)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230
2) 델파이 조사 대상자	254
3)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257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목적
- 제3절 연구내용 및 연구수행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성” 이 경제, 사회, 환경 분야 정책·제도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 방향에 기본 원칙으로 반영하는 추세
 -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WCED-Brundtland report) 발표 이후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책 결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함. 이는 1992년 리우(Rio)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 열린 유엔 세계 정상 회담을 통해 더욱 촉진
 -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은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이는 '의제 21'의 원칙에 따라 제안됨(김호석, 2022)¹⁾
 - '리우 선언'과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국가 지속가능 전략의 선포와 실행에 관한 구체적 의무를 설정함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국내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
 -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경제적 목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종합적 고려가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국제 기구와 규제 기관들이 제정한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스탠다드들이 등장하면서 발전함
-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역사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시기로 나눌 수 있음
 - (초기 단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시기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도입되고 초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음. OECD와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GRI의 출범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체계적으로 시작하는 기틀을 마련함

1) 김호석·유한석·홍한움·류환희, 2022,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 (확립과 표준화 단계)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표준화와 구체화가 이루어진 시기임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재무와 비재무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함
 - (통합과 조화 단계)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의 시기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환경, 사회, 직원, 인권, 반부패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됨. 이 시기에서는 통합된 보고 체계와 자연 자원을 포함한 포괄적 가치 평가가 강조
 - (규제 강화와 포괄성 확대) 202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의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EU의 새로운 지침들은 비재무 정보 공개의 깊이를 확장하고, 국제 무역 규제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법」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근간으로 국가 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제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통해 설정되며, 이 전략은 모든 분야의 정책과 계획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접근을 요구함(환경부, 2021)²⁾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조2는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가 정책 및 각 분야별 정책과 계획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함
- 국가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요구됨

2) 환경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국내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함
- 많은 행정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타 부처의 정책과 상충하거나 같은 부처 내에서조차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됨. 이러한 상황은 법적 및 정책적 틀 내에서의 일관된 지속가능발전 접근과 실행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김호석 외, 2022)
- 또한 지방정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점은 지방정부 간의 조화로운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들며, 전체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저해함
-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연관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³⁾
-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성 보강 및 관련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 대두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지위 격상 및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위상 제고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이 기본법에 규정(제27조)됨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기능 설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제27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역할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등”으로 규정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연구기능이 다양한 기관에 분산·운영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중복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 초래 우려
- ▲ 한국환경연구원(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속가능발전연구팀) ▲ 서울대(지속가능발전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됨
-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정책 일관성 및 연구 효율성 제고 필요

3)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비교”, 최영호, 2022; "Integrating Local and 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ne Carter, 2021

2.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함
 -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 해외 주요국 및 국내 유사 연구기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 설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모색]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기관 조사·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 설립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관련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학계 등 기관별 기능 및 설립방식 등*을 종합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제시
 - ▲설립형태 ▲조직구조 ▲위상 ▲주요 기능·역할 ▲중점 연구분야 ▲예산 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유사 정책연구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담 연구기관 설립 시의성 검토
 - 기관별 설립 형태, 고유기능, 핵심연구 분야 및 범위, 주요업무 등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센터 설립 방향 제언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성 분석 및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근거 도출
 - 전문 연구기관 설립 운영 전-후 기본법에 따른 법정업무의 추진절차를 비교분석하고 개선·강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운영방안 제시

-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및 전문성 보강을 위해 위원회 기능별 센터의 주요역할을 도출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체계 제언
 - 센터 설립 시나리오별(▲기관 형태 ▲조직 구성 ▲주요기능 및 역할 범위 ▲인력구성 ▲위원회 지원 형태 등) 장단점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센터 운영모델 제안
 - ▲조직도(안) ▲업무분장표 ▲세부 사업내용 ▲기능별 업무매뉴얼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및 확보방안 ▲연구센터 설립·운영 규정(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제시
 -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전문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민-관-학계 의견수렴·반영

3. 연구 내용 및 연구수행 방법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사례분석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기관 조사·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 설립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관련 공공기관, 민간협의체, 학계 등 기관별 기능 및 설립방식 등을 종합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제시
 - 설립형태 및 위상, 조직구조, 주요 기능·역할, 중점 연구분야, 예산 운용 방식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유사 정책연구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담 연구기관 설립 시의성 검토
- 본 연구는 기(既) 설치되어 운영되는 유사 정책연구기관의 특성을 △연구의 우수성 및 다학제적 접근 역량, △정책대안의 개발과 정책 실효성 강화(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 △연구기관 운용의 대응성 및 유연성, △협력과 파트너십 구성 및 운영역량 측면으로 구분하여 강점과 약점 비교하여 분석함
- 국내 우수사례분석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에 시사점을 도출하며, 시사점 도출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 행·재정정적 효과성 분석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를 “예측” 하는데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함
-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작성을 위하여 문헌 분석, 법령 분석, 그리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이를 통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4가지 설립 형태와 3가지 (잠재적) 주요 기능을 도출함. 각 주요 기능은 2개에서 5개의 하위 기능을 가짐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

과를 “예측” 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수행

-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제2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제3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제4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제5파트)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방안 제시

(1) 연구의 내용

- 국가지속가능발전(SDGs)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국가적 차원에서 달성해야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이 요구됨.
- 특히, 국내 국가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연구원의 경우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정책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이 존재.
 - 대학의 경우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등이 존재
- 국가지속가능발전(SDGs) 연구 담당기관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분산된 기관들 사이에서 중복연구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 자원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통합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연구가 분산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수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심연구기관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연구 범위

-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범위에 대해서 검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나타난 잠재적 기능들을 식별하고 종합함으로써 신설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 특히, 기존 연구원 및 대학의 지속 가능연구 담당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을 검토
- (조직 운영방식)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조직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잠재적 조직운영 형태에 대해 검토 필요.
 - 앞 장에서 수행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사례에 대한 종합적 비교분석을 토대로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특히,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운영방식에 따른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범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조직운영별 형태에 대한 비교분석 수행
 -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조직 구성안의 장점과 단점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검토
- (기능과 조직구성안의 정합성)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지속발전센터가 수행해야 할 조직 기능과 역할을 도출된 개별 조직 구성안에 따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검토함.
 -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 방식별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도출된 잠재적 기능들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검토함.

- 연구센터 설립 목표를 극대화하여 잠재적 기능과 역할을 달성가능한 조직구성안을 비교분석.
- 이를 통해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된 현 연구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표 1-1> 연구 수행 체계도

구분	주요 내용	연구 결과
Modul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기관 조사·비교분석 	전문 연구 기관 설립 시사점 도출
↓		
Modul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전담 연구기관 설립 시의성 검토 - 유사 정책연구기관의 현황 분석 - 기관별 설립 형태, 고유기능, 핵심연구 분야 및 범위, 주요업무 등 분석 	우수사례 발굴 및 센터 설립 방향 제언
↓		
Module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성 분석 - 전문 연구기관 설립 운영 전·후 기본법에 따른 법정업무의 추진절차를 비교분석 	기관 설립 필요성 근거 도출
↓		
Module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운영방안 제시 - 위원회 기능별 센터의 주요 역할 도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체계 제언 - 센터 설립 시나리오별 장단점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 	실현가능한 센터 운영 모델 제언
↓		
Module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주요 역할 및 협력방안 제시 -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전문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민-관-학계 의견수렴·반영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제2장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

- 제1절 글로벌 규제 동향
- 제2절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 제3절 거버넌스: 정부지원 기능
- 제4절 평가 기능

II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추이와 우리의 대응

- 2024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성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아래 그림은 17개의 SDG 목표를 기준으로 한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목표는 색상과 화살표로 현재 진행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 1번 빈곤 퇴치부터 17번 파트너십까지 대부분의 목표가 도전과제로 평가됨. 한국은 166개국 중 33위에 위치해 있으며, SDG 지수 점수는 77.33점으로 나타남

<그림 II-1> 2024 한국 지속가능발전 목표 대시보드 및 추세



출처: <https://dashboards.sdindex.org/map/goals>

1)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적 동향

-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즈니스 모델 역시 지속 가능한 원료 대체, 재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등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음.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면서도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순환 경제와 재사용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섬유 산업의 폐기물 문제 해결, 자원 순환 촉진, 건설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재활용

나일론, 커피 찌꺼기로 만든 폴리에스터, 재활용 금과 은, 재활용 콘크리트 등이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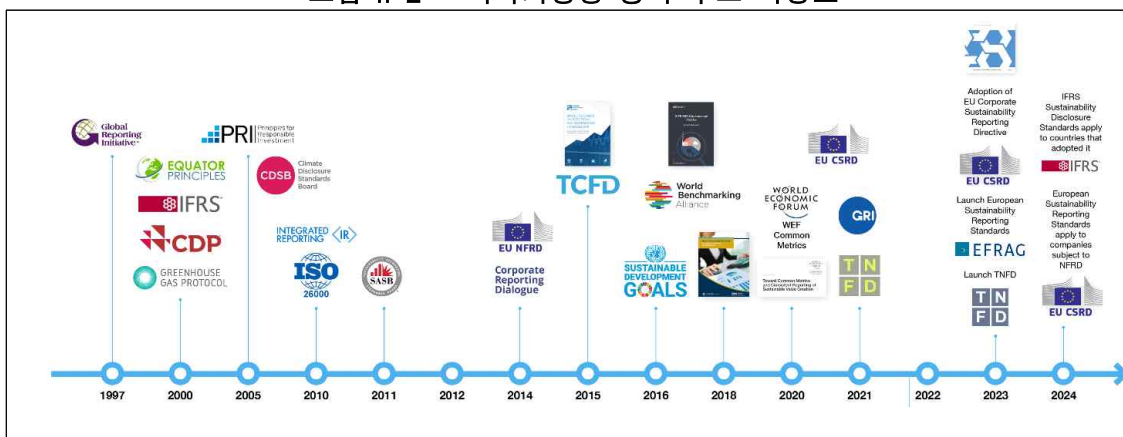
- H&M Group과 Vinnnet은 폴리 재활용 벤처기업을 설립함. Syre의 재활용 폴리에스터는 기존 석유 기반 폴리에스터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음.

○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업들은 수소 연료전지 설치, 탄소 제거 크레딧 계약 체결, 재생 디젤 생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공급 등 다양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

- Microsoft는 Neustark와 27,000톤 이상의 탄소 제거 크레딧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제항공그룹은 항공 엔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Twelve로부터 약 10억 리터의 SAF를 구매함.

○ 세계 각국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ISSB, CSRD, SEC 등 글로벌 규제 요구를 준수해야 함. 이와 함께 TNFD, CBAM,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법, CSDDD 등 여러 규제들이 도입되어 기업들이 ESG를 실현하면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림 II-2>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 이정표



출처: <https://www.ifcbeyondthebalancesheet.org/understanding-global-reporting-frameworks>

- ISSB는 기업들이 ESG 성과를 비교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EU는 CSRD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미국 SEC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TNFD는 기업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고 있음.
-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마련하여 공급망 전반의 인권 및 환경 영향 평가와 관리 의무화
- ESG 목표 달성 과정에서 기업들은 비용 증가, 복잡한 규제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어려움, ESG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갈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각국의 ESG 규제와 요구 사항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기업과 투자자, 정치인들은 ESG 이니셔티브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 ESG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간 협력, 표준화된 비교 기준 마련, 교육 강화, 그리고 유용한 도구 제공 등이 필수적임.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GRI, SASB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기업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해졌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음.
- ESG 정보 공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경제 시스템의 전환은 금융 및 투자 기관의 감독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기업들의 전환 활동을 점진적으로 촉진함.
- ESG 생태계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목표로 자리잡고 있음.
 - 지속 가능한 사회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 생태계 보호, 사회적 정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들은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OECD, UN, SDGs, FCA, ECB, 한국 금융감독원 등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고 ESG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기업들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Green Taxonomy, ISSB, CSRD, SEC 기후 공시, SASB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목표를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통합하고 있음.

2) EU 지속가능성 규제(European Green Deal)

- 유럽연합(EU)은 장기간에 걸쳐 그린딜(Green Deal)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해 왔으며, 기후 변화, 자연 보호, 순환 경제, 인권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EU의 그린딜은 크게 재무 및 비재무 정보 공개, Fit for 55 목표, 그리고 실사 규정 세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재무 및 비재무 정보 공개 규정
 -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SFDR):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공시 요구를 명시함.
 - EU 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함.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대기업들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함.
 -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ESG 정보 공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을 개발함.
- Fit for 55는 유럽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규제와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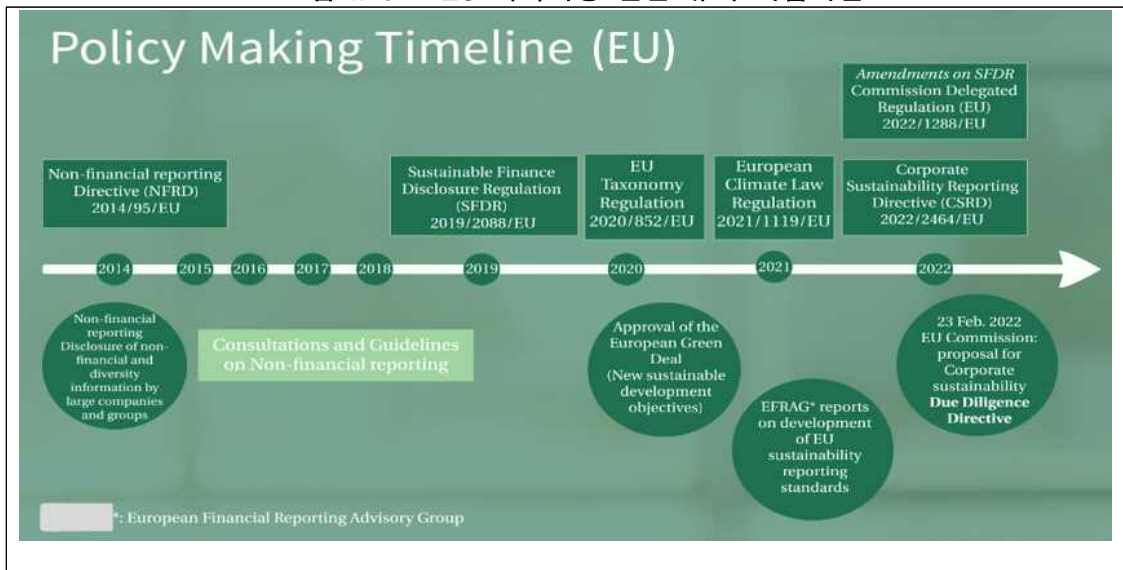
용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

- 재생에너지 목표 40% 달성: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함.

○ EU 실사 규정 (Due Diligence Directive)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요구함.

-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과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함.
- 산림파괴 금지 규제(EUDR) 및 배터리 규제(Battery Regulation): 산림 파괴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

<그림 II-3> EU 지속가능 관련 규제 타임라인



출처: <https://aquila.is/knowledge-hub-article/europea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2/>

○ CSRD는 지속가능성 성과 기준에 따른 재무 지표를 EU Taxonomy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성과 기준과 재무 지표 보고는 적격 경제활동 확인, 적합성 평가, 환경 목표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확인, 최소한의 안전장치 적용, 그리고 공시 의무로 나뉨.

○ 적격 경제활동 확인: 모든 경제 활동 중에서 EU Taxonomy의 범위에 해당하는 적격 활동을 선별함.

○ 적합성 평가: 선정된 경제활동이 EU Taxonomy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해당 활동이 다른 환경 목표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함. 이후, 해당 경제활동이 관련된 주제 및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평가함.

-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EU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충족해야 할 여섯 가지 주요 환경 목표를 설정
 - 기후 변화 완화 (Climate Change Mitigation)
 - 기후 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물 및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호 (Sustainable Us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 순환 경제로의 전환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 오염 예방 및 관리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복원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 공시 단계에서는 경제활동 성과를 Taxonomy 기준에 맞춰 공개
 - 비금융 기업의 경우, 운영비(OpEx), 자본비(CapEx), 매출 비율 등을 공개
 -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은 그린 자산 비율(Green Asset Ratio, GAR), 자산 운용사의 경우 그린 투자 비율(Green Investment Ratio, GIR) 공개

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S2를 개발하며, 여러 공시 기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들이 보다 통일된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일관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FRS S1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임. 이는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재무 정보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재무 상태와 성과

- 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요소들을 포함해야 함.
-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여, 기업이 기후 변화나 자원 고갈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지를 설명해야 함.
 - 단기에서 장기까지 지속가능성 요소가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경영 방침에 통합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속가능성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 상황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성과 지표도 포함해야 함.
 - 기업이 직면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함.
 - 지속가능성 목표 및 주요 성과 지표 설정, 달성 여부와 그 진척 상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해야 함.
- IFRS S2는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표준임. 이 표준은 기후 변화가 기업의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시하도록 함.
-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기회를 포착해야 함.
 - 물리적 위험은 기후 변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변화에서 비롯되며, 전환 위험은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경제 구조 및 사회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함. 기후 대응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도 이에 포함됨.
- 또한, 투자자와 시장의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기후 관련 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4)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IFRS S1/S2 표준의 도입을 준비 중이며, 지난 4월 30일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공시 초안을 공개하였음.
 - 공개된 초안은 총 세 가지로,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의 일반 사항, 제2호는 기후 관련 공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제101호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 사항으로 구성됨.
-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업이 재무 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요인을 평가하여 이를 명확히 공시해야 함.
 -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지배구조, 위험 관리 체계, 지표 및 목표 설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규정임.
 - 거버넌스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절차와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음.
 - 전략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계획과 행동 방침을 포함하며,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함.
 - 위험 관리는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함.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지표와 목표는 기업이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함. 이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제2호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임.
 - 이 규정은 기업의 기후 전략, 지배구조, 위험 관리 및 성과 지표를 포함
 - 거버넌스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와 절차를 의미하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기후 위험 및 기회 관리 능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전략은 기업이 물리적 위험(예: 홍수, 폭염 등)과 전환 위험(예: 규제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그 영향을 재무적으로 분석해

공시하는 것을 포함함.

- 위험관리는 기후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다루며, 기업이 내부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전사적 위험 관리(ERM) 프레임워크를 포함함.
- 지표 및 목표는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성과 지표들을 포함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 위험이 높은 자산 정보, 물리적 위험이 높은 자산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됨.

○ 제101호는 정책적 목적이나 법적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다루는 선택적 공시 조항임.

- 정보 공개는 법적 요구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항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정보로 구분됨.
- 법적 요구 사항에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 배출권 거래 내역,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자료 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배출권 거래량 및 잔여 배출권 정보 등이 공개 대상임.
- 정책적 목적을 위한 정보로는 육아 친화 경영, 강제 노동 방지, 종업원 다양성, 안전 경영, 인권 경영 등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포괄함. 예를 들어, 기업이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정책,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한 내부 규정, 종업원 다양성에 대한 통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5) 국가지속가능발전 지원 기능의 미흡

○ 지속가능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지원 역량은 한계가 있음. 특히 기후변화,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전문 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연구의 중복과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 이 센터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관으로서, 국내외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
 -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명시된 연구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연구센터는 단순한 연구 기능을 넘어, 정책 제안, 이행 상황 점검, 국제 동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정부와 기업이 기후 변화와 자원 문제 등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이러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임.
 - 나아가, 연구센터는 ESG 경영의 확산을 촉진하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경영 전략에 통합하고 기후 변화, 자원 문제 등 주요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글로벌 모범사례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임.
- 이 센터가 설립됨으로써 한국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는 기후 변화와 자원 문제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임.

2.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법 제27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으로 분류되는 지속가능발전포털(<https://ncsd.go.kr>)이 운영되고 있으며⁴⁾, 향후 지속가능발전에 다양한 관한 정보과 지식을 수집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 제공의 중요성

- 여러 사회 주체(예: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참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함
- 정보의 공개, 공표, 공시(disclosure)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사회 주체들의 책임성과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는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 주체들의 노력과 성과로 공개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는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결과도 정보와 지식으로써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보와 지식에 관한 공개, 공표, 공시는 그 차제로서는 고정된 정보와 지식일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개인과 사회적 주체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 더욱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촉매제로도 활용함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성과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례임(허경선, 2010; 이재완 2015; 박나라, 2017)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제도는 기관의 현황, 운영실적, 기관의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운영됨
- 공공기관은 다양한 경영정보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때 경영실적 평가에서 별점을 받아 경영실적평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표 II-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의 긍정적 성과

구분	주요 내용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와 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경영성과 등을 투명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함 - 이를 공공기관이 운영되는 방식, 예산의 사용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투명성을 증대시킴
책임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경영 현황을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비롯한 공공의 감시를 받는 효과가 발생함 - 기관의 경영 활동이 잘못되었거나 성과가 부진할 경우 비판을 받거나 기관 내부적으로도 경영성과의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생성됨
성과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의 경영공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은 더 나은 성과(예: 부채비율 감소)를 내고자 하는 노력과 동기를 유발하는 행태적 변화를 촉진함 - 기관의 경영 현황과 성과가 알리오(Alio)를 통해서 공개되면, 기관의 성과가 다른 기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평가를 받는 효과가 발생함. - 공개된 지표와 자료를 통해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 기관의 내·외부적으로 성과개선에 관한 요구받거나 효율적 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남. 특히,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발생하고, 성과가 부족한 기관에 대한 개선요구가 다양하게 발생하여 지속적인 성과 향상의 촉매제로 작용함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관한 경영정보 및 관련 지식의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간에 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서 기관 간의 경쟁이 촉진됨 - 공공기관은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인하여 더욱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 경영 전반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을 촉진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오(Alio)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은 자신들이 낸 세금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성과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와 의견을 형성하는데 기여함

정책 결정에 대한 공공의 참여 유도	-공공기관의 성과와 경영 현황이 공공에 공개됨으로써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촉진함 -정보와 지식의 공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기관의 노력에 관해 공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함
사회적 신뢰 형성	-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신뢰 형성됨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집행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하는 선순환적인 효과를 발생함
부패 예방	-경영 현황과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패 가능성이 감소됨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내부 감시뿐 아니라 외부에서 감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어 비리나 부정을 예방하는 효과 발생함

출처: 허경선(2010), 이재완(2015), 박나라(2017)의 연구내용을 요약 정리함

-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망(알리오(Alio))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책임성 증대, 성과 향상,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킴
- 비록,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공시의 의무가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망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별 정보,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교육에 관한 정보, 연도별로 성과달성의 변화 추이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술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2)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황

지속가능발전포털 현황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으로 현재 존재하는 “지속가능발전포털”은 2011년 초반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에 관한 정책연구를 발간하고, 위원회의 활동과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정보 등을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포털의 정보와 지식의 분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정보마당”, “국민참여마당”, “지속가

능발전 국가위원회” 을 대분류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II-4> 지속가능발전포털(국조실)



출처: 지속가능포털(<https://ncsd.go.kr/>)

- 지속가능발전포털은 상술한 대분류 아래 중분류 및 소분류 구분하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표 II-2> 지속가능발전포털의 기능 및 주요 내용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지속가능발전	개념	
	배경	국제적 배경 국내적 배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 시행령
	국가의 실천노력	국가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우리나라의 국제적 실천
	용어사전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국제적 배경과 의의 17개 목표와 현황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정보마당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SDGs 소개		
		배경과 의의		
		세부목표와 지표		
		심볼 다운로드		
	거버넌스	K-SDGs 공동작업반	K-MGoS 이해관계자그룹	
			지방의제2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도권	강원·충청	
			경상·전라·제주	
			연구 및 최신동향	정책연구보고서
			학술자료집	
	정보마당	교육자료	최신국제동향	
			어린이	
청소년/일반				
체험학습장				
아카이브				
보도자료		지속가능발전인		
지속가능발전 실천사례		개인의 실천		
		기업사례		
		공모전수상사례		
		지속가능 네트워크		
국민참여마당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UN RCE 네트워크		
		행사 및 공지사항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식		
		지속가능발전현장		
		이메일문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FAQ		
		소개		
		연혁		
		위원회 운영세칙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소개			

출처: 저자 작성

- 지속가능포털에서 “지속가능발전” 으로 분류되는 기능은 지속가능발전의 배경과 우리나라의 기본법제도, 국가의 실천 노력을 소개함
- 포털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에

관한 소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자료는 어린이, 청소년/일반, 체험학습방 등으로 분류하여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새로운 학습자료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기능은 침체한 상황임
- 지속가능포털은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법이 전체 제·개정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정보와 지식을 중심으로 정보망의 구성과 내용에 개선이 필요한 하는 상황임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과 유사 정보망(포털)

- 통계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포털
- 통계청이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발표하는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통계 정보를 별도의 포털을 통해서 통해서 목표별, 지표별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공개함(지표누리: <https://www.index.go.kr/sdg>)

<표 II-3> 통계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통계포털

통계청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데이터 현황
	

출처: 통계청 지표누리 지속가능발전목표(<https://www.index.go.kr/sdg>)

- 통계청이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정보는 17개 목표와 각각의 목표에 선정된 지표와 데이터의 수집 수준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함

- 통계청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별로 국가 수준의 SDG 지표별 수준 제공함
 - 통계청은 각각의 목표와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 출처 정보, 관련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도별 변화 추이를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함
 - 이 밖에 제공되는 정보는 SDG 지표에 관한 설명(간행물)과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제시함. 게시판에는 공지사항과 Q&A가 제공되는 상황임
- 통계청은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및 집계하여, 목표별 지표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다양한 정보(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결과, 평가결과 등)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통계청은 국가 통계 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 정보의 처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통계자료 수집과 공표 이외에 다른 권한은 부재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경우 통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통계청 포털을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전략,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결과 등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 이 밖에 공표를 명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지방보고서(2년마다), 각종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교육·홍보와 관련된 활동들을 통계청 포털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정부 출연(연)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연구 및 포털⁵⁾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중 연구부서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정보망(포털)을 운영하는지 조사하여 제시함
-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정부 출연(연)의 일부 기관은 빅데이터 등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예: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그러나 수집 및 분석되는 데이터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와 부분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황임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출연(연) 중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부설)은 교육기관으로 조사에서 제외함

- 개별 출연(연)의 홈페이지와 별도로 정보망(포털)을 운영하는 경우는 소수에 해당하며, 특히 운영되는 정보망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노동, 교육, 건축, 도시, 환경, 거버넌스, 빈곤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출연(연)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연계·통합되어 관리되는 데이터센터 및 정보망(포털)은 부재함
- ※ 다만, 출연(연)이 연구 과정에서 생성하는 다양한 원시데이터(raw data)의 상당 부분은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 공개됨

<표 II-4> 정부 출연(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및 정보망 운영현황

연번	기관명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 관련성 및 정보망 운영)
1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연구실, 자원순환연구실, 환경보건연구실로 구성됨 • “환경데이터센터”에 6명 직원 규모 • 25개 기관의 데이터 연동하여 데이터/인포그래픽 제공 (https://www.bigdata-environment.kr/user/main.do) • 환경분야(상하수도, 수자원, 생태, 폐기물 등) 데이터 수집과 인포그래픽 제공함(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만을 데이터 수집과 구성은 아님) • 교육, 홍보, 지속가능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 연구직 직원 근무 • 주요 연구업무: 연구혁신 국제협력, 국제관계, 연구안보, 지속가능발전, 에너지혁신, STI for SDGs • 별도의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명의 연구직 직원 근무 • 명칭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가 존재하지만, 국제개발협력(ODA)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함 • 별도의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4	에너지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에너지정보통계센터 등의 연구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 에너지정보통계의 경우 국가 에너지 수급, 에너지 소비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
5	한국교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 교육데이터센터(9개팀, 67명 직원 근무) 존재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6	국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7	산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9	통일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0	한국개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1	교육과정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2	한국교통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3	한국노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패널데이터 조사사업 시행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물가격관측/데이터 센터 있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5	한국법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 특이사항: 기후변화법제팀 운영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4센터, 1팀, 50명)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센터(2센터, 12명)
1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고용패널, 인적자본패널 조사사업 시행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21	한국행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국정데이터조사센터 (6명)
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23	한국건축도시공간연구원 지속가능공간연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공간연구부는 기후변화적응계획, 조경계획(녹색인프라), 녹색건축과 관련 연구를 수행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24	육아정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별도의 연구부서 부재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망을 보유하지 않음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분석에서 내용을 기관의 사례를 소개함

출처: 연구자 작성

4)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관련 타 기관 사례 운영현황 점검결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망은 국무조정실의 “지속가능포털”과 통계청의 “지표누리(지속가능개발목표)”가 대표적인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조사, 국민 참여의 기회 제공, 지속가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추진계획의 이행과 점검 결과(보고서)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망(포털)은 타 기관에 부재함
- 특히,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활동, 추진계획의 점검과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어, 타 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정보망을 운영하는 목적과 세부 기능이 고유하게 설계되어(예: 인포그래픽 작성, 데이터 다운로드 등) 있어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대체하는 데 큰 한계가 존재함
- 국가 출연(연)과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성이 높아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자료가 활용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자료는 개별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충실하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상황임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통계자료의 생성 및 공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결과가 분절적으로 생성되고 제공되는 점이 확인됨.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에 수렴하는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부재함

5)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활성화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실효성 있는 구축과 운영, 정보망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정보와 지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 주요 국가(부처)의 정책,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추진계획(5년), △국가위원회의 정책의견(심의의견), △국민참여와 속의 공론화장 제공 등,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제도·동향 정보수집, 조사분석 등이 존재함

<표 II-5>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지식과 정보의 목록(안)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한 정보 및 지식	근거규정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기본법 제4조
주요 국가의 정책	기본법 제4조
국민참여	기본법 제4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년, 5년)	기본법 제7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5년, 지자체별)	기본법 제7조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관한 평가	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	기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추진계획(5년)	기본법 제9조
중앙추진계획의 점검결과(2년)	기본법 제11조
지방추진계획의 점검결과(2년)	기본법 제11조
국가위원회의 정책의견(심의의견)	기본법 제12조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기본법 제15조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기본법 제15조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2년)	기본법 제16조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2년)	기본법 제16조
국가위원회 구성, 기능 등 (정보)	기본법 제16조
학교 수준별 교육 및 평생교육	기본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 모범 사업자·단체 인증(제)	기본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본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개발가능)	기본법 제28조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공익광고(매체별)	기본법 제4조, 제28조
의견수렴과 국민 참여(숙의공론화장 운영)	기본법 제29조
수렴된 의견의 위원회 반영결과	기본법 제29조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제도·동향 정보수집, 조사분석	기본법 제31조

출처: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 상술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는 “지속가능발전포털”의 주요 기능개편과 더불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치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제공,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교육, 홍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현재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은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조사와 홍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모범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과 인력과 전담기구(지원센터)의 신설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지식은 기존에 이미 생성된 정보와 지식도 일부 존재하지만, 새로운 조사와 연구의 직접적인 수행이 필요하거나,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도 존재함
- 지속가능발전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분류하고,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개선과 전담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할 자원과 전문성은 다음과 같음

<표 II-6>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지식과 정보의 목록(안)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통한 정보 및 지식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행 기능(진단)	필요 자원 및 전문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기본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하는 기능 미흡 • 타 연구기관의 경우 이질적인 사업목적으로 분절으로 운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전문성 필요 • 국내 연구조사결과의 취합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주요 국가의 정책 (기본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계획과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미흡 • 중앙행정기관 별, 지방자치단체 별 추진전략과 계획을 공표하고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정보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별 전략과 추진계획 취합 공표 • 지방자치단체 별 전략과 추진계획 취합 및 공표 • 추진전략과 계획에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국민참여 (기본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민참여 기회에 관한 정보제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의견취합 및 반영 • 국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 운영역량 필요 • 위원회 활동에 의견반영 수준을 점검하고 공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년, 5년) (기본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취합과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통한 정보 및 지식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행 기능(진단)	필요 자원 및 전문성
지방기본전략(5년, 지자체별) (기본법 제7조)	전략이 취합 및 공개되지 않음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고려하여 정보망에 공표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관한 평가 (기본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 (기본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별 중앙추진계획 공개가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추진계획(5년) (기본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별 지방추진계획 공개가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중앙추진계획의 점검결과(2년)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별 중앙추진계획 점검결과 공개가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사용자 편리성이 높은 상태의 결과물 제공 및 정보 매체 활용
지방추진계획의 점검결과(2년)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별 지방추진계획의 점검결과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사용자 편리성이 높은 상태의 결과물 제공 및 정보 매체 활용
국가위원회의 정책의견(심의의견) (기본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의 정책의견(심의의견)의 공개가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국가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기본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불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성과달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전문성 필요 •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성 필요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평가결과 (기본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불명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별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성과달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 작성 전문성 필요 •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성 필요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통한 정보 및 지식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행 기능(진단)	필요 자원 및 전문성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2년) (기본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성 필요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2년) (기본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적용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문성 필요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국가위원회 구성, 기능 등 (정보) (기본법 제17조~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연혁, 구성, 운영 규칙 등을 공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학교 수준별 교육 및 평생교육 (기본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초교육을 제공함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가 2021년 이후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기능 필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교육운영 및 설계 전문성 필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지속가능발전 모범 사업자·단체 인증(제) (기본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사업자 인증제 시행을 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범사업자 및 단체에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 인력 모범 및 우수사례의 관리와 확산을 위한 후속관리 인증기관에 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기본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연구에 관한 연구를 부분적으로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달성 수준 및 개선에 관한 연구수행 인력 조사사업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개발가능) (기본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가 2021년 이후 부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교육운영 및 과정설계 전문성 필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지속가능발전 홍보 및 공익광고(매체별) (기본법 제4조,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홍보가 다소 부진하며,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및 공공홍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매체별 홍보방법의 특성을 고려한 홍보사업 예산 필요
의견수렴과 국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이후 의견수렴 및 국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통한 정보 및 지식	지속가능발전정보망 현행 기능(진단)	필요 자원 및 전문성
(숙의공론화장 운영) (기본법 제29조)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	숙의공론화장 운영 기획역량 • 의견수렴과 참여가 촉진될 수 있도록 소통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 • 숙의공론화장 운영시 지원인력
수렴된 의견의 위원회 반영결과 (기본법 제29조)	• 수렴된 의견의 위원회 반영여부 불명확함	• 작성된 자료의 공표와 국민의 의견(참여) 촉진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제도·동향 정보수집, 조사분석 (기본법 제31조)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을 조사 분석 기능 미흡 • 타 연구기관의 경우 이질적인 사업목적으로 분절으로 운영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규범 및 국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전문성 필요

3. 거버넌스: 정부지원 기능

1) 기존 연구

-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수준(level), 규모(size), 부문(sector), 주체(actor)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그 복잡성이 크며, 이러한 복잡성을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체제에서 거버넌스는 여러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이며(Meadowcroft, 2010), 이러한 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행수단임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함(Monkelbaan, 2019; 우창빈 외, 2022에서 재인용)

-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점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상이 변화한 2022년 전/후에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려움

- 기존 문헌에서 제기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문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 2022년 이전까지 환경부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이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경제·사회·환경·안보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우창빈 외, 2022)
 - 2022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되면서 다양한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과 통합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정연경 외, 2023)
 - 성정희 외(2022)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일 때(2021년) 전

문가 인터뷰를 통해 K-SDGs 거버넌스 문제점을 도출함

- 첫째, “UN-SDGs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과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 으로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 등이 각 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
-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구조적인 연계가 부족“
- 셋째, “지자체의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평가 부분에서도 문제점: 지자체의 SDGs 이행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민, 기업, 행정 거버넌스)의 위상이 낮고 사무국의 재정적, 운영적 여건이 열악“
- 기존 문헌들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들의 방향성이 일치되지 않고,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 통합된 거버넌스 부재

-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기본법」 과 그 시행령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제2항은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직 설립되기 전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거버넌스에서 일단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체계가 부족함
-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목표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와 자료 및 정보

에서도 차이가 남

- 특히,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및 로컬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기업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적 리스크의 감소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이나 이미지 관리, 경쟁 우위의 확보, 투자 유치 및 자본 조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규제나 요구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음
- 하지만, 개별 기업이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섹터의 지속가능발전 규제나 요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한 소통과 협력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둘째, 공공섹터(public sector) 내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함
- 예를 들어, 통계청은 국제 비교 가능성이 높은 지표와 데이터 위주로 관리하며, 환경부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관련성이 높은 지표와 데이터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표와 데이터의 통합이 어려운 상황임
- 더욱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등에서 어떠한 자료를 작성, 수집,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부족한 실정임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연속성 확보 어려움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에서 향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구 기능은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해당 연구센터가 설립되기 전인 현재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됨
- 첫째, 2022년 전까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의 주된 관리 주체인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연구원에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조직 부재한 실정임
- 이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연구 전반을 통솔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

직, 인사, 예산 등이 부족했음을 의미함

- 둘째,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가 단발성 연구 용역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형태의 연구들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연구 용역의 발주처 또는 연구자의 관심 분야 등을 위주로 분절적으로 지식이나 데이터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도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되고 있지 못함
- 즉, 체계적이고 장기인 계획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지식이나 데이터 축적을 위한 거버넌스가 부족함
- 더욱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의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자주 교체되는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소통 문제

-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가 산발적 연구 용역 단위로 수행되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주요 소통도 연구 용역 단위로 이루어짐
- 「지속가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다양한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연구 용역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전반(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평가 등)에 관하여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즉,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긴밀하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이 개별 연구자에게 연구 용역을 위탁하고, 위원회는 해당 연구 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받는 구조에 가까움
- 더욱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내 금융위원회(민간), 행정안전부(지방,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환경부, 산업통상부들 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국무총리실 산하 거버넌스 구조는 정치의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정책조정실의 실효성이 약하며 형식적이라는 한계점이 존재(성정희 외, 2022)함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커질 수 있음

- 이러한 소통 능력은 국무조정실의 사무국이 어떠한 형태로 운영될지와 높은 관련성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됨
- 더불어, (본 연구 뒷부분에서 제시할)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분산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산된 거버넌스의 통합을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평가 기능

1) 기존 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짐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임
 - 또한,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이행의 정도 또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
 - 나아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높은 지속가능발전 평가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평가)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높은 평판은 무역, 투자, 외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평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시점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상이 변화한 2022년 전/후에 지속가능발전 평가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기 어려움

- 기존 문헌에서 제기한 지속가능발전 평가의 문제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실행 및 평가 부분에서는 의제작성이 행정 주도로 진행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제21의 작성, 실천, 평가과정에 있어서 참여가 저조 “ (성정희 외, 2022)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평가지표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주기적인 평가를 실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 “ (성정희 외, 2022)
- “평가 결과의 피드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김병완 외, 2018)
- “한국은 지방분권 수준이 높지 않아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상당 부분 예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DGs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제 이행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 (이정석 외, 2019)

2)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 「지속가능기본법」과 그 시행령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지속가능기본법」 제1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기본법」 제15조제2항: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기본법」 제16조제1항: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지표 설정과 이해도

- 「지속가능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세부목표, 지표, 목표치의 명확성이 낮음. 따라서, 세부목표와 지표 간의 연관성과 목표치 설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가 인터뷰 시 “통합된 주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을 위주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합리성이 낮은 지표들 제시되었다” 는 의견도 눈여겨 볼 만함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의 K-SDGs 세부지표 및 2030 목표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아래 그림에는 K-SDGs 세부지표 및 2030의 (UN이 제시한) 17개 목표들 중 첫 번째인 “1.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목표의 세부목표, 지표(단위) 및 2030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음

<그림 II-5> K-SDGs 세부지표 및 2030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목표	번호	세부목표	지표(단위)	2030 목표치
빈곤감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	1-1	남녀노소, 장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성별, 연령집단별, 장애여부별, 이주민 여부별]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수	13.8 → 12.5
	1-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가계직접 본인부담률 * 실업급여 순수득 대체율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율(%) [가입유형별, 성별]	82.5('17) → 지속확대 성별)
	1-3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 GDP 대비 공적사회 지출 비중(%) [지출항목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5.9 → 4.6
	1-4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사회·환경적 충격 및 재난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 정부예산 대비 근로빈곤층 대상 재정사업(EITC, CTC)의 지출 규모	

출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p. 42)

- 참고로, 통계개발원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도 UN이 제시한 17개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 지표 등 정보를 포괄하는 총괄표를 제시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보고서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목표 - 17개 목표 중 첫 번째 - 를 선정함
- 두 표는 유사한(동일한) 목표의 세부목표, 지표(단위)가 상이함을 보여줌

<그림 II-6> 지표 총괄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퇴치

세부목표		지표	연도별 모니터링 지표			
			2019	2021	2022	2023
1.1	2030년까지 1일 생계비 1.25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모든 곳에서 종식	1.1.1 국제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연령, 고용상태 및 지역별)	○			
1.2	각 국가빈곤 정의에 따라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성, 여성, 그리고 아동 비율을 최소 절반으로 감소	1.2.1 국가빈곤선 미만에서 살고 있는 인구 비율(성 및 연령별)	○		○	●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 비율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해 모두를 위해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계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	1.3.1 사회보호제도 보장인구 비율(성, 아동, 실업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신생아, 산업재해자, 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	○	○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과 기본 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에 대한 소유와 통제, 상속,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a)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가지며 (b)토지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안정된 토지권을 갖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보유형태별)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기우고, 기후 관련 국한 상황 혹은 기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을 감소	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		
		1.5.2 글로벌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손실비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출처: 통계개발원(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p. 122)

- 둘째, 지속가능발전 지표 도출에 있어 부처나 공공기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다수 발생함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위 가처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임. 하지만, 이러한 상대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함. 즉, 상대빈곤율이 악화(개선)되었을 때 어느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문제(기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 이렇듯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표가 악화되어도 특정 부처나 공공기관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움
- 어떠한 지표의 개선 의무가 있는 부처나 공공기관을 지정하되, 단일 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복수의 부처나 공공기관 관련 지표임을 표시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들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셋째, 현재의 평가 체계에서는 장기적 평가 모니터링이 어려움
- 어떠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평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값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당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

단됨

- 넷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지표나 데이터 등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기는 하나, 평가자(평가 연구 수행자)들이 해당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발생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기본법」 제15조제2항은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의 평가가 2년마다 행해져야 함을 규정함
- 해당 평가는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그 중요성이 큼
- 「지속가능기본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속가능평가 결과를 종합한 국가보고서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함
- 지금까지 해당 보고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보고서의 내용이나 분량에 비해서 적은 예산(약 5천만 원)으로 작성해왔음. 이는 보고서의 내용보다는 단순히 ‘보고’를 위한 보고서의 작성에 그칠 수 있음
- 연구(작업)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 시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금까지 위원회 위원들이 자문 형태로 의견을 작성하여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평가의 공개

- 「지속가능기본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속가능평가 결과를 종합한 국가보고서 공표하여야 함
- 먼저, 공표의 대상, 내용, 그리고 시기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즉, 보고서 내용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시기에 누구에게 공표하느냐의 문제임
- 둘째,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는 기관이나 소속된 개인의 성과와 연동되지 않음

-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평가 등에는 부처나 공공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해당 평가가 기관은 물론 소속된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셋째, 심층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가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 상정하되, 해당 평가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심지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웹사이트(홈페이지)에서도 해당 보고를 쉽게 찾기 어려움
- 이처럼 평가(보고서)가 비공개 된다면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결과가 평가 대상자인 부처나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질 수밖에 없음
- 평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처나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평가 결과 뿐 아니라 평가를 위한 자료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 더불어, (본 연구 뒷부분에서 제시할)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제3장

국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사례분석

- 제1절 국내·외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
- 제2절 해외 사례분석
- 제3절 국내 연구소 및 센터 사례분석
- 제4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III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사례분석



- 본 장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와 관련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설치 운영에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센터의 설립형태 및 위상, 조직구조, 주요기능 및 역할, 중점 연구분야, 예산 운영 및 인력규모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장의 분석을 통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모델을 개발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함

1. 국내·외 사례조사의 목적 및 방법

- 지속가능발전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센터의 타당한 모델과 기능을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신설과 기능의 설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⁶⁾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연구분야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이지만, 동시에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영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연구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법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 발굴이 사례조사를 통해 필요함
- 다양한 형태의 연구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기능과 장단점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특히,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사항과 특이점에 관한 시사점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재정적으로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조직도, 조직별 기능, 인력규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인건비, 연구사업(고유사업)비 등 상당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실현 가능성과 현실적 제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1) 국내·외 사례조사의 대상 선정과 조사내용

(1) 사례조사 대상의 선정

- (연구 영역의 유사성) 국내·외 연구기관은 인문사회경제 영역에서부터 국방·우주과학분야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주제를 연구함. 본 연구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관장하는 정책의 영역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구주제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을 우선으로 선정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연구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양하여 보건, 식량, 환경, 에너지, 산업기술, 거버넌스 등 사례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의 대상이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음
 -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 분야와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있는 경우를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포함함
 - 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관한 주제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물질의 안전성, 위해성을 시험하는 연구기관은 지속가능성을 우선적 목표로 선정한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며, 지속가능성을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으로 두고 오염매체에 관한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과 정책 등을 연구하는 기관을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판단함
- (연구기관의 고유기능 유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경우 본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내의 분절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융합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중장기 국가전략과 세부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연구센터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기능과 유사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수행함
 - 연구기관은 수행하는 연구의 속성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산업화, 생산) 연구로 구분할 수 있음(참고문헌 이곳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세 가지 유형의 연구 중 산업화 및 생산과 관련된 실용화 측면의 연구수행보다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 기관설립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접근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사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연구센터의 설치에 국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가재정을 관장하는 기관의 관점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관점(예: 연구분야의 중복성 등) 등 현실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례들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1991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에 산재하던 공공연구 기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이를 통해 출연(연)의 연구의 수월성, 독립성,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국가의 예산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 기존 출연(연)의 사례를 조사하여 센터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본 연구는 상술한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을 사전적으로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시행함

(2) 사례조사의 내용

- 본 연구는 기관의 설립형태 및 위상, 조직구조, 기능 및 역할, 중점연구분야, 재정과 규모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서 (가칭)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 III-1> 사례조사 비교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영역

국내 및 해외 전문기관 특성	비교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영역
설립형태 및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법인 성격에 따른 구분으로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정부 산하 기관), 대학의 부설연구소, 민간기업의 연구소, 비영리단체(협의회 포함) 등으로 연구기관의 설립형태를 조사함 · 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연구기관의 위상과 공신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해외에 설치된 연구기관의 경우 비영리 독립기구(nonprofit)의 연구기관이 존재함 · 기관의 설립형태에 따라 기관의 전문성, 독립

	성, 정책지원조정 및 기능 등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
조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할 때 조직구조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관의 목적, 연구 분야, 작업 방식, 그리고 조직 내외부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함 · 연구기관은 수행하는 연구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차이가 존재하며, 조직 구조의 특성에 따른 기관의 전문성, 효율성, 유연성, 연구성과 등에 차이가 발생함 · 국제적 연구기관의 경우 권역별 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연구를 수행함(예: 동남아시아 권역, 서아프리카 권역, 중남미 권역 등)
기능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연구기관은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발간(확산)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함 · 정책 개발의 지원기능: 정책 분석, 경제적/환경적 영향 평가, 정책 권장안 개발 기능 · 교육 및 훈련기능: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특히, 시민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훈련 관련 기능 · 정책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 기능: 국제기구, 정부, 비정부기구(NGOs), 학계, 민간 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 · 정보의 수집, 가공, 공유 기능: 연구 결과와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과 이해관계자들에 제공. DB구축과 운영 ·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기능: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의 성과(효과)를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의 계획과 목표 수준을 추적
중점 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해외 지속가능발전 기관의 연구영역 조사: 기후변화 및 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안보, 물과 해양자원,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방, 시민의 건강 및 웰빙, 사회적 공정성 및 평등 등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분석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부정책의 평가 및 성과개선을 위한 대안 개발, 중앙-지방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이행수준 점검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영역은 연구기관의 미션 및 비전, 주요 기능에 따라 연구의 영역에 차이가 발생 가능함

<p>예산 운영 및 인력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설립목적과 법인 성격에 따른 예산의 구성과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며, 국가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출연(연))의 경우 공고예산으로 운영됨 · 비영리단체(협약체 포함)의 경우 예산이 기부금 및 지원금을 통해서 조성되며 기관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예산이 운용됨 · 대학연구소 및 민간연구소의 기관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금을 획득하여 예산을 구성하고 운영
---------------------	---

2. 해외 사례분석

1)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ISS)

- IISS는 연구의 영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정책의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연구기관이 연구결과를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연구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은 연구기관으로 국가의 예산지원보다는 연구수행을 위한 기부금, 연구기금 등을 확보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례 분석으로 포함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국제지속가능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S)는 사람과 지구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구임
- **(권위와 전문성)** IISD는 지난 30년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기후 위기와 같은 미래 주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IISS는 국제사회의 정책변화에 촉진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소 내부와 협력 기관 간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재정적으로 독립성과 지속성을 갖춘 연구소로 성장함
- **(연구의 독립성)** IISD재정지원을 다양한 기부금(donation) 또는 사업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과 연구의 수행과 연구관련 활동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함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IISD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를 범경제, 에너지, 물 등 영역을 설정하고 연구와 정책옹호집단으로 역할을 담당함. 특히, WTO,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국제협과 정책(예: 어업보조금 규제, 화석연료보조금 규제, 기후변화 대응)의 변화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생시킴
- **(법인의 형태)** IISD는 캐나다와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각국 정부, UN기구, 각종 재단,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음

(2) 조직구조

- (핵심 연구영역) IISS는 핵심연구영역으로 5개로 구분하여 연구와 정책 지원활동을 수행함. 5개의 핵심연구 영역은 기후(Climate), 자원(Resources), 경제(Economies), 협력(Act Together), 참여(Engage)⁷⁾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IISD의 비전을 “CREATE” 로 제시하고, 기후, 자원, 경제, 협력, 참여로 설정하여 여러 연구조사 활동, 시민참여 활동, 정책 자문 활동, 교육활동 등을 수행함
- 지속가능성에 관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를 협력기관과 제시하여 협력적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함

- (주제별 연구팀의 구성) IISD는 개별 주제에 관하여 연구팀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연구팀의 구성은 순환경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에너지, 환경, 갈등과 평화구축, 식품 및 농업, 양성평등, 거버넌스와 다자간 협정, 인프라구조, 투자법 및 정책, 공정한 전환 측정, 평가 및 모델링, 채광(mining), 자연, 공공조달, 책임 있는 사업, 표준 및 가치 사슬, 보조금, 지속가능한개발목표, 지속 가능한 금융, 과세, 기술과 혁신, 무역, 물관리 등으로 확인됨

(3) 기능 및 역할

- 정책 참여 및 자문 역할

- IISD는 국제 무역과 투자, 경제 정책,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측정 및 지표, 자연 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권고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함

7) 참여(engage)는 교육과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3명)에 직원이 해당함

- IISD는 정부와 직접 협력하여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연구진이 참여함(예: World Economic Forum).
- 글로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 IISD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활동하며,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 비정부 기구(NGO)와 파트너십을 맺음.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함.
-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 IISD는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함. 이를 통해 정부 및 여러 조직의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을 지원함
- 공공 참여 및 이해관계자 참여
 - IISD는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문제 해결에 공공의 참여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져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함
 - 워크숍, 세미나 및 공공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지원함
- 출판물 발간 및 정보·지식 전파
 - IISD는 연구결과를 출판물, 정책 브리핑 및 오픈 액세스 자료를 통해 널리 전파함. 미디어 및 공공 포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의견형성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발생시킴

(4) 중점 연구분야와 성과

- (경제법과 정책) 농업과 광업 분야의 부문별 관행을 바탕으로 투자, 무역, 공공 조달, 인프라 자금 조달 및 지속 가능성 기준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함
 - 불정한 무역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IISD는 국제기구, 국가간 포럼, 개발도상국과 투자회사간의 협상 등을 실제로 지원하여 불공정한 무역과 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나타냄(예: 외국 투자기업의 몽골 내 불

공정 자원채굴 협정 개선)

- (에너지)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제기구 등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연구와 관련 활동을 추진함.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원의 거래와 이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향상하는 연구와 정책자문을 수행함
- (회복력) 정부, 시민사회, 지역사회, 기업이 기후 및 갈등 관련 위험을 관리하도록 돕고, 국가적응계획(NAP)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NAP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기후변화 적응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진함
- (진행 상황 추적)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과 체계에 대한 분석과 분석결과 해석을 제시하며,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대안과 실천도구를 제공함.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노력과 성과를 추적하여 협력적 대응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함
- (물 관리) 호수 지역 및 담수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정부, 시민사회, 물산업 분야에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담수 공급을 보호하는 연구 수행
- IISS의 주요 성과
 - IISD는 NDCs 파트너십(NDCs Partnership)에서 개발도상국(예: 인도의 에너지 정책 등)이 파리 협정에서 정한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자문과 전문성을 지원함
 - 유엔 기후변화회의(UN Climate Change Conference)와 같은 주요 글로벌 기후 포럼에 참여하여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글로벌 기후 행동을 옹호
 -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⁸⁾에서 IISD는 탄소 시장과 국제 탄소 거래를 다루는 파리협정 제6조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정책 권고안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IISD가 발효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탄소시장 규칙/규제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함

8) COP26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를 의미함

(5) 예산 운영 및 인력 규모

- IISD는 '23년 수입이 약 46백만 US달러 수준이며, 사업목적이 지정되어서 발생하는 수입은 약 45백만 달러이며, 기관의 운영 및 기금조성에 나머지가 발생함
 - 미국(국무부, 해양경비대), 영국(국제개발청), 스위스(연방환경처, 국제개발청, 외교부 등), 스웨덴(환경보호청), 노르웨이(외교부, 국제협력청, 환경청) 등 15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지원받음
 - 각국 정부의 기관의 지원과 함께 다수의 국제기구, 각종 연구기금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음⁹⁾
- IISS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지출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III-2> 표 예시

단위(\$, US)

	'23년 예산지출	'22년 예산지출
경제법과 정책	13,025,979	10,794,160
복원력	7,024,245	4,396,677
물 관리	8,456,789	5,366,750
이행수준 추적	4,759,600	3,184,964
에너지	7,008,589	5,356,119
프로그램개발	282,935	298,339
합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출처: IIS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2023. 3. 31)

- IISD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27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에 연구소를 두고 여러 국가의 여러 국가가 운영되기 보다는 많은 국가에 직원들을 채용하여 각국의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에 영향을 발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정치학자, 변호사, 경제학자, 정책학자, 행정학자, 공학 및 기술 연구자

9) IISS의 재정지원 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ttps://www.iisd.org/mission-and-goals/funders> 에서 확인이 가능함

등 분야별 전문성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IISD의 직원으로 여러 국가의 사무소에서 근무함

2)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 SEI는 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영역이 사회와 환경분야의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함. SEI는 세계 여러 국가와 권역별 연구사무소(지부)를 설치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국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특히, 연구자들의 일부가 정부의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정책형성과 평가에 참여함.
- SEI는 1989년 스웨덴 의회가 설립하였으며,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임명권을 스웨덴 정부가 갖고 있음. **SEI는 의회가 설립한 준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점차 연구주제와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스웨덴 정부 이외의 국제기구, 연구재단과 같은 예산을 활용하는 특징을 나타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전문성이 높은 기관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음

(1) 설립형태 및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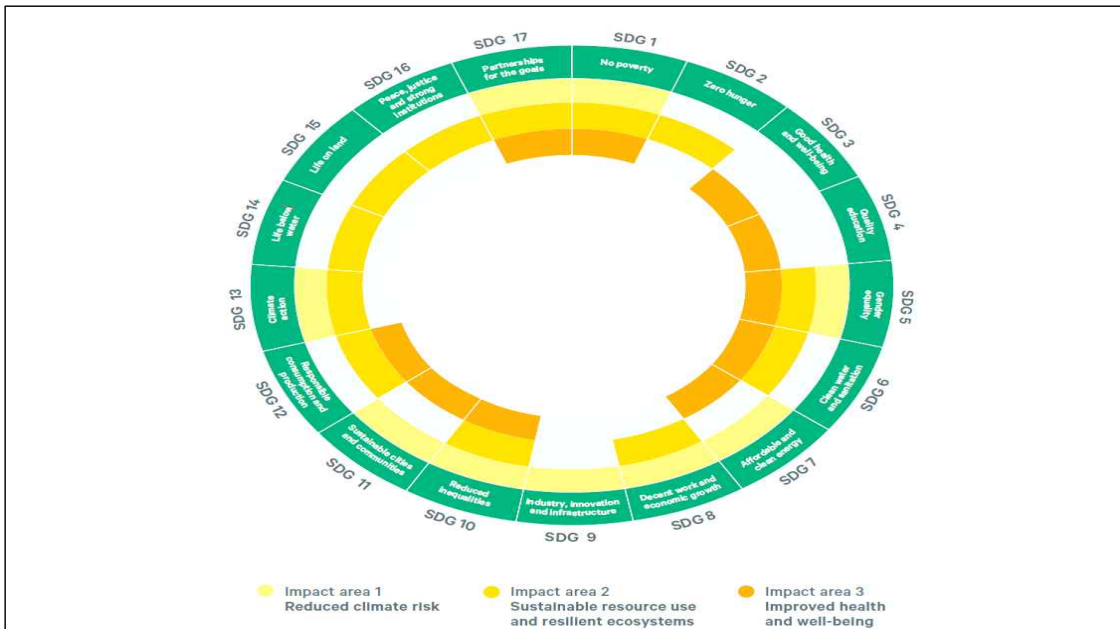
- **(설립목적과 미션)**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이하 SEI) 설립목적은 환경 분야에서 연구와 여러 조사를 수행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음. 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기술, 정책 및 관련 환경관리 기법을 마련하는데 있음.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의 수립과 성과를 평가와 관련 기법의 개발을 담당함
- **(권위와 전문성)**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스웨덴 의회가 1989년에 설립하였으며, 지난 35년간 연구기능과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함. 스톡홀름 선언을 계승하기 위해 인권과 복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호, 지속가능한 자원유지, 재해 위험, 기술 이전, 도시화,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계획을 제시함
- **(연구의 독립성)** SEI는 전세계의 많은 정부, 대학,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함. '23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120여 국가의 연구진 및 정부와 교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SEI가 수행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주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점검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SEI는 SDGs가 설정하고 있는 17개의 목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 그러한 17개의 SDGs 목표대상으로 3개의 SEI 전략적 방향(가치)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함. ① 기후 위험 감소, ②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과 탄력적인 생태계, ③건강과 웰빙 개선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17개의 SDGs를 재분류하여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함

<그림 III-2> SEI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영역



출처: SEI Strategy2020-2024: Knowledge for action(2020:p.9)

- (법인의 형태) SEI는 1989년 스웨덴 의회에서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23년 예산의 약 절반 이상은 스웨덴 정부의 예산이 아닌 외부의 예산으로 마련되고 있음.

- (SEI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SEI의 이사회 위원은 스웨덴 정부에서 임명하는 특성이 있음. 다만, SEI는 이사회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와 관리자가 포함되도록 구성함

- SEI는 과학자문위원회(SAC)를 설치하여 연구주제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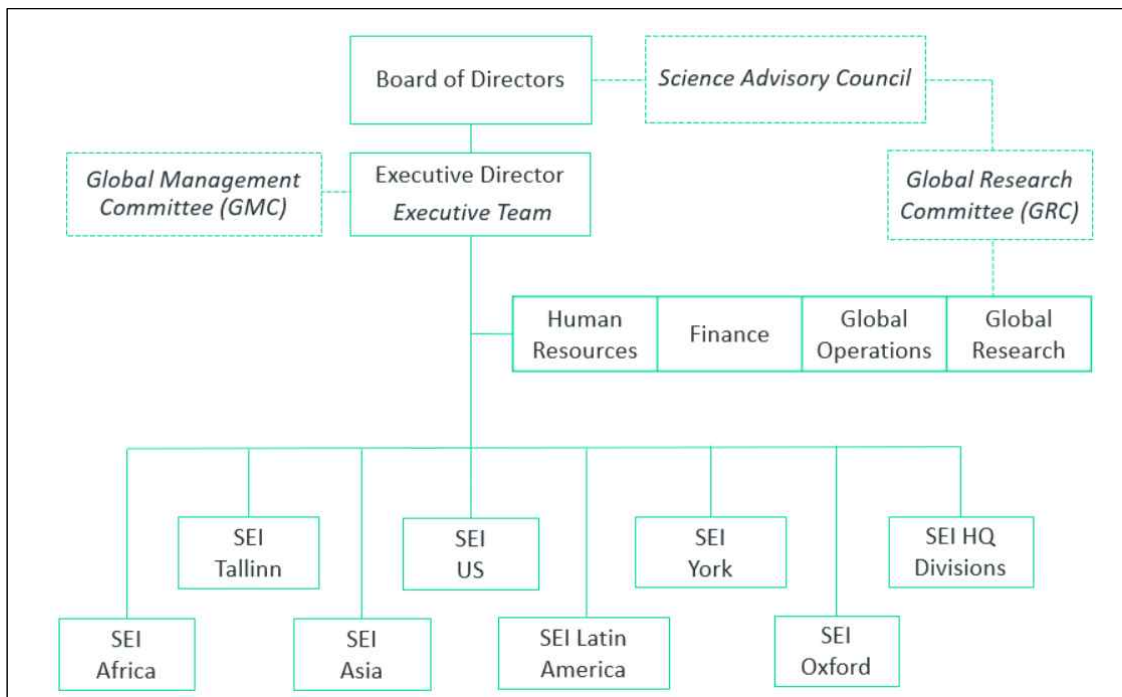
관한 자문을 제공함

- 과학자문위원회는 또한 SEI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일부 담당함

(2) 조직구조

- SEI는 스톡홀름(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방콕(태국), 보스턴, 데이비스, 시애틀(미국), 옥스퍼드, 요크(영국), 탈린(에스토니아), 나이로비(케냐), 보고타(콜롬비아)에 센터를 두고 있음

<그림 III-3> SEI의 조직도



출처: SEI 홈페이지 조직 정보(<https://www.sei.org/about-sei/organization/>)

- 각각의 사무소에서는 지역에 중요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 내 정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함. 예를 들어 SEI Asia는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이슈를 성별 및 사회적 형평성, 기후적응, 재해위험감소, 물부족 및 통합수자원 관리, 과도기 농업, 재생 에너지 및 도시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SEI Asia 방콕에 본사를 두고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참여적 접근 방식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정책개발과 정책수행을 지원함

(3) 기능 및 역할

-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 SEI는 글로벌 환경 및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이러한 프로젝트는 종종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NGO)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며, 협력하여 연구가 실제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정책 참여 및 자문 역할
 - SEI는 국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과학적 및 정책적 자문을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환경분야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전환되도록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함. 자문위원회 참여, 정책 브리핑 및 정책결정자와의 상담 등을 수행함
- 공공 참여 및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 SEI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함
 - 워크숍, 세미나, 자문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함. 참여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원함
- 교육 및 역량 강화
 - SEI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워크숍을 통해 정부 및 기타 조직 내에서 역량을 강화를 지원함
 - 환경 관리, 정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함
- 글로벌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 SEI는 여러 글로벌 연구센터 네트워크의 일원이며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함. 글로벌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제안과 제안권고를 제시함. 또한, 글로벌 차원의 환경 문제를 해결위한 협력을 촉진함

(4) 중점 연구분야와 성과

- SEI의 중점연구분야는 기후, 경제, 에너지, 성평등, 거버넌스, 건강, 토지, 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3년 3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세부 주제를 연구로 진행함

<표 III-3> SEI 연구주제에 관한 사항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기후	기후적응, 기후 정책, 기후 서비스, 재해 위험, 자원, 화석 연료, 완화, 수명이 짧은 기후 오염 물질
경제	행동과 선택, 생물경제학, 투자사업, 재정, 혁신, 공급망,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에너지	에너지 접근, 화석 연료, 가정용 에너지, 계획 및 모델링,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수송
성평등	적응, 행동과 선택, 재해 위험, 음식과 농업, 가정용 에너지, 재생 에너지, 위생
거버넌스	재원, 혁신, 참여, 공공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건강	도시, 기후 서비스, 재해 위험, 음식과 농업, 가정용 에너지, 오염, 위생, 웰빙
토지	도시, 생태계, 음식과 농업, 숲, 토지 이용
물	적응, 도시, 재해 위험, 음식과 농업, 계획 및 모델링, 위생, 수자원, 물-에너지-식품 넥서스

출처: SEI 홈페이지 연구주제에 관한 사항(<https://www.sei.org/topics/>)

○ SEI의 주요 성과

- SEI의 연구는 중국, 인도, 태국과 같은 국가의 대기질 정책과 기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를 제시함. PM2.5(초미세먼지)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SEI의 연구는 아시아 국가가 엄격한 대기 오염 기준을 선택하는데 기여함
- SEI의 LEAP(장기 에너지 대안 계획, 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시스템은 에너지 시스템과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모델링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도구를 제공함. LEAP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델링하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 국가들이 배출량 감축,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정보를 제공함. 예를 들어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와 기후전략을 수립하는 데 SEI의 LEAP을 활용하여 활용함

(5) 예산 운영 및 인력 규모

- ‘23년 기준 415백만불(US)의 SEI의 연구예산을 운영하고 있음. ‘18년 232백만불(US)에서 최근 급격하게 SEI의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정부,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함에 따라 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 다만, 연구·운영예산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의 예산이 117.1백만불(US)로 가장 많고, 스웨덴 기후기업부(Swedish Ministry of Climate and Enterprise)가 34백만불, EU가 24.4백만불, 스웨덴 연구위원회 22.1백만불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SEI)는 다양한 국가에 진출해 있는 사무소에 직원들을 고용함. 스톡홀름(스웨덴), 방콕(태국), 보스턴, 데이비스, 시애틀(이상 미국), 옥스퍼드와 요크(영국), 탈린(에스토니아), 나이로비(케냐), 보고타(콜롬비아)의 센터에 약 400명의 직원이 근무함. SEI는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제 간 연구와 정책분석을 수행함
 - (연구인력) SEI는 연구인력을 선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조원 인력으로 분류함
 - (데이터 분석 인력) 분석을 전담하는 인력을 정책 분석가와 데이터 분석가로 분류함. 특히, 데이터 분석가는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관리하고 분석함. 통계 도구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해석함
 - (법률 및 정책 전문가 그룹) 환경에 관한 정부 규정, 정책 및 국제 협약에 대한 법률 전문가와 지속가능발전에 정책 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전문가 그룹의 인력이 존재함
 - (행정관리 및 교류협력 인력) 조직·인사 전문가, 재정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SEI 내부운영과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됨

3)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 of Columbia University)

- 지구연구소는 물리학, 공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의 교수와 연구진이 지속가능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특히, 물리학, 대기과학, 여러 유형의 공학연구를 수행하여 기후변화 예측, 물자원 순환, 탈탄소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됨. 지구연구소는 과학적 증거와 모델링에 근거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제언, 정책결정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증인 및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 지구연구소는 1996년 컬럼비아대학의 기후대학의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부터 1억달러(US) 이상의 연구예산을 집행하는 연구소로 성장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대학부설의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큰 규모와 연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측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과 예측을 위한 모델링 개발에 강점이 있으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융합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지구연구소는 1996년에 컬럼비아대학의 기후대학(climate school)의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여러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또한, 지구연구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내리는 정책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분석결과와 미래예측 모델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구연구소는 학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Climatic School, Columbia Colleg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학위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함
- **(권위와 전문성)** 지구연구소는 1996년 설립이후 학제 간 연구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공학, 사회과학 연구를 수행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가별로 처한 위기상황(예: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등)을 주제로 집중연구결과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결

정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

- **(연구의 독립성)** 2013년 이후 약 49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음. 지구연구소는 학문적 경계를 넘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함. 학제 간 협력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학과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월간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안건을 의사결정 함. 지구연구소의 교수진, 연구진, 지원인력은 컬럼비아 대학의 교무처장이 임명함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지구연구소는 대학교의 부설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물리학, 환경과학, 여러 공학, 사회과학의 교수 및 박사급 연구진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토양, 물, 에너지,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특히, 지구연구소는 물리학 및 공학적인 연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강점이 있음
- **(법인의 형태)** 지구연구소는 컬럼비아대학의 부설연구소로서 초기 연구소의 운영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연구기금에 의존하여 운영하였으나, 점차 연구소의 규모와 학제간 연구의 확대가 증가되면서 학교 외부의 연구기금과 기부금을 활용한 연구가 확대된 속성이 존재함

(2) 조직구조

- **(조직구조)** 지구연구소는 연구소 아래 연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센터의 연구 분야와 시설의 특성에 고려하여 연구과제의 수행과 각정 활동을 운영하는 특성을 나타냄. 특히, 지구연구소는 라몽-도허티 지구 천문대(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를 비롯해서 기후와 생명 센터(Climate and Life Center), 컬럼비아 물 센터(Columbia Water Center) 등 20여 개의 하위 연구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함

<표 III-4> 지구연구소의 연구센터(예시)

연구센터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
기후와 생명 센터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에너지, 물, 거주지 등과 관련된 필수요인의 변화와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
컬럼비아 물센터	물 부족 위기에 대한 평가와 해결방안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함.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및 개발 모델을 설계하는 연구를 수행
지속가능 개발센터	지속가능발전 및 국제개발 분야에 필요한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센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토지사용 및 교통 계획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행
위해·위험 연구 센터	위해·위험에 관한 예측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과학연구를 수행하며,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 물리학, 사회과학 등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위해·위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수행

- **(주제별 연구사업의 수행)** 빅데이터 분석, 사회적 영향 평가, 경제 모델, 법적 평가함. 북극의 빙상 측정, 열대 우림에서 현장조사, 도시 고등학생의 배양에 공기 모니터, 방글라데시의 지진 위험, 남극 반도의 녹는 생태계, 미얀마의 보존, 푸에르토리코의 삼림 및 허드슨 강의 하수 연구 등을 수행함

(3) 기능 및 역할

-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참여 및 자문
 - 지구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및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과학적 및 정책적 자문을 제공함
 -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협력함. 지구연구소 소속된 교수진 및 연구진이 전문가 자문, 정책 브리핑 보고서 작성,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
-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 지구연구소는 기후 변화, 에너지 지속가능성,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함

- 교육기능: 지구연구소는 학생들이 환경공학과 사회과학을 배우고 응용 정책 및 관리학 분야를 배우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지식과 실무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교육 기능을 제공. 정부 및 여러 기관에서 다루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력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 지구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해 정부 기관, 비정부기구(NGO),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활동을 자주 개최함
 - 지구연구소는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 권고안으로 개발하여 직간접적으 정부와 공공부문의 결정에 영향력을 발생하는 접근을 취함
- 대중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 지구연구소는 대중 홍보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함. 연구결과를 전파하고 일반 시민과 소통하여 지속가능성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중 홍보를 추진하며,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의 인식개선 변화 활동을 추진함

(4) 중점 연구분야와 주요성과

- **(기후변화)** 기후 변화취약성, 지구 시스템 모델과 취약성 평가, 미래 기후변화 예측도구 개발 등 지구공학의 자연과학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예측결과와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별, 연구테마별 다수의 연구르 수행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 및 분석평가)** 빅데이터 분석, 사회적 영향 평가, 경제 모델, 법적 평가를 수행함. 예를 들어 북극의 빙상에 관한 측정과 데이터 수집, 열대 우림에서 현장 조사와 데이터 수집, 도시의 공기 모니터링, 지진 위험 측정모델, 남극 반도의 생태계 데이터 등 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평가를 수행함

- 지구연구소는 지구 탈탄소화, 미래 기후 모델링 및 적응, 지속 가능한 생활, 불안정한 지구, 거주가 가능한 지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과제와 관련 활동을 추진함

<표 III-5> 지구연구소의 연구분야 및 세부연구 주제 분류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지구 탈탄소화	에너지, 제조업, 운송, 농업용 토지 이용의 탈탄소화, 에너지 저장 개발, 에너지 절약
미래 기후 모델링 및 적응	기후 변화와 그 결과로 인한 정확한 예측을 결과를 도출하고, 기후 변화, 극한 사건에 대한 적응방안
지속 가능한 생활	도시화, 지속 가능한 개발, 투자 및 관리, 순환 경제, 평화와 안전
불안정한 지구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구호 및 준비
지구의 기본 특성	지구와 같은 행성이 어떻게 작동하며 거주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 지구연구소의 주요 성과
 - 지구연구소는 SDGs의 개발과 촉진에 긴밀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2016년 까지 지구연구소의 소장을 Jeffery Sachs¹⁰⁾는 유엔의 SDGs 중 기후행동 (SDG 13), 깨끗한 물(SDG 6),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SDG 7), 지속 가능한 도시(SDG 11)에 관한 목표와 지표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 SDGs 13에 관한 목표와 지표에 관한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구연구소의 라몽-도허티 지구 천문대 지구 온난화, 해양 순환, 빙하 용해 등에 관한 관측결과 등을 제시하여 기후 행동(SDGs 13)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

(5) 예산 운영 및 인력 규모

- 지구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가장 큰 대학 부설 연구소로 분류할 수 있음. 지구연구소는 700명 이상의 교수진, 연구원 및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박사급 연구인력이 약 500명 수준임
- 20개 이상의 연구센터(부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00명의 재학생과 2,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함 함. 진행중인 연구과제가 약 200개 이상이며, 20개 이상의 학과와 12개 학교의 제휴 및 지원을 수행하여 총

10)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과 반기문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함

연구사업 예산은 2013년 이래로 약 1억 달러(US) 이상 수준을 유지함¹¹⁾

4) 브루킹스연구소의 지속가능개발센터(CSD)

- CSD는 브루킹스연구소가 비교적 최근에 설치한 부설연구센터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SDGs가 실현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산과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
- CSD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를 연구하며, 글로벌경제와 개발프로그램의 일부로써 연구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와 정책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 CSD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연구과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의 정책개발과 지원활동을 담당하고 있어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지속가능발전센터(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SD)는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설연구센터로 2006년에 시작된 글로벌경제와 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Program)¹²⁾의 일부로 2020년에 센터가 설치됨. 북미 국가를 비롯한 G20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참여자와, UN,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지방정부의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의 실현을 위해 정책개발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권위와 전문성) 브루킹스연구소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 연구소이며 정부, 경제, 외교에 대한 정책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권위가 높으며 영향력이 높은 기관임. 브루킹스연구소의 CSD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적인 정책제안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브루킹스연구소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연구의 권위와 전문성이 높음
- (연구의 독립성) 지속가능발전센터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재정을 지원받으며, 글로벌경제와 개발프로그램의 일부로 사업이 운영됨. 글로벌경제

11)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 Five Year Strategic Plan 2019-2024: p.6

12)

와 개발프로그램은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인공지능협력포럼, 미래 인력 이니셔티브, 아프리카 성장 이니셔티브와 같은 연구협력 프로그램과 CSD센터, 보편교육센터를 운영함. CSD의 연구는 큰 틀에서 글로벌경제와 개발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수행됨¹³⁾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CSD는 기후변화, 성평등, 인권, 지속가능 재정, SDGs 이행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주제를 연구하고, 정책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2) 조직구조

- CSD는 브루킹스연구소에 설치된 18개 연구센터 중 하나로 고유한 연구 분야와 세부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함
- CSD는 브라운 교육 정책 센터, 아시아 정책연구 센터, 커뮤니티 향상 센터, 기술혁신센터, 보편교육센터, 건강정책센터, 규제/시장 센터, 세금 정책센터 등과 같은 고유한 연구 주제와 이슈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구센터로 설치되어 운영됨

(3) 기능 및 역할

- 브루킹스연구소의 CDS는 전문적인 정책연구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이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활동방안을 강구하는 하는 전략을 강조함. CSD는 핵심업무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개적 토론을 활성화하고, 세계의 정부, 전문가, 기업 등의 참여자가 활발한 교류를 이룰 수 있도록 3가지 접근법을 제시함
 - 연구 리더십(research leadership): 최신의 학술연구, 실천가능한 제안사항, 현실적인 정책권고 등을 혼합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 발생하도록 자극을 제공
 - 지식 허브(knowledge hub): 학계, 정책 입안자, 실무자 등 다양한 계층의

13)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 정책 및 조치. 글로벌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의 재개.

참여자들이 학제 간 전문성과 지식을 협업적으로 활용하는 풍토·분위(ethos) 형성. 전 세계의 전문가를 활용한 책의 출판에서부터 정책토론회 운영, 새로운 의견을 소개하는 팟캐스트(podcas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통매체를 활용

- 네트워크 촉진(Network catalyst): 전 세계의 다양한 리더와 혁신가 그룹의 네트워크 강화. 지역과 국가 국가수준의 노력이 글로벌 수준의 노력과 연계되도록 여러 유형의 격차(예: 경험, 전문성, 재정 등)를 메우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원

(4) 중점 연구분야 및 주요성과

- 브루킹스연구소의 CDS는 연구분야를 경제학 및 실증연구, 성평등,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과 재정지원, SDGs 이행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개발하고 민간부문과의 정합성을 도모함

<표 III-6> 브루킹스연구소 CSD의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지속가능발전 경제학 및 실증연구	분석 경제학 및 정량적 연구방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프레임워크,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역할과 협력관계에 관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과 성평등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글로벌 기업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기후 위기에서 성평등 이슈에 관한 연구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역에 기반한 데이터 연계와 학습 네트워크를 구성과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 세계의 많은 국가와 지방 도시가 자체적인 경제, 사회, 환경 전략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	공공 재정, 민간 재정, 자원 효율성의 주제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실천적 도구	SDGs의 실천가능한 정책 제안 개발, 민간기업이 SDGs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북 제공 등
민간부문과 글로벌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일치	세계수준의 지속가능발전과 민간기업 참여(일치)를 위한 새로운 연구 과제의 발굴 준비

출처: <https://www.brookings.edu/centers/center-for-sustainable-development/workstreams/>

○ CSD의 주요 성과

- CSD는 SDG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함. CSD는 각국이 SDG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와 분석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시함
- 2018년부터 CSD는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와함께 SDG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17개공간(17 Rooms) 이니셔티브를 제시하여 17개의 SDGs의 협력과 연계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함. 이러한 접근 방식은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SDGs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별 정책을 추진하는 실천방법으로 활용됨 (예, 캐나다, US 재단 등)

(5) 예산 운영 및 인력규모

- CSD의 연구사업 예산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음. 다만, 글로벌경제와 개발프로그램의 예산 중 일부를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CSD에 직원은 15명의 내부 연구원과 지원인력과 14명의 외부 전문가로 약 29명으로 구성됨

※ 참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문가의 명단을 확인하여 인력규모 산정함

5) SDG 혁신센터

- SDG 혁신센터(SDG Transformational Center)는 국가와 공공기관에 연구결과, SDG 이행에 관한 평가결과 및 데이터, 정책제안 사항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기구임
- SDG 혁신센터는 UN 회원국의 SDGs 이행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 등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임
- SDG 혁신센터는 SDG의 목표와 지표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UN SDG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조언과 국가 단위의 이행수준에 관한 결과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SDG 혁신센터는 단일한 조직이기보다는 SDG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관, 대학 등이 파트너십으로 연합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특성이 있음. 특히,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기관들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연구센터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SDG 혁신센터의 미션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SDG의 이행상황에 관한 모니터링과 평가, 이를 위한 SDG 지표와 관련한 데이터의 공유와 제공
 - SDG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교육훈련) 제공
 - SDG 이행평가에 근거한 정책대안과 실천적 처방 제안

(2) 조직구조

- (설립목적과 미션) SDG 혁신센터는 SDG연구실, 정책기술연구실, 대외협력실, 데이터조사평가실, 역량교육실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7> SDG 혁신센터 조직구조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경영기획실	- 센터장/총괄 책임자	-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 설정 및 리더십 제공.
	- 경영관리 전문가	- 파트너십 및 협력 관계에서 센터를 대표.
SDG연구실	- 수석 연구원	- SDG(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춘 기획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연구원	- 기후 변화, 빈곤, 보건 등 특정 주제별 분야전문가
	- 연구 보조원	
정책기술연구실	- 정책 전문가	- 정책 권고 제공.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 기술 전문가	- SDG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 제공
대외협력실	- 파트너십 팀	- 정부, 시민 사회, 기업과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관리
	- 시민참여지원 팀	- 공공 포럼 및 공공인식 제고 캠페인 운영
데이터조사 평가실	- 데이터 전문가	- SDG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평가/모니터링 전문가	- SDG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역량교육실	- 역량강화 전문가	- SDG 실행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 및 훈련 전문가	- 전문성 개발 및 역량 강화 워크숍 제공.
행정지원실	- 행정 직원	- 일상적인 운영 관리.
	- 사업 및 행정 관리자	- 사업 및 행정사무 관리.
재무기금실	- 재무 담당자	- 센터의 예산 관리 및 재무 보고
	- 기금 모금 팀	- 보조금 및 파트너십을 통한 외부 자금 확보.
미디어홍보실	- 홍보 담당자	- 미디어 홍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출판 팀	- 보고서, 정책 브리핑, 학술 논문 등의 제작 감독

출처: <https://sdgtransformationcenter.org/about>

(3) 기능 및 역할

- SDG 전환센터(SDG Transformation Center)는 정책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 국가별 정책자문 및 지원, SDG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역량강화, 공공에 대한 정보 및 지식제공,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담당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8> SDG 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기능	역할	예시
연구 및 혁신	-SDG 과제에 대한 학제 간 연구 수행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략 개발
정책 개발 및 자문	-SDG 이행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방안 제공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제공
모니터링 및 평가(M&E)	-SDGs 이행수준 모니터링 및 평가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SDG 지수 개발
역량 강화 및 교육	-SDG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훈련
대외협력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구축 및 SDGs 달성을 위한 협력 촉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도시들과 파트너십 형성
시민참여	-SDGs 통합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운영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 제공,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도의 개발	-재생가능 에너지 채택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도구 개발
정보 및 지식 공유	-대중을 향한 SDGs 성공 사례 정보제공 및 교훈 훈련	-성공적인 SDG 이니셔티브에 관한 사례 연구 출판

(4) 주요성과

- 주요성과
 - 2016년부터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에 SDG에 관한 공신력인 높은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함. 매년 SDG 지수를 발표하여 각국의 SDG 개선 순위를 발표하여 국제사회가 SDG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촉진하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
 - SDGs에 이행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틀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대시보드를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SDG 이행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

- 매년 UN의 회원국들의 SDGs 이행 수준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연간 30만회 이상 보고서가 활용됨

3. 국내 연구소 및 부설 센터 사례분석

1)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 한국환경연구원(KEI)는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정책영역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를 연구함. KE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개발과 지원기능, 정책사업의 수행기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
-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KEI의 사례는 연구기관의 역할, 기능, 구조, 예산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을 갖을 수 있어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한국환경연구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KEI의 미션은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높이는 데 있음
- **(권위와 전문성)** KEI는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 수립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수행하며, 정부의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기여함. 환경경제, 기후변화, 대기의 질, 물 관리, 자원 순환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함. 환경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통해 환경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보유함
- **(연구의 독립성)** KE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으로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연구관련 사업을 수행함. 다만, 출연금을 통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제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KEI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이행 방안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환경 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이 비교적 높음. 다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여러 정책문제와 이슈 중에서 KEI는 환경 분야에 국한하여 전문성을 보유하는 특성이 존재함

(2) 조직구조

- KEI는 2실 4본부 체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3개의 연구본부와 평가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1본부로 구성됨
- KEI의 연구본부 내에 녹색전환연구, 자원순환연구, 환경보건연구, 기후 대기연구, 탄소중립연구, 대기환경연구, 국가기후위기적응, 통합물관리 연구, 환경계획연구, 자연환경연구 등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환경 관련 여러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림 Ⅲ-4> KEI 조직도



(3) 기능 및 역할

- KE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연구과제의 수행과 각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책연구 기관으로서의 기능역할을 수행함
- (환경분야에 관한 정책연구) 기후변화·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폭넓은 환경분야의 정책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함
- (정책제안 및 자문) 정부,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하여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함.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환경분야의 정책문제에 관한 제안과 자문을 제공함
- (자료의 공유) KEI 홈페이지와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연구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함. 또한, 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제공함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환경정책 포럼과 교육을 제공하함.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 관한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하여 공무원, 기업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와 환경변화의 방향에 관한 교육기능을 담당함
- (공공데이터 개방) KEI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함

(4) 중점 연구분야

- KEI가 수행하는 연구는 환경정책 분야에 폭넓게 수행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연구사업도 수행함. KEI의 연구분야와 연구주제를 정리하면 다음 같음

<표 III-9> KEI의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주제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환경경제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 통계 및 모형 개발, 환경재정규제에 관한 연구,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 정책 개발, 청정생산 및 녹색소비에 관한 연구,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연구분야	세부 연구주제
환경평가	환경평가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평가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환경현황 분석, 환경평가 성과분석 및 통계구축,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예측·저감 기법의 개발, 전략환경평가 및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평가 수행에 관한 연구, 환경평가기법 및 환경평가지원을 위한 메뉴얼 등의 개발
기후변화·대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리정책 개발, 저탄소 소비및생산 관련분석 모형 개발·운영,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및 적응에 관한연구,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구, 한반도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분석, 기후변화적응도구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대기관리 정책 및 기법 연구
물환경	국가 물환경 중장기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수질 및 수생태,미량유해물질,퇴적물 등 담수 및 연안 물환경관리에 관한 연구, 상하수도 서비스 등 물산업에 관한 연구, 국제 물관리 협력 및 개발에 관한 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환경관리	국토환경의 관리·계획에 관한 연구, 자연생태계·생물다양성의 유지·복원에 관한 연구, 자연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토양·지하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연구
자원순환	자원순환 정책 및 관리 연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자원순환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
환경보건	환경보건 연구, 위해성평가 및 기법 연구, 건강영향평가 및 기법 연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리정책 연구, 화학물질의 국제적 규제대응 연구
국제협력	지구환경 및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 경제·사회·환경 각 부문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연구, 지역 및 남북 환경협력 대응정책 연구,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정책 연구, 개발도상국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출처: KEI(https://www.kei.re.kr/mislibList.es?mid=a10201010000&proj_div=a002)

(5) 예산 운영 및 인력규모

- KEI의 총 예산은 약 474억원이며(수입기준)이 이중 정부지원에 의한 예산(수입)이 전체예산의 약 91.2%를 차지하는 약 433억원인 것으로 집계됨(KEI 수입지출현황, 2024년 4월 기준).
- KEI의 출연금으로 고유사업(연구사업) 수행과 기관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 받는데, '24년 기관의 전체예산 약 474억원 중에서 217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214억원은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수입을 통해서 연구활동, 네트워크활동, 평가활동 등을 수행함. KEI의 예산은 고유사업예산(출연금)과 사업수입예산이 비

슷한 수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KEI가 환경정책과 관련된 고유연구의 수행과 함께 여러 유형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냄

- KEI는 '24년 3월 현재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정원은 229명이며, 이중 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 정원은 139명으로 구성됨

2)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지구연구소와 유사한 형태로 대학교의 부설연구소로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폭넓게 연구함. 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정책영역과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연구영역은 연계성이 존재함
-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추진하는 연구과제는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등이 있으며, 환경분야의 정책을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지속발전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이론연구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연구를 수행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지속가능발전연구소(ISD)는 2009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교육-실천을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설립한 연구기관임. ISD는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인재육성, 기술적용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 아시아·세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설정함
- (권위와 전문성) ISD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전공의 교수진, 연구진이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소속을 두도록 운영함. 보건대학원, 자연과학대학, 환경대학원, 공학전문대학원, 생활과학대학 등 관련된 전공의 교수진과 연구진이 연구센터의 구성원으로서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관련된 교육을 수행함
- (연구의 독립성) 서울대학교가 설치한 연구소 연구분야와 세부주제의 선정이 교수와 연구진에 의해서 결정되고 연구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대학 내 여러 관련 전공의 교수와 연구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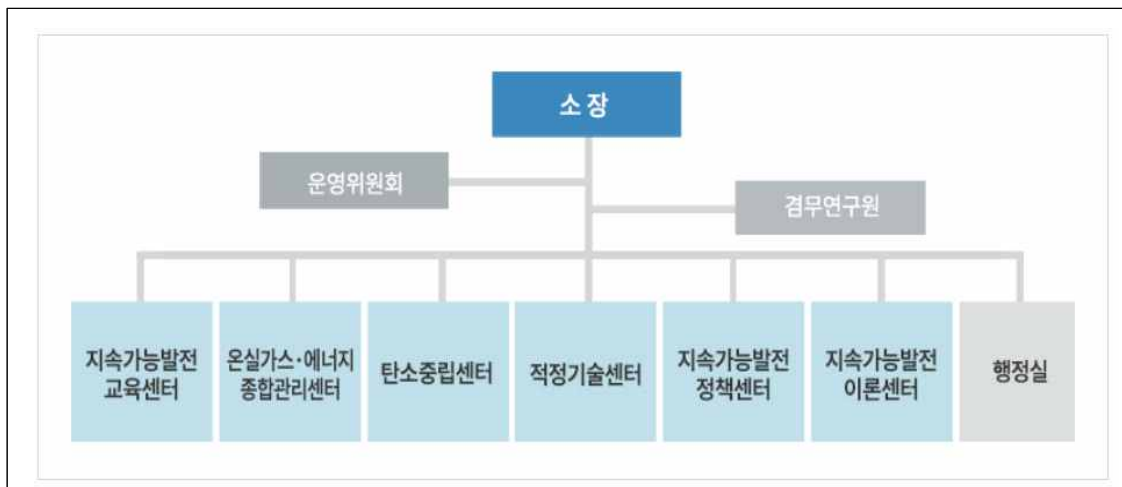
연구프로젝트를 연구의 목적에 충실하게 수행하는 특징이 있음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ISD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연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등을 연구하고 있음. 연구소의 중심적인 연구내용이 대부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과 교육으로 구성됨

(2) 조직구조

- ISD는 연구소 내에 6개의 하위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분야별 연구와 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함

<그림 III-5> ISD 조직도



출처: <https://isd.snu.ac.kr/isd/Organization.php>

(3) 기능 및 역할

- IDS는 서울대학교의 부설연구소로서 연구센터별로 고유한 연구주제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지속가능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리더십프로그램과 공공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함
- (연구 및 조사기능) IS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금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 연구 기간은 1년 이내의 단년도 연구에서부터 3년 이상의 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함. 연구주제는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부터 생태계 변화, 환경관리 기법개발 등 공학적인 분야까지 연구를 수행함

-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이수과정)과 인턴십과 같은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함. 특히,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학부생 대상으로 전공에 제한 없이 교과목을 수강하면 그린리더십 인증서를 수령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
- (토론회 및 인식개선) 서울대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론회(집담회) 및 교육 활동 등을 함께 실천함
- (정책제안과 기술자문) 개발도상국을 위해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제안함. 국내·외의 다른 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활동을 수행함. 이러한 활동은 국제개발협력(ODA)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

(4) 중점 연구분야

- ISD는 센터를 구분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개발도상국에 관한 정책 제안 및 기술제안 등을 수행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10> ISD의 중점연구 및 주요업무

센터구분	연구주제 및 주요업무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 그린 리더십 교과과정 운영 - 지속가능발전 교육관련 연구 기획 및 수행
온실가스/에너지 종합관리센터	- 서울대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감축 관리 - 학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지원
탄소중립센터	-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연구기획 및 지원 - 다학제간 연구과제 개발 지원
적정기술센터	- 적정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통합적, 학제적 연구 - 적정기술과 관련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구제안/정책개발 연구
지속가능발전정책센터	- 지속가능성집담회(TOSS)운영 - 지속가능발전 정책관련연구 기획 및 수행
지속가능발전이론센터	- 연구소 이론적 연구과제 운영

출처: <https://isd.snu.ac.kr/isd/Organization.php>

(5) 예산 운영 및 인력규모

- ISD의 정확한 구성원 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센터마다 다수의 교수, 연구원, 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행함
- ISD의 예산과 결산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정보가 제한적임¹⁴⁾ 연간연구사업, 연구원 인건비 및 각종 경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연구센터(KIPF)·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KIPA)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연구센터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연구주제 중 일부만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음. 두 연구기관의 연구센터는 기관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사업과 관련 활동은 다소 제한적임
- 다만, 두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이 관장하는 법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센터를 연구원의 부설연구센터 운영하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존재함
- 향후,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를 기존에 존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경우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발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함

(1) 설립형태 및 위상

- (설립목적과 미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는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관련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한국행정연구원(KIPA)는 행정체계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며 행정체계와 제도 등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4) 출처: 서울대학교 '23년 법인회계결산공시

- **(권위와 전문성)** KIPF와 KIPA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설립목적에서 명시한 정책문제와 행정관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권위와 전문성을 보유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과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분야별 연구를 수행함
- **(연구의 독립성)** KIPF와 KIPA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분야와 국가 행정체제와 제도 등에 관한 연구주제를 비교적 독립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함. 다만, 출연금을 통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주제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중심성)** KIPF와 KIPA는 핵심 연구주제 중 일부(예: 갈등관리, 거버넌스, 투명성 등)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음. 다만, 핵심연구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을 목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국내의 정책문제와 행정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직구조 및 연구센터설치

- KIPF와 KIPA는 기관의 고유목적에 충실하도록 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KIPF는 조세정책연구, 세법연구, 세정연구, 재정지출분석 등 조세재정 정책과 운영에 관한 세부 주제별로 연구센터를 운영함. KIPA의 경우 행정혁신연구, 정부조직디자인연구, 재난안전연구, 규제정책연구, 정부업무평가연구 등 조직·인사행정, 정부업무평가, 재난안전, 규제비용편익 분석 등과 관련하여 연구조직구조를 구성함

<그림 III-6> KIPF 조직도



출처: https://www.kipf.re.kr/kor/About_Organizatio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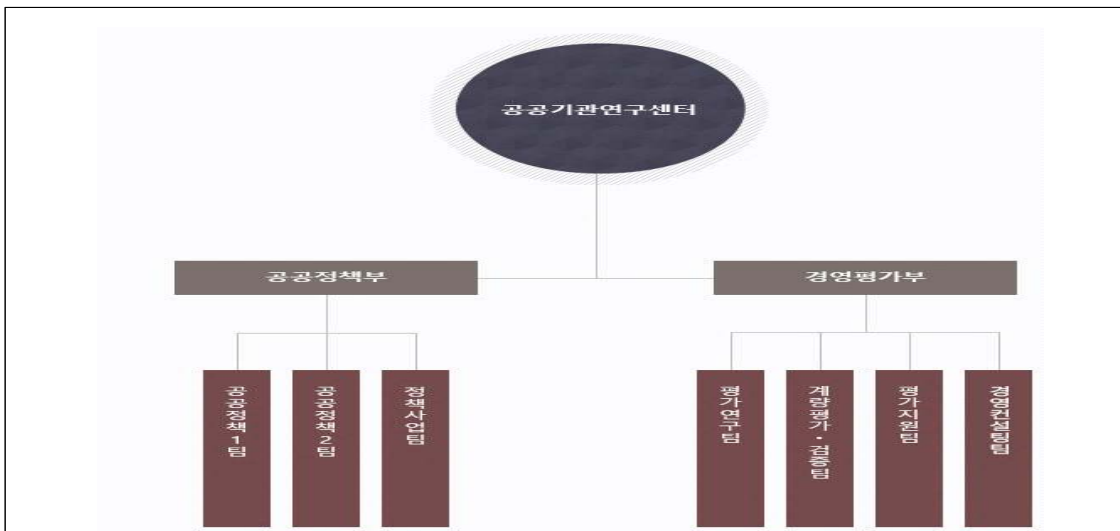
<그림 III-7> KIPA 조직도



출처: https://www.kipf.re.kr/kor/About_Organization.do

- KIPF와 KIPA 두 기관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기관의 핵심연구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두 기관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아 전문기관으로서 부설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KIPF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연구센터를 KIPF 내의 부설연구센터로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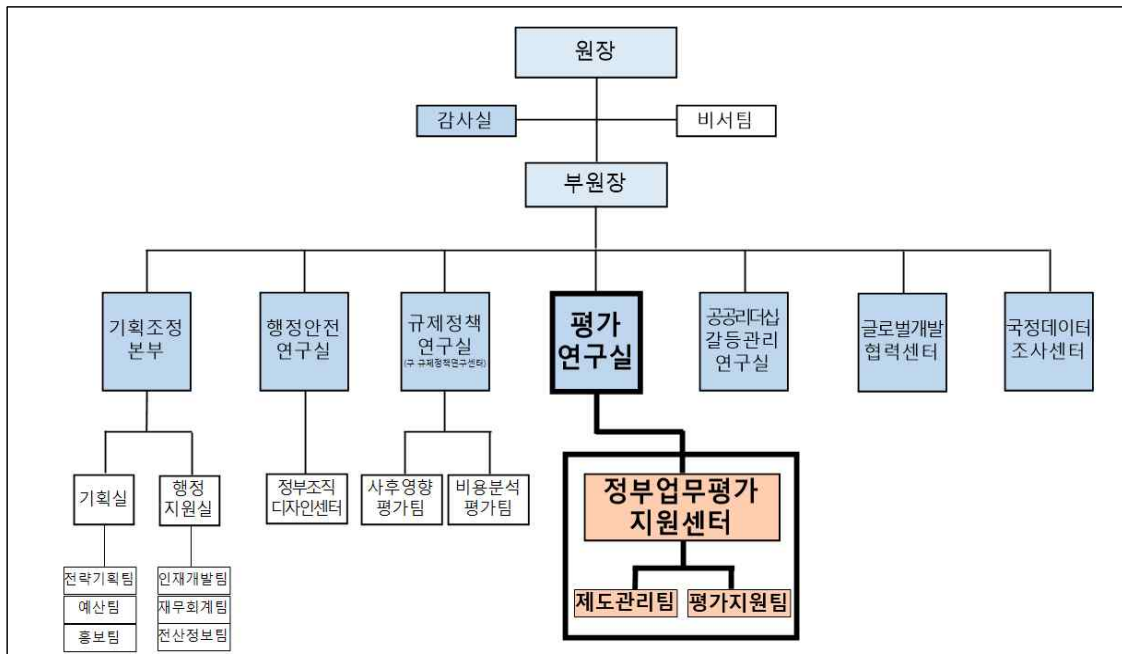
<그림 III-8> KIPF의 공공기관연구센터



출처: https://www.kipf.re.kr/kor/About_Organization.do

- KIPA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를 KIPA의 부설 연구센터로 설치하고 운영함.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는 다음과 기능을 수행함
 - 정부업무평가 개선방안 연구,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관리
 -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특정평가 세부지침 수립 지원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심층점검
 - 중앙행정기관 개별평가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신설평가 타당성 분석 등) 지원
 - 개별평가 심층분석 및 지표분석 지원
 - 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도화 지원
 - 국정 주요 현안 및 다부처 관련 정책분석
 - 각종 평가제도 시행계획, 평가결과 등 사전 검토
 - 정부업무평가 평가단 운영 지원
 - 정부업무평가포럼 등 각종 평가 관련 행사 개최

<그림 III-9> KIPA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출처: 공공기관연구센터 설명자료(2023)

(3)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설치사례

-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의 관리정책,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와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함.

- ‘10 공공기관운영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KIPF 내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설치함
- (연구센터 설치의 근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제27조의 “전문기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와 평가 관련된 연구·평가사업을 수행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예산·인력 현황

-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으로 현재 14년차 공공기관연구사업으로 운영됨
- (예산) 총 10.1억, 사업 인건비 2.0억(19.8%), 외부용역 및 분담금 2.1억 (20.8%)

○ 2023년 12월 현재 공공정책부, 경영평가부 2개 부가 운영되고 있음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1명 포함 총 6명
- 공공정책부(3개 팀, 총 23명): 부소장 1명, 공공정책1팀(7명), 공공정책2팀(7명), 정책사업팀(8명)
- 경영평가부(4개 팀, 총 29명): 부소장 1명, 행정원 1명, 평가연구팀(8명), 계량평가·검증팀(8명), 평가지원팀(5명), 경영컨설팅팀(6명)

<표 III-11>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주요사업('23년 기준)

주요사업	내용	예산
국제협력사업	OECD 등 국제기구 활동과 정책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사례 공유 및 해외전문가들과의 경험·의견 교환	1.45억 (14.4%)
공공기관컨설팅	공공기관별 컨설팅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지원	2.5억 (24.7%)
공공경제	분기별 「공공경제」 발간	1.14억 (11.3%)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0.53억 (5.2%)
공공기관 네트워크 및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관련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및 전문가,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	0.67억 (6.6%)
공공기관 입사수기공모	공공기관 입사 우수사례 발굴 및 공공기관 인력운용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0.16억 (1.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설계 및 정책지원	0.1억(1.0%)
기타	공공기관연구센터 총괄업무 및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추진을 위한 다양한 중·단기 정책연구 수행	3.55억 (35.1%)

출처: 공공기관연구센터 설명자료(2023)

4) KIPA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치 사례

-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20년 6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함
 - 국무총리-정부업무평가위원 간 간담회(' 20.06.05.) 이후 본격 추진
 - 정부예산 최종 편성(' 20.12., 16.38억원)
 - ' 21-' 23년 위탁사업기관 공모 : 한국행정연구원 선정(' 21.01.)

- 신규인력 선발 완료(' 21.03.)
-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 21.04.01.)
- ' 24-' 26년 위탁사업기관 공모 : 한국행정연구원 선정(' 23.12.)

○ (연구센터 설치의 근거) KIPA는 2001년 평가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직접적인 근거로서 다소 미흡하지만 권한 또는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를 부설 센터로 설치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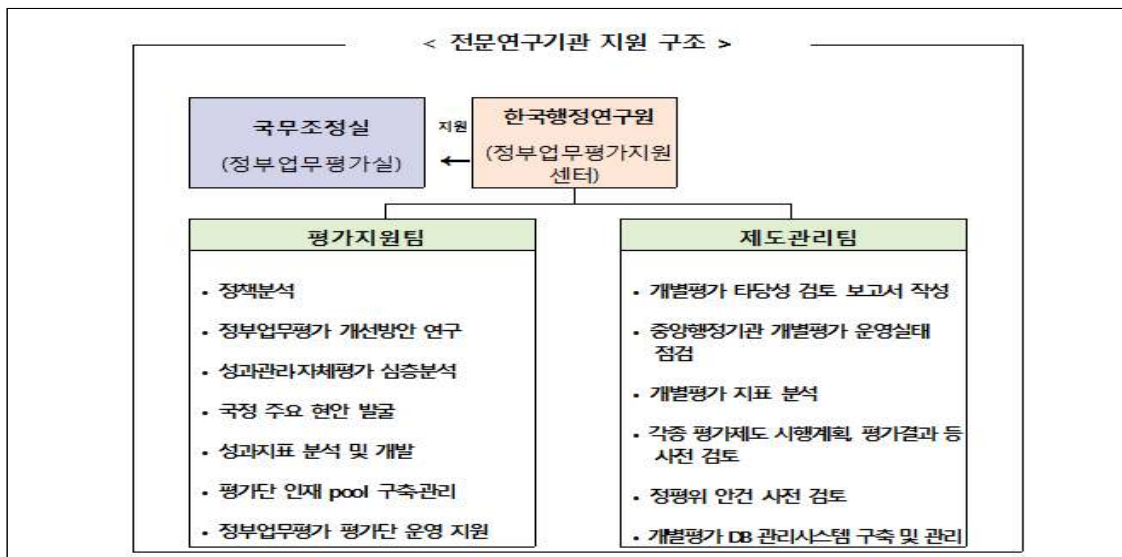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항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KIPA의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는 현재 2개 팀(제도관리팀, 평가지원팀)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분장함

<그림 III-10>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지원 구조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명자료(2024)

4. 사례분석의 시사점

- 본 연구는 8개의 국내·외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립형태, 주요기능, 연구 독립성, 연구분야와 세부주제, 조직 및 예산의 구성, 인력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였음
- 사례분석을 통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과 대안탐색이 필요한 내용을 시사점으로 제시함

1) 사례조사의 요약

-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연구기관의 설립형태, 주요기능, 연구분야, 예산 규모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III-12> 사례조사의 요약

사례조사 대상	설립형태	주요기능	연구분야	예산규모 및 구성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 (IISS)	독립된 비영리기관	연구 및 교육, 정책 참여 및 자문,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출판물 발간 및 정보·지식 전파	경제법과 정책, 에너지, 회복력, 진행 상황 추적, 물 관리	46백만달러(23년), 여러 국가, 국제기구로부터 연구예산 및 기부금 지원(270명 수준)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	의회가 설치(준공공기관)	연구 및 개발, 정책 참여 및 자문 역할, 공공 참여 및 이해관계자 참여촉진, 교육 및 역량 강화,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	기후, 경제, 에너지, 성평등, 거버넌스, 건강, 토지, 물	415백만달러(23년), 스웨덴 정부 등이 예산 약50% 이상지원, 국제기구 및 타국가 연구기금으로 구성(400명 수준)
컬럼비아대학교 지구연구소(Earth Institute of Columbia)	대학교의 부설기관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정책개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지구 탈탄소화,미래 기후 모델링, 지속 가능한 생활, 불안정한	약 1억달러(23년), 정부, 국제기구, 연구기금, 기부금 등 다양한 (700명 수준)

사례조사 대상	설립형태	주요기능	연구분야	예산규모 및 구성
University)		교육기능,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홍보	지구, 지구의 기본 특성	
브루킹스연구 소의 지속가능발전 센터(CSD)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연구 리더십, 지식 허브, 네트워크 촉진	지속가능 경제, 성평등, 재정지원, SDGs 이행 도구개발, 민간부문 변화	예산정보 비공개 (29명 수준)
EU 지속가능발전 관측센터 (EU SDO)				
한국환경연구 원(Korea Environment Institute)	독립된 연구원 (출연(연))	환경분야 정책연구, 정책제안 및 자문, 자료의 공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경제, 환경평가, 기후변화·대기,물 환경,국토환경관 리, 자원순환,환경보 건, 국제협력	474억원 중 정부예산 433억원 (229명 수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연구소(Institut 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대학교 부설기관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토론회 및 인식개선, 정책제안과 기술자문	지속가능발전교 육, 온실 가스/에너지 관리, 탄소중립, 적정기술, 지속가능발전정 책 및 이론	예산정보 비공개 (인력규모 비공개)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공공연구센터 (KIPF)·한국행 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 (KIPA)	연구기관 부설기관(연구센 터설치/운영사례)	정책연구, 정책제안 및 자문, 자료의 공유,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공공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으로 사무를 위탁받아 연구 및 지원기능	-KIPF 약10억(연) (약 52명) KIPA 15억(연) (약 13명)

○ (연구기관 설립형태) 사례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제안과 정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법인형태는 독립된 연구기관(비영리법인, 준공공기관), 연구기관의 부설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의 연구기관이 보편적임

- **(연구기관 주요기능)** 연구기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조사와 연구, 교육과 훈련, 네트워크 형성, 데이터의 생성과 공유, 홍보와 소통, 공공의 참여와 변화촉진, 출판물(예: 서적, 논문, 소식지 등)의 발행, 정책자문과 기술자문, 위원회 참여와 정책변화를 여론 형성기능이 확인됨
- **(연구기관 독립성)** 사례분석에서 연구기관은 연구 분야와 주제의 선정에서 상당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받아 운영되는 공통점이 확인됨. 특히, IISS와 같은 기관은 높은 재정독립성에 기초하여 연구수행과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독립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국내 출연(연)의 경우 고유사업 이외의 연구사업에서는 발주기관(예: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요청하는 연구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주제의 선택과 관련한 독립성이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연구분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주제가 기관별로 다양하게 설정된 점이 확인됨.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영역이 광범위하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제를 전체를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기 곤란함

2) 사례분석의 시사점

(1) 설립모델의 상대적 장·단점 분석 필요성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연구형, 대학부설형, 연구기관부설형, 혼합모델형으로 연구기관의 모델(법인성격)을 달리하여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의 설정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적절한 모델별로 강·약점을 판단한 할 수 기준(예: 연구전문성,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 정보수집과 환산 등)을 설정하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가장 적절한 설립모델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단기적 접근과 장기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설립모델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제시된 기관은 현재 상태를 기술하였으나, 해당 연구기관이 설립의 초기 시점에는 연구역량과 조직·인력·예산 규모가 현재 상태와 달리 미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단기적인 모습과 장기적인 발전모습을 고려하여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접근도 필요함

(2) 위원회 정책형성과 조정을 위한 지원기능에 관한 특수성 고려

-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 대상인 기관들은 연구를 통해 주어진 특정 영역의 정책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설립된 특성이 강하며,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속성이 나타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경우 정책조정과 국가계획의 실천수준을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구센터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연구센터의 기능·부서의 설계가 필요함

(3) 순수연구기능과 위원회 지원기능의 조화방안 반영

- 사례분석에서 연구기관들은 제3자적 관점에서 정책제언과 자문을 수행하는 특성이 존재함. 즉, 정부와 국제기구의 결정에 조언과 자문을 제시하여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하지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목적은 순수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가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함
- 정책·연구기능과 위원회 지원기능으로 크게 2개의 축을 구분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업무분장을 조화롭게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함.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설치된 연구센터들의 연구기능과 지원기능을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기능이 구성된 점 참고 필요

(4) 연구센터의 핵심 연구분야와 협력(협업)분야를 구분하여 설정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볼 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정책 및 제도연구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각의 연구기관은 핵심연구 분야와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와 연구관련 사업을 수행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연구분야 및 주제의 선정과 함께 협력·협업을 통해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 연구분야와 주제를 연구센터 설립단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연구센터의 고유한 전문성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

(6) 지속가능발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종합적 관리기능

- 국내·외 사례분석에서 각각의 연구기관은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됨.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에서 이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연계하는 기능은 모든 기관에서 부재한 것으로 확인됨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기획·조정예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학제연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정보의 종합적 수집과 관리를 연구센터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종합적 관리기능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갖는 차별성 및 강점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제4장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성

- 제1절 행·재정적 효과성 분석 개요
- 제2절 델파이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IV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성

1. 행·재정적 효과성 분석 개요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앞선 장들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연구기관을 조사·비교 분석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봄
-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시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유사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연구기관의 현황을 분석함. 이때, 각 기관별 설립 형태와 고유 기능, 그리고 핵심 연구 분야의 성격과 범위를 통해 주요 업무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함
-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 분석하는 작업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운영 전략 수립에도 유용한 정보도 사용될 수 있음
- 다만, 연구센터 등의 어떠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하지만,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칭)는 설립되지 않았으며, 당연하게도 연구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
 - 실존하는 자료의 분석을 통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 측정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를 “예측” 하는데 초점을 둠

2) 연구 수행 방법

(1) 델파이 조사를 통한 효과성 예측

가. 델파이 조사 개요

- 델파이 조사 방법의 원형은 1950년대 미국 정부 후원 군사 프로젝트를 위해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노만 달키(Norman Dalkey)에 의해 개발. 달키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소련 전략 기획자의 관점에서 최적의 미국 산업 타겟 시스템을 선택하고, 군량품 생산을 목표치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A-폭탄의 수를 추정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 (Dalkey & Helmer, 1963)
- 델파이 조사 방법은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통찰과 관점을 얻기 위한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하도록 개발됨. 이는 정책의 내용과 실천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함. 일반적으로, 이 기법은 “여러 강력한 질문서와 관리된 의견 피드백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견 합의를 얻는 절차”로 여겨짐 (Dalkey & Helmer, 1963).
- 델파이 조사 방법은 전문가들 사이의 구조화된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주제나 주제에 대한 합의된 관점을 수집하고, 이를 번역하거나 특정 맥락에서의 결정에 활용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 (Birdsall, 2004; Dalkey & Helmer, 1963)
- 델파이 조사 방법의 구조는 상호 작용하는 그룹의 긍정적인 특성(여러 정보 출처에서의 지식, 창의적인 종합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사회적, 개인적 및 정치적 갈등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 방법은 그룹 또는 위원회 회의에 포함될 수 없는(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에 참여하기 어려움) 많은 참여자들의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며, 지리적으로 분산된 회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Rowe and Wright, 1999)
- Rowe and Wright(1999)는 고전 델파이 방법을 네 가지 주요 특징으로 정의함
 - 델파이 참여자의 익명성: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다른 그룹 구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결정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가치에 따라

평가됨. 참여하는 전문가는 서로가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으며 상호 간의 직접적 접촉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이는 대면 토론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됨(이종성, 2001)

- 반복: 델파이 조사는 최소 2회 이상 설문 등의 형식으로 진행됨. 참여자들에게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때,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통제된 피드백: 다른 참여자들의 관점을 참여자들에게 알려주며, 델파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집단 응답의 통계적 집계: 델파이 조사를 통한 데이터는 정성적 분석 뿐 아니라 정량적 분석과 해석이 가능함
- 델파이는 통계적이거나 모델 기반 절차를 도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역사적/경제적/기술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순수한 모델 기반 통계적 방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판단 및 예측 상황에서 인간 판단 입력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음(Rowe & Wright, 199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 및 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행정적, 재정적 효과를 예측하는데 있음
 - 하지만, 아직 설립되지 않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 따라서, 이는 역사적/경제적/기술적 데이터가 부족하여 순수한 모델 기반 통계적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들의 통찰과 관점을 얻을 수 있는 델파이 조사 방법의 적용이 적합한 경우라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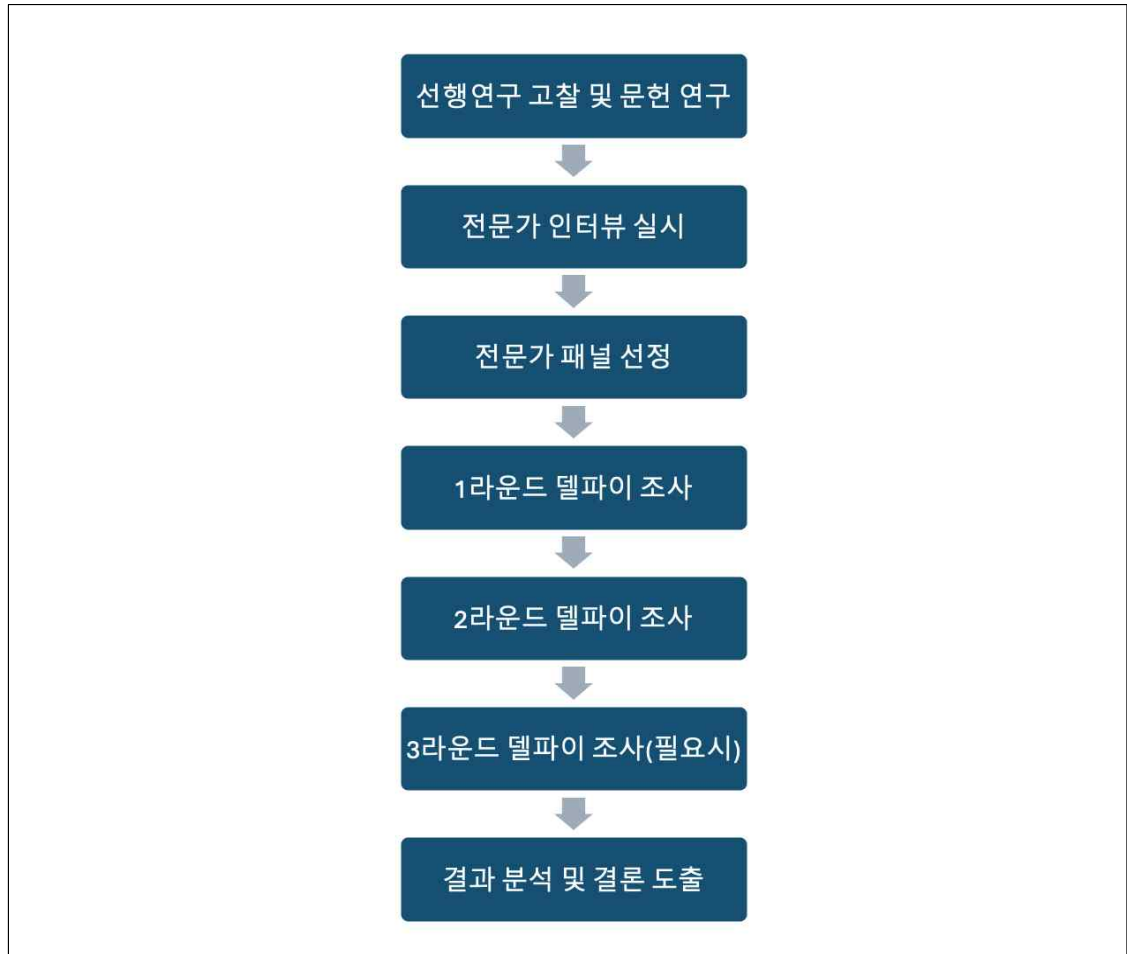
나. 델파이 조사 절차

-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적인 방법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조사 절차를 수행하게 됨
- 초기 질문서 개발: 보통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질문은 연구 문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토록 한 후 자료를 수집하게 됨. 다만, 연구의 목적과 델파이 조사 형태 등에 따라 1라운드 델파이 조사에서도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음

-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 선정: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임. 각 전문가는 질문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익명성이 유지되어 다른 참여자들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1라운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라운드의 결과를 분석하여 모든 참여자(전문가)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이는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의견을 재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
 - 추가 라운드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 연구의 목적 등에 따라 2라운드 또는 3라운드의 추가 델파이 라운드를 실시. 대부분의 경우에 3라운드 이내에서 마무리되지만,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라운드 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 각 델파이 라운드 결과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의 도달: 델파이 조사의 목표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거나, 이론적 포화에 도달하는 데 있음. 합의가 도달될 때까지 또는 충분한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델파이 라운드를 반복하게 됨
 - 결과 분석 및 보고: 모든 라운드가 완료된 후, 연구자는 각 델파이 라운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요약하고 결론(정책적 시사점 등)을 내리며,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성을 예측(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델파이 조사 절차를 수행함
- 먼저,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법령 분석을 포함)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효과성에 대한 일반적 배경 및 정보를 정리함
 -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질문지 항목 및 내용을 구성함
 -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고, 1라운드 델파이 조사를 실시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라운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완성

- 1라운드부터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그림 IV-1> 델파이 조사 절차



출처: 저자 작성

다. 델파이 조사 방법론의 강점과 한계점

○ 델파이 조사 방법론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 델파이 조사는 연구 목적에 따른 유연성과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많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됨
-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며, 특히 불확실성이 큰 문제에 대해 인간 판단을 통해 합의된 결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함
- 델파이 조사는 참여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압박이나 개인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델파이 조사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질문서를 배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델파이 조사 방법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전문가 패널의 선정과 설문조사 설계, 응답에 대한 분석에 유의해야 함
- 참여자들의 익명성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함. 예를 들어, 익명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왜곡할 수 있음.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설문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델파이 조사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경향이 반영될 수 있는데, 특히 질적 데이터의 경우 주관적 해석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음
-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의 판단(의견)을 통해 합의된 결정을 도출하는데 유용함. 하지만, 이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는 유용한 반면, 일반적인 패턴이나 법칙을 도출하는 데는 제한이 존재
- 델파이 조사에서는 라운드 수가 많아질수록 참여자들의 응답률이 감소할 여지가 큼. 이는 합의에 필요한 피드백 정보 수집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델파이 조사는 여러 라운드를 거치게 되며, 각 라운드는 질문 작성, 배포,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을 필요로 함.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델파이 조사 방법 및 분석 결과

1) 델파이 조사 방법 및 과정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구성

- 델파이 조사 방법은 크게 합의 델파이, 규범 델파이, 정책 델파이로 구분됨(이종성, 2001)
 - 이들의 구분은 이용 유형, 문제가 정의된 정도, 의사교환 과정,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표 IV-1> 델파이 조사 방법 유형

델파이 유형	이용 유형	적합한 문제	의사교환과정	패널 성격
합의	탐구형	잘 정의된 문제	단일 모형	동일한 전문성
규범	규범형	잘 정의된 문제	대안 모형	상이한 전문성
정책	규범형	정의되지 않은 문제	갈등 모형	전문가 없음

자료: 이종성(2001: 27)

-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선행연구, 법령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및 구성을 결정함
- 본 연구의 델파이 유형은 합의 델파이로써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의 질문 유형은 개방형 질문을 포함함
 -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의 통합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1라운드 설문지의 개방형 질문은 법령 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최대한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효과를 예측(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의와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하위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아직 설립 이전이며, 당연히 센터의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어떠한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어떠한 주요 기능을 수행해야할지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형태와 주요 (잠재적)기능 자체를 개방형 질문으로 묻는다면 전문가 패널에 따라 너무 상이한 응답이 예상되며, 이는 하위요소의 범위 또한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델파이 조사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설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형태와 주요 기능을 법령분석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폐쇄형 질문을 설문의 주요 구성 요소로 정함
 - 질문은 리커트(likert)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함
- 법령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설립 및 운영 형태)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표 IV-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별 특징 검토

조직구성안	전문성/연구분야	독립성	네트워킹	재원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	· 지속위 정책지원 및 연구 전담	· 독립성 높음 (연구주제 및 정책보고서 작성)	· 전문가 네트워크 · 국조실과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	· 출연금 예산 활용 및 연구·조사 수탁사업, 기부금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	· 기존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 소속 연구기관전문분야에 제한됨	· 독립성 낮음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분야에 제한됨)	· 전문가 네트워크	· 정부 출연(연) 예산으로 편성. 연구센터 설치시 예산을 증액가능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	· 대학의 연구인력의 분야별 높은 전문성 ·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 수행	· 독립성 높음	· 전문가 네트워크 및 교내 연구인력의 전문분야 활용	· 사업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지급 · R&D 예산편성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 대학과 출연연인력의 전문성 · 2안과 3안의 장점을 취합	· 독립성 중간	·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가 네트워크 시너지 높음	· 정부 출연(연)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구센터 설치하므로 2안과 유사

○ 법령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주요 잠재적 기능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표 IV-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3대 잠재적 기능

분류	정의	하위기능
조사, 연구, 교육 기능	- 전문가 인력 풀 지원, 정책 홍보 및 교육,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및 조사·연구, 해외 정책 동향 분석, 온라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지식 생산과 전파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정부 지원 기능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이행, 추진계획의 수립·협약·조정·점검,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 추진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약, 조정, 점검) .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을 제 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성을 구체화 하고 필요에 따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 위 두 표에서 제시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형태와 주요 (잠재적)기능을 바탕으로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 내용 및 구성을 설정함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크게 5개의 파트로 구성됨: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제2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제3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제4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제5파트)

- 1라운드 델파이 설문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V-4> 1라운드 설문지: 전체 5개 파트 설문 내용 구성

파트	주요 내용	특징	문항 수
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센터의 주요 기능의 중요도 (①조사/연구/교육,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센터의 주요 기능의 개선 정도 (①조사/연구/교육,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①조사/연구/교육,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4.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센터의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①독립법인 연구기관, ②기관부설 연구센터, ③대학부설 연구센터, ④ 학연 네트워크)		폐쇄형(4) , 개방형(8)
5.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센터의 조직 구성안 별 기능 개선 사항(①독립법인 연구기관, ②기관부설 연구센터, ③대학부설 연구센터, ④ 학연 네트워크)	5개의 개선 사항 제안	폐쇄형(4) , 개방형(8)

자료: 저자 작성

-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설문지는 크게 6개의 파트로 구성됨: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제2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제3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제4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제5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제6파트)
- 2라운드 델파이 설문 문항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IV-5> 2라운드 설문지: 전체 6개 파트 설문 내용 구성

파트	주요 내용	특징	문항 수
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센터 설립의 타당성 (①글로벌 규제, ②정보망, ③거버넌스 통합, ④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4)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센터의 주요 기능의 중요도 (①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센터의 주요 기능의 개선 정도 (①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4.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①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②정부지원, ③평가)	각 기능 별 세부 항목 포함	폐쇄형(4) , 개방형(2)
5.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센터의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①독립법인 연구기관, ②기관부설 연구센터, ③대학부설 연구센터, ④ 학연 네트워크)		폐쇄형(4) , 개방형(8)
6.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센터의 조직 구성안 별 기능 개선 사항(①독립법인 연구기관, ②기관부설 연구센터, ③대학부설 연구센터, ④ 학연 네트워크)	5개의 개선 사항 제안	폐쇄형(4) , 개방형(8)

자료: 저자 작성

- 각 파트 별로 보다 상세한 문항 구성은 아래 표들과 같음
- 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표 IV-6> 2라운드 설문지: 제1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 / 폐쇄형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타당성(필요성)	1-1	글로벌 규제 관점	폐쇄형/개방형
	1-2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관점	폐쇄형/개방형
	1-3	거버넌스 통합 관점	폐쇄형/개방형
	1-4	평가 관점	폐쇄형/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 제2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표 IV-7> 2라운드 설문지: 제2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 /폐쇄형
국 가지 속 가능발전연 구센터의 기 능의 범위와 중요성	2-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	폐쇄형
	2-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	폐쇄형
	2-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	폐쇄형
	2-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	폐쇄형
	2-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	개방형
	2-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	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 제3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표 IV-8> 2라운드 설문지: 제3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 /폐쇄형
국 가지 속 가능발전연 구센터의 설 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3-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	폐쇄형
	3-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	폐쇄형
	3-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	폐쇄형
	3-4	'평가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	폐쇄형
	3-5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3-6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작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 제4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표 IV-9> 2라운드 설문지: 제4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 /폐쇄형
국가지속 가능발전연 구센터의 설 립 효과 측 정 기준(기 능)	4-1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폐쇄형
	4-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폐쇄형
	4-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폐쇄형
	4-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폐쇄형
	4-5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	개방형
	4-6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	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 제5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표 IV-10> 2라운드 설문지: 제5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 /폐쇄형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별 기능수행 능력	5-1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	폐쇄형
	5-2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	폐쇄형
	5-3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	폐쇄형
	5-4	학연 네트워크(제4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	폐쇄형
	5-5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6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7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8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9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10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11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5-12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 제6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표 IV-11> 2라운드 설문지: 제6파트

파트	문항 번호	문항 내용	개방형/폐쇄형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별 개선 사항	6-1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	폐쇄형
	6-2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	폐쇄형
	6-3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	폐쇄형
	6-4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의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	폐쇄형
	6-5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6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7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8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9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10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11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6-12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개방형

자료: 저자 작성

(2)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적합한 전문가 집단(패널)을 선정하는 절차는 델파이 시행 과정에서 중요하며 어려운 작업임(이종성, 2001)

- 델파이 연구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인데, 전문가 패널 선정과 관련된 요인들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의 대표성, 자질, 책임성, 반응의 독립성 등임(이종성, 2001)
- 델파이 연구에서는 문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의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음(Alder & Ziglio, 1996). 참여자의 전문 지식은 미리 정의된 기준(예: 해당 분야 관련 학위,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지역 사회에서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정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본이 적절하게 식별되고 모집되어야 함
- 연구자가 직면하는 실용적 고려사항 중 하나는 표본 크기이며, 표본의 크기에 대한 엄격한 규칙은 없지만,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일반적인 질적 델파이 연구에서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참여자 표본이 모집됨. 표본 크기의 범위는 주제나 문제에 대한 기존 지식과 원하는 전문 지식의 범위가 얼마나 넓거나 좁은지에 따라 달라짐(Skulmoski et al., 2007)
- 이질적인 그룹이 포함된 경우(예: 국제 연구), 더 큰 표본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수백 명의 참가자가 필요할 수도 있음 (Delbeq et al., 1975). 이때 연구자들은 이질적인 그룹은 데이터 수집, 합의 도달, 분석 수행 및 결과 검증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실제로 여러 델파이 연구에서 조사 대상 전문가 그룹의 크기는 매우 다양함. 다만, 연구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표본이 작을 경우 (Nambisan et al., 1999) 또는 참가자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임 (Wynekoop & Walz, 2000)
-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표본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1차 델파이 조사는 총 45명의 전문가 집단에게 델파이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배포함
 - 델파이 조사를 위해 국가지속발전가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총 45명을 선별하였음
 - 이들 전문가 표본의 소속은 학계 12명, 연구기관 31명, 시민사회단체 1명, 사기업 1명으로 교수, 연구원, 기업 소속 전문가로 구성됨

- 전문가 표본의 연령은 30대부터 70대였으며 평균 52.4세로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음
- 구체적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45명)의 주요 인적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3) 델파이 조사 일정 및 진행

- 델파이 조사의 라운드 수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정해짐 (Delbeq et al., 1975)
- Gustafson (1975)은 대부분의 연구에는 2 또는 3 라운드의 델파이 반복이 충분하다고 제안함
 - 그룹의 합의가 필요하고 표본이 이질적인 경우, 3회 이상의 라운드가 필요할 수 있음
 -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고 표본이 동질적인 경우, 3회보다 적은 라운드로도 합의에 도달하거나 이론적 포화 또는 충분한 정보를 발굴할 수 있음
 - 그리고, 라운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델파이 참여자들이 필요한 노력도 증가하면서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도 보고됨(Alexander, 2004; Rosenbaum, 1985).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2 라운드에 걸쳐 진행됨
 -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은 그 표본이 동질적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 및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성이라는 비교적 세부적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본 델파이 조사의 목표라는 점에서 2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함
 - 단, 2라운드 실시 이후 추가 라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라운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 45명 전문가 집단
 - 설문지 배포: 2024년 6월 26일

- 설문지 응답: 2024년 6월 26일부터 2024년 7월 8일 - 최종 응답자(16명)
- 2라운드 델파이 조사
 -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 1라운드 응답자 전문가 집단 (16명)
 - 설문지 배포: 2024년 8월 26일
 - 설문지 응답: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9월 5일 - 최종 응답자(12명)

2)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1) 분석 방법

- 델파이 설문지의 폐쇄형 설문(리커트 7점 척도)은 문항 안정도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침
- 문항 안정도는 설문의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 일치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문항 안정도를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로 측정함
 - 이 변이계수는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평균(mean)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
 - 변이계수(CV) 값이 0.5 이하인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합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
-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는 설문의 항목 별 내용의 적합성을 측정할 수 있음
 - Lawshe(1975: 567)는 델파이 조사 분석의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수식을 제시함
 - $$CVR = \frac{N_e - N/2}{N/2}$$
 - 여기서 N 은 해당 문항 응답자 수를 나타내며, N_e 는 해당 문항에 ‘적절하다’ 라고 응답한 수를 나타냄
 -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긍정률’ 을 제시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음: 전체 응답 수에서 ‘적절하다’ 라고 응답한 수의 비중

- 본 연구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함. 설문 문항에 “적절하다(또는 그렇다: 5점 이상)” 라고 응답하는 경우, 해당 응답은 N_c 에 포함됨
- 내용타당도(CVR)는 이론적으로 -1에서 1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값이 커질수록 해당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높아짐을 의미함. 즉, 응답자 중 절반보다 많은 사람이 긍정적(예: 적절하다, 그렇다)으로 응답한 경우는 내용타당도(CVR)가 양의 값을 가지고, 반대로 응답자 중 절반보다 적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는 내용타당도(CVR)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됨
- Lawshe(1975: 568)는 응답자 수(N)에 따라 필요한 최소 내용타당도(CVR) 값을 표로 제시함
- 본 연구 2라운드 델파이 설문 응답자 수($N=12$)일 때 최소 내용타당도(CVR) 값은 0.56로 나타남. 즉, 설문 문항 응답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일 경우 설문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1라운드 델파이 조사의 개방형 문항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결과는 2라운드 델파이 조사 시 문항 내용과 구성에 반영되며, 이는 이용전문가 패널의 추가 응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

(2) 분석 결과

- 분석 결과 파트에서는 총 6개 파트의 설문 응답을 파트 별로 살펴봄
- 총 2회(1라운드와 2라운드)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의 전반에 걸친 시사점과 센터 설립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 살펴봄

가. 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 델파이 조사의 제1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변이계수(CV)는 0.13에서 0.25의 값을 보이는

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15개 문항 모두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됨

- 현황에 대한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음수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포함)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며,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이 미흡하여 정보의 생산과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다만, 거버넌스 분산의 정도는 다소 높으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응답함
- 설문(1-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내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최근 강화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규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함.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설문(1-2)의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함을 보여줌
- 설문(1-3)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으며, 이처럼 통합되지 못하고 분산된 거버넌스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 전반에 다소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분산된 거버넌스의 통합을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설문(1-4)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함.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수집, 연구 및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개별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와 기준, 최신 동향을 제공. 더불어,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

도록 관련 ‘대응 매뉴얼’ 을 준비

-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한 탄소세, RE100 등 정책과 ESG 경영 등에 대한 국가적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관련 규제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주요 국제기구 및 타국가의 규제 변화 및 방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제공, 주요국 사례 파악 및 분석
- 홍보, 성과측정 등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인식 및 대응력 제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식의 공유 및 확산

○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지속가능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 보급을 위해 전문기관 필요. 산재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다양한 기관/대학연구소/부처/지자체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또는 링크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중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 관련 정보의 체계적 조사, 수집 분석 역할을 통해 수립된 계획에 대한 추진 이행상황의 객관적 점검 필요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시계열적으로 표준화된 정보 생산을 위한 데이터의 형식, 지표 산출 주기 등을 담당하는 역할
- 정보와 지식 등에 대한 일반인, 관련 시민단체, 타 연구기관 등과의 공유 필요성 및 국가발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산업계, 학계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정보의 공유 및 확산, 글로벌 동향의 공유. 국가센터 설립으로 국제기구와 규제기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하고 보급할 수 있음, 국제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통합’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부문별로 분산된 연구를 전문센터에서 국가차원에서 총괄, 조정, 체계적 추진 필요. 국가 단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고 일관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여 연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피할 수 있음

- 정부 및 국내 타 관련 기관 등의 업무 협업 및 공유. 연구 성과의 통합 및 공유, 확산을 위해서는 체계적 종합적 업무 수행 기관 필요
 - 현재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부처 간 공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이에, 전체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있으면 해당기관간의 연계, 역할분담, 결과를 통합, 종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하나의 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한 방대한 정보와 연구 등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되, 협업기관을 두고 함께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평가’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 부문별, 부서별 추진정책을 전문기관에서 국가 차원에서 평가 및 조정 필요
 -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
 - 체계적인 평가체계(모형, 지표, 평가방법 등) 구축을 통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 지속적이고 객관화된 체계적 모니터링 기반의 평가 필요
 - 지속가능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정책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행할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설립 필요

<표 IV-12>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1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타당성(필요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긍정 률	CV	CVR
1-1	글로벌 규제	규제 대응 현황	3.42	0.79	3.00	0.08	0.23	-0.83
		규제 대응 위한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5.83	0.83	6.00	0.92	0.14	0.83
1-2	정보망	정보망 구축 현황	3.50	0.67	4.00	0.00	0.19	-1.00
		정보망 구축 위한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6.17	0.83	6.00	1.00	0.14	1.00
1-3	거버넌스 통합	거버넌스 분산 정도	5.33	0.89	6.00	0.75	0.17	0.50
		거버넌스 분산의 부정적 영향	4.33	1.15	4.00	0.42	0.27	-0.17
		거버넌스 통합 위한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5.75	0.97	6.00	0.92	0.17	0.83
1-4	평가	평가 현황	3.33	0.98	3.50	0.08	0.30	-0.83
		평가 위한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6.08	0.79	6.00	1.00	0.13	1.00

자료: 저자 작성

나. 제2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 델파이 조사의 제2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함. 아래 표는 제2파트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변이계수(CV)는 0.07에서 0.16의 값을 보이는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15개 문항 모두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
- 또한, 15개 모든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함
- 설문(2-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 기능들 중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평균 6.25)하고, ‘정부지원 기능’의 중요성을 다소 낮게 평가(평균: 6.00)하고 있음
-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관점에서는 ‘제도와 정책 동향 수집/분석’과 ‘정보 보급’이 가장 중요한 세부 기능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이 센터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부 기능이며,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은 가장 낮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 및 홍보’ 기능도 센터 기능들 중에서는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정부 지원’ 관점과 유사하게, ‘평가 기능’ 관점에서도 전문가들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는 센터의 중요한 기능이나,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 설문(2-5)과 (2-6)에서는 다양한 응답이 제시됨. 그 중 가장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은 ‘정보망 구축 및 운영’, ‘평가’,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등이며, ‘센터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으로 ‘교육/홍보’와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등임

<표 IV-13>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2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긍정 률	CV	CVR
2-1	기능의 중요도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6.25	0.45	6.00	1.00	0.07	1.00
		정부 지원	6.00	0.85	6.00	0.92	0.14	0.83
		평가	6.08	0.67	6.00	1.00	0.11	1.00
2-2	기능의 중요도: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정보망 구축	6.00	0.95	6.00	0.92	0.16	0.83
		정보 보급	6.17	0.72	6.00	1.00	0.12	1.00
		조사/연구	6.08	0.67	6.00	1.00	0.11	1.00
		제도와 정책 동향 수집/분석	6.18	0.60	6.00	1.00	0.10	1.00
2-3	기능의 중요도: 정부 지원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6.58	0.51	7.00	1.00	0.08	1.00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4.83	0.58	5.00	0.75	0.12	0.50
		추진계획 수립 지원	5.67	0.65	6.00	0.92	0.11	0.83
		법령/행정계획 수립 지원	5.92	0.79	6.00	0.92	0.13	0.83
		교육 및 홍보	5.25	0.75	5.00	0.92	0.14	0.83
2-4	기능의 중요도: 평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	6.75	0.62	7.00	1.00	0.09	1.00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	5.33	0.78	5.50	0.83	0.15	0.67
		보고서 작성 지원	5.58	0.67	6.00	0.92	0.12	0.83

자료: 저자 작성

다. 제3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효과 - 개선의 정도

- 델파이 조사의 제3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운영 되었을 때 그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능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함. 아래 표는 제3파트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변이계수(CV)는 0.09에서 0.22의 값을 보이는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15개 문항 모두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
- 15개 문항 중 1개(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를 제외한 모든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함
- 설문(3-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 및 운영된다면 그 전에 비하여 ‘평가 기능’ 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평가(평균 6.50)하고,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평균: 6.17)하고 있음. 앞에서 살펴본 설문(2-1)에서 전문가 패널은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을 꼽았음을 감안할 때 설문(3-1)의 결과 눈여겨 볼 만함
-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관점에서는 ‘정보 보급’ 이 센터 설립으로 가장 크게 개선될 세부 기능으로 나타남
-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이 센터 설립으로 가장 크게 개선될 세부 기능이며,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과 ‘교육 및 홍보’ 는 상대적으로 가장 개선의 여지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2-3)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정부 지원’ 관점과 유사하게, ‘평가 기능’ 관점에서도 전문가들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 센터의 설립으로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 는 상대적으로 개선의 정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함. 이 결과도 설문(2-4)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설문(3-5)과 (3-6)에서는 센터 설립 전-후 개선의 여지에 관한 다양한 응답이 제시됨. 그 중 가장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 설

립으로 가장 크게 개선될 기능’으로 ‘평가 기능’, ‘정보 보급’,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기능’을 꼽은 점을 들 수 있음. 반면, ‘교육/홍보’와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 기능 등은 개선의 여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3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효과: 개선의 정도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긍정 률	CV	CVR
3-1	개선의 정도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6.17	0.58	6.00	1.00	0.09	1.00
		정부 지원	6.33	0.49	6.00	1.00	0.08	1.00
		평가	6.50	0.67	7.00	1.00	0.10	1.00
3-2	개선의 정도: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정보망 구축	6.08	0.67	6.00	1.00	0.11	1.00
		정보 보급	6.25	0.62	6.00	1.00	0.10	1.00
		조사/연구	6.17	0.72	6.00	1.00	0.12	1.00
		제도와 정책 동향 수집/분석	6.17	0.58	6.00	1.00	0.09	1.00
3-3	개선의 정도: 정부 지원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6.58	0.67	7.00	1.00	0.10	1.00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4.75	1.06	5.00	0.67	0.22	0.33
		추진계획 수립 지원	5.75	0.87	6.00	0.92	0.15	0.83
		법령/행정계획 수립 지원	6.42	0.67	6.50	1.00	0.10	1.00
		교육 및 홍보	5.25	0.87	5.00	0.83	0.16	0.67
3-4	개선의 정도: 평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	6.67	0.65	7.00	1.00	0.10	1.00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	5.33	0.98	6.00	0.83	0.18	0.67
		보고서 작성 지원	5.83	0.58	6.00	1.00	0.10	1.00

자료: 저자 작성

라. 제4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 델파이 조사의 제4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기능 중요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함. 아래 표는 제4파트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15개 모든 문항의 변이계수(CV)는 값들은 0.5 이하로써 대체로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됨. 변이계수의 범위는 0.11에서 0.22로 나타남.
- 또한, 15개 문항들 중 하나의 문항(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보다 큼.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설문(4-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전-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평가 기능’이 가장 중요(평균 6.42)하고,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것(평균: 6.17)하고 있음. 하지만, 3개의 기능의 중요성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관점에서는 ‘정보망 구축’이 센터 설립 효과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세부 기능으로 보임
-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이 센터 설립 효과 측정 시 가장 중요한 세부 기능이며,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과 ‘교육 및 홍보’는 효과 측정 기준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설문(2-3)과 (3-3)와 일관된 결과 볼 수 있음
- ‘정부 지원’ 관점과 유사하게, ‘평가’ 기능 관점에서도 전문가들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가 센터의 설립 효과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반면,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것으로 판단함. 이 결과도 설문(2-4)과 (3-4)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줌
- 설문(4-5)과 (4-6)에서는 센터 설립 및 운영 측정에 관한 다양한 응답이 제시됨. 그 중 비교적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 설립 효과 측정’에는 ‘평가 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보급) 기능’이 전제되어야 함을 지적함. 또한, 평가를 수행할 때 정책에 지속가능발전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면, ‘지방기본전략’은 지자체 단

위에서 수행될 가능성이 높아 효과성 측정에서는 중요성이 낮은 기능으로 인식됨

<표 IV-15>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4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긍정률	CV	CVR
4-1	효과 측정에 중요한 기능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6.17	0.72	6.00	1.00	0.12	1.00
		정부 지원	6.25	0.75	6.00	1.00	0.12	1.00
		평가	6.42	0.67	6.50	1.00	0.10	1.00
4-2	효과 측정에 중요한 기능: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정보망 구축	6.25	0.62	6.00	1.00	0.10	1.00
		정보 보급	6.00	0.60	6.00	1.00	0.10	1.00
		조사/연구	6.08	0.79	6.00	1.00	0.13	1.00
		제도와 정책 동향 수집/분석	6.08	0.51	6.00	1.00	0.08	1.00
4-3	효과 측정에 중요한 기능: 정부 지원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6.75	0.45	7.00	1.00	0.07	1.00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4.83	0.83	5.00	0.75	0.17	0.50
		추진계획 수립 지원	5.75	0.87	6.00	0.92	0.15	0.83
		법령/행정계획 수립 지원	6.17	0.58	6.00	1.00	0.09	1.00
		교육 및 홍보	5.25	0.75	5.00	0.83	0.14	0.67
4-4	효과 측정에 중요한 기능: 평가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	6.67	0.65	7.00	1.00	0.10	1.00
		지방 지속가능 지표 평가	5.42	0.90	6.00	0.92	0.17	0.83
		보고서 작성 지원	5.50	1.09	6.00	0.83	0.20	0.67

자료: 저자 작성

마. 제5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 델파이 조사 제5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4가지 조직 구성안 별로 설립/운영 되었을 때 어떠한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함. 아래 표는 제5파트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변이계수(CV)는 0.07에서 0.32의 값을 보이는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12개 문항 모두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
- 12개 문항 중 6개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나타남. 이 문항들은 모두 (5-1)과 (5-2)에 분포함. 즉, 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과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나머지 6개 문항은 내용타당도(CVR) 값이 0.49 이하 나타남. 이 문항들은 (5-3)과 (5-4)에 분포하는데, 센터가 대학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낮게 나타남
- 설문(5-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3가지 기능 모두 전반적으로 잘 수행할 것이며, 특히 ‘평가 기능’을 잘 수행할 것으로 평가함. 나머지 3개 안보다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으로 운영될 경우 각 기능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 평가한 것임. 다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는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보다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가 더 잘 수행할 수 있음
- 설문(5-2)의 결과에 따르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3가지 기능 모두 전반적으로 잘 수행할 것이라 평가하나, 제1안의 형태일 때보다는 ‘정부 지원’과 ‘평가’ 기능 수행 능력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설문(5-3)과 (5-4) 문항들 전부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하로 나타남. 이는 이들 문항들의 내용타당도가 설문(5-1)과 (5-2)에 비해 낮음을 의미함. 더욱이, 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경우 앞의 두 안(제1안과 제2안)보다 더 낮은 기능 수행능력이 예상됨

- 설문(5-5)부터 (5-12)에서는 4가지 센터 설립 및 운영 형태에 따른 기능 수행 능력에 관한 다양한 응답이 제시됨. 그 중 비교적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때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예산(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때 정부 지원의 용이성은 장점이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함. 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경우 조사/연구/교육 기능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정부 지원 기능과 평가 기능은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표 IV -16>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5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문항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준 편차	중위수	긍정률	CV	CVR
5-1	기능 수행 능력: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6.00	0.60	6.00	1.00	0.10	1.00
		정부 지원	6.17	0.72	6.00	1.00	0.12	1.00
		평가	6.42	0.51	6.00	1.00	0.08	1.00
5-2	기능 수행 능력: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6.17	0.39	6.00	1.00	0.06	1.00
		정부 지원	6.00	0.43	6.00	1.00	0.07	1.00
		평가	5.83	0.72	6.00	1.00	0.12	1.00
5-3	기능 수행 능력: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5.08	0.79	5.00	0.75	0.16	0.50
		정부 지원	4.33	0.89	4.00	0.42	0.20	-0.17
		평가	4.58	0.90	5.00	0.67	0.20	0.33
5-4	기능 수행 능력: 학연 네트워크(제4안)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4.67	1.23	5.00	0.58	0.26	0.17
		정부 지원	4.00	0.95	4.00	0.17	0.24	-0.67
		평가	4.08	1.31	4.00	0.25	0.32	-0.50

자료: 저자 작성

바. 제6파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 델파이 조사 제6파트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4가지 조직구성안 별로 설립/운영 되었을 때 어떠한 사항이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함. 아래 표는 제6파트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를 제공함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변이계수(CV)는 0.11에서 0.28의 값을 보이는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20개 문항 모두 문항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
- (6-1)과 (6-2)의 10개 문항들 중 2개(예산 절감)를 제외한 8개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나타남. 즉, 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과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6-3)과 (6-4)의 10개 문항은 모두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미만으로 나타남. 즉, 센터가 대학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낮게 나타남
- 설문(6-1)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예산 절감’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서 대체로 가장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 중에서도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으로 센터가 운영될 때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 설문(6-2)의 결과에 따르면,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5가지 사항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예상됨. 특히, ‘연구 효율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일 때보다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일 때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음
- 설문(6-3)과 (6-4)의 모든 문항들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미만으로 나타남. 이는 이들 문항들의 내용타당도가 설문(5-1)과 (5-2)에 비해 낮음을 의미함. 더욱이, 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경우 앞의 두 안(제1안과 제2안)보다 더 낮은 개선이 예상됨

- 설문(6-5)부터 (6-12)에서는 4가지 센터 설립 및 운영 형태에 따른 개선 사항 관한 다양한 응답이 제시됨. 그 중 비교적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은 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정책의 일관성 증진에 기여)하나 예산 절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때의 장점은 법정 업무절차의 개선과 예산의 절감을 제시하고 있으며, 반면 단점으로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임. 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경우도 예산 절감의 장점과 더불어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난항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법정업무의 비효율성 등의 단점이 거론됨

〈표 IV -17〉 2라운드 델파이 결과: 제6파트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세부 문항	기술통계 및 적절성 평정					
			평균	표 준 편 차	중 위 수	긍 정 률	CV	CVR
6-1	개선 사항: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6.08	0.79	6.00	1.00	0.13	1.00
		정책의 일관성	6.17	0.58	6.00	1.00	0.09	1.00
		연구 효율성	5.75	0.62	6.00	1.00	0.11	1.00
		예산 절감	3.75	1.06	4.00	0.25	0.28	-0.50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5.25	0.75	5.00	0.83	0.14	0.67
6-2	개선 사항: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5.75	0.62	6.00	1.00	0.11	1.00
		정책의 일관성	5.58	0.79	6.00	0.92	0.14	0.83
		연구 효율성	5.92	0.67	6.00	1.00	0.11	1.00
		예산 절감	5.42	1.08	5.50	0.75	0.20	0.50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5.42	0.67	5.50	0.92	0.12	0.83
6-3	개선 사항: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4.25	0.45	4.00	0.25	0.11	-0.50
		정책의 일관성	4.08	0.51	4.00	0.17	0.13	-0.67
		연구 효율성	4.75	0.97	5.00	0.67	0.20	0.33
		예산 절감	4.92	0.79	5.00	0.67	0.16	0.33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4.00	0.74	4.00	0.25	0.18	-0.50
6-4	개선 사항: 학연 네트워크(제4안)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3.92	0.79	4.00	0.25	0.20	-0.50
		정책의 일관성	4.08	0.67	4.00	0.25	0.16	-0.50
		연구 효율성	4.33	0.65	4.00	0.25	0.15	-0.50
		예산 절감	4.58	1.08	4.00	0.42	0.24	-0.17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4.00	0.74	4.00	0.25	0.18	-0.50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론: 델파이 조사 결과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대부분 설문 문항의 변이계수(CV)는 0.2보다 작 값을 보이는데, 이 값들은 0.5 이하로써 대부분 문항의 안정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
- 설문 제2파트부터 제4파트까지의 대부분 문항의 내용타당도(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대체로 이들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함. 반면, 파트5와 파트6의 문항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과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CVR 값이 0.56 이상으로 내용타당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센터가 대학부설 연구센터(제3안)와 학연 네트워크(제4안)로 설립 및 운영될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에 대체로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낮게 나타남
- 설문 제1파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현황)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설문 제2파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 기능들 중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평균 6.25)하고, ‘정부지원 기능’을 가장 낮게 평가(평균: 6.00)하고 있음
- 설문 제3파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설립 및 운영된다면 그 전에 비하여 ‘평가 기능’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평균 6.50)함
- 설문 제2파트와 제3파트 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원 기능’과 ‘평가 기능’ 관점 모두에서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과 ‘국가 지속가능지표 평가’는 그 중요성이 높고, 센터의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가장 큰 반면,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과 ‘지방 지속가능지표 평가’는 그 중요성이 낮고 센터의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한 개선의 여지가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됨
- 설문 제4파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전-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는 ‘평가 기능’이 가장 중요(평균 6.42)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평균: 6.17)와

’ 정부 지원(평균: 6.25)의 중요성과 차이가 크지 않음

- 설문 제4파트도 앞선 제2파트와 제3파트와 유사하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관점에서는 ‘정보망 구축’ ‘제도와 정책 동향 수집/분석’ 이, ‘정부 지원’ 관점에서는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이, 그리고 ‘평가 기능’ 관점에서도 ‘국가 지속가능 지표 평가’ 가 센터 설립 및 운영 효과성 측정에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함
- 설문 제5파트의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될 때 전반적으로 3가지 기능 모두 잘 수행할 것이라 평가함. 그 중에서도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으로 센터가 운영될 경우 ‘평가 기능’ 을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함.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3가지 기능 모두 전반적으로 잘 수행할 것이라 평가하며,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은 제1안의 형태일 때보다 수행 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설문 제6파트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설립 및 운영된다면 대체로 가장 많은 개선이 있을 것 평가하며, 그 중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다만 ‘예산 절감’ 에 있어서는 다른 3개의 조직 구성안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적음.

제5장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기능 및 역할

- 제1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와 연구수행 방법
- 제2절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센터 역할 분석
- 제3절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역할
- 제4절 시나리오별 장단점 및 기대효과 분석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와 연구수행 방법

- 본 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국가수준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추진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앞절에서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설립 및 운영 방식별 장단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각 기능과 역할에 가장 적합한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을 실시함.
- 본 장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앞 장에서 도출한 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안을 참고하였으며, 「지속가능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문헌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지속가능발전 대학 및 연구원의 여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유효성을 검토하였음.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1) 연구의 내용

- 앞선 장의 국가지속가능발전(SDGs) 연구센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세부 추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국가적 차원에서 달성해야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이 요구됨.
- 특히, 국내 국가지속가능발전(SDGs)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음.
 - 연구원의 경우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지속가능정책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이 존재.

- 대학의 경우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등이 존재
- 국가지속가능발전(SDGs) 연구 담당기관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분산된 기관들 사이에서 중복연구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 자원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통합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따라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연구가 분산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수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심연구기관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

(2) 연구의 범위

- (기능과 역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역할범위에 대해서 검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나타난 잠재적 기능들을 식별하고 종합함으로써 신설 연구기관이 담당해야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 특히, 기존 연구원 및 대학의 지속 가능연구 담당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을 검토
- (조직 운영방식)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조직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잠재적 조직운영 형태에 대해 검토 필요.
 - 앞 장에서 수행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 사례에 대한 종합적 비교분석을 토대로 설립형태와 운영방식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 특히,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운영방식에 따른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 기능과 역할 범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조직운영별 형태에 대한 비교분석 수행
-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조직 구성안의 장점과 단점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검토
- (기능과 조직구성안의 정합성)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지속발전센터가 수행해야 할 조직 기능과 역할을 도출된 개별 조직 구성안에 따라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검토함.
-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 방식별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도출된 잠재적 기능들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을 검토함.
 - 연구센터 설립 목표를 극대화하여 잠재적 기능과 역할을 달성가능한 조직구성안을 비교분석.
- 이를 통해 국가지속발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분산된 현 연구기관들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수행 방법

(1)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을 통한 운영방안 도출

가. 시나리오 분석 개요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같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하는 과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움. 국제적 협력에서 맥락의 급변과 기술 발전으로 미래 협력의 환경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발생시킴. 국내에서도 국가수준의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야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조정이 필수적임.
- 특히, 국가지속가능개발 연구센터의 경우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동시

에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불확실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내외부에 대한 기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에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을 적절히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함. 미래예측을 통해 발생가능할 미래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조직 및 정책적 대응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목표 달성가능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Lindgren & Bandhold, 2003).

-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은 추정법, 패턴분석법, 구조분석법, 직관법, 목표분석법, 추론법 등으로 분리되는데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계량적 데이터를 얻기 힘들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직관법임.
 - 직관법의 경우 전문가들의 창의성의 원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설문지나 인터뷰로 수집하는 델파이 기법(Delphi Surveys), 구조화된 혹은 비구조화된 설문지법(Questionnaire), 컴퓨터로 여러가지 변수를 정교하게 모델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법(Simulation Analysis), 그리고 전문가들의 직관에 기반하여 동인탐색과 교차분석을 차례로 활용함으로써 미래 변화가능성을 분석하는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이 있음(김정렬 외, 2011: 157-158)
- 일반적으로 시나리오(scenario)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상황을 전문가들의 창의성과 직관에 기반하여 자세히 묘사한 것을 의미함. 따라서,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이란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각각의 전개과정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조직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불확실성 대처에 그 목적이 있다 (Bensoussan & Fleisher, 2013: 167-168). 기술 발전과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환경적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의 활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 첫째, 탐색적 시나리오로 현재부터 출발해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탐색하는 것이 목표임.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미래 조직이 직면할 문제들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줌
 - 둘째, 규범적 시나리오로, 미래의 특정사건을 가정한 후 이에 도달할 가

능성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임. 탐색적 시나리오와 달리 어떠한 목표를 탐색하는데 목표가 있기 보다는 어떻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함

- 이번 분석에서는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을 병행함. 탐색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달성해야하는 핵심적 기능과 역할을 분석함. 다음으로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탐색적 시나리오 단계에서 식별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구체화 하고자 함.
-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으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기반이 된다. 여러가지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발생가능한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괄함.
 - 특히,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략적 관리를 통한 달성을 위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갖춰야 하는 잠재적 기능과 역할을 식별하고, 앞 장에서 제시된 조직구조와의 정합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도구 중 하나임.
- 상황을 분석하는 추적의 단계에서부터 결정사항을 시행하는 행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획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시나리오 기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환경 상의 변화에 따른 도전과 기회를 식별하는 적절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식별된 환경적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조직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어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조직 환경 변화의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가 제시해주는 대안에 맞추어 조직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조직구조를 설정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짐 (Lindgren & Bandhold,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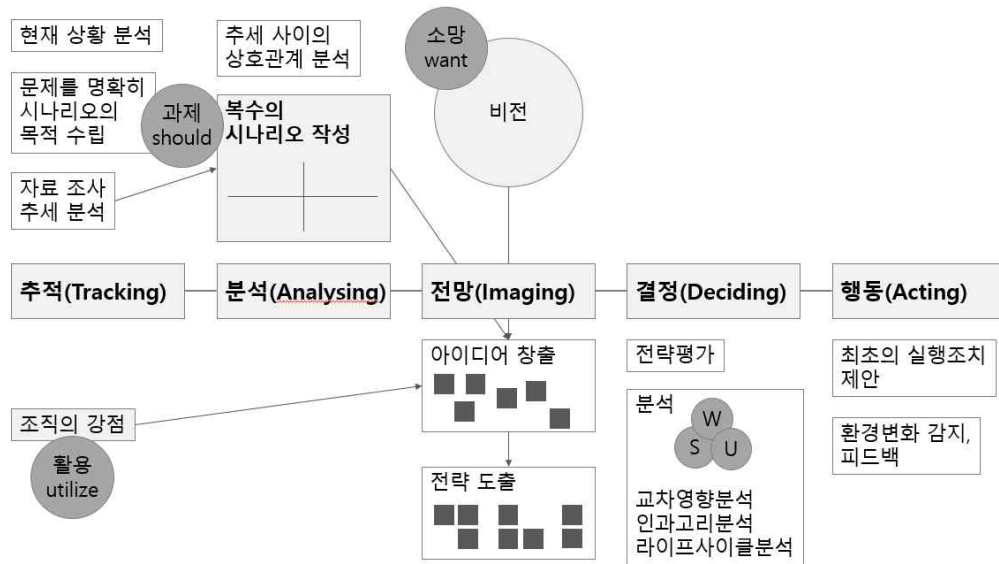
나. 시나리오 분석 절차

- 시나리오 분석의 절차는 수행하는 전문가별로 완전히 합의되어지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Lindgren & Bandhold (2003)의 TAIDA 기법과 Wright & Cairns (2012)의 방법이 있음. 일반적으로

TAIDA 방법은 작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안적 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Wright & Cairns (2012)의 방법은 전문가들의 직관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여 향후의 불확실성을 식별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

- 먼저, TAIDA의 각 단계는 추적(Tracking), 분석(Analyzing), 전망(Imaging), 결정(Deciding), 행동(Acting)임. (Lindgren & Bandhold, 2003)
 - 추적은 초점을 맞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위 세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묘사하는 것을 포괄함.
 - 분석은 추적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 단계로 변화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함.
 - 전망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모습에 대한 여러가지 통찰을 갖게 됐으면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 즉 비전을 창출하는 과정임.
 - 결정은 위험에 대처하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 가능한 분야와 그 분야에서 선택 가능한 전략들을 파악하는 것을 포괄함
 - 행동은 계획만으로는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계획만으로 조처를 취하고 계속해서 그 조처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내도록 행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소망하는 결과가 실현 될 때까지 시나리오 계획이 계획자로 하여금 행동을 계속해나가게 해주는지에 관심을 가져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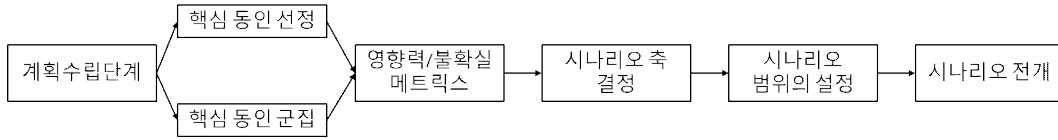
<그림 V-1> TAIDA 절차를 통한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 (Lindgren & Bandhold, 2003)



○ 다음으로 Wright & Cairns (2012)는 시나리오 플래닝 과정을 순서대로 계획수립, 핵심 동인 선정 및 군집화, 영향력 및 불확실성 매트릭스의 설정, 시나리오 축 결정, 시나리오 범위 설정, 시나리오 전개 과정으로 제시하였음 (배정환 & 박진희, 2013)

- 첫째, 관련 분야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분석 절차를 진행함
- 둘째,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와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핵심 동인(driving forces)을 식별하고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유사한 특성이 있는 핵심 동인들을 군집화함.
- 셋째, 그 영향력과 추세의 불확실성 정도를 측정한 매트릭스를 작성함.
- 넷째, 작성된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핵심 불확실성 요인을 선정하고 시나리오 작성 축을 결정함.
- 다섯째, 시나리오 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상반된 시나리오의 범위를 제한하고, 시나리오별 제목, 내용, 징후, 핵심요인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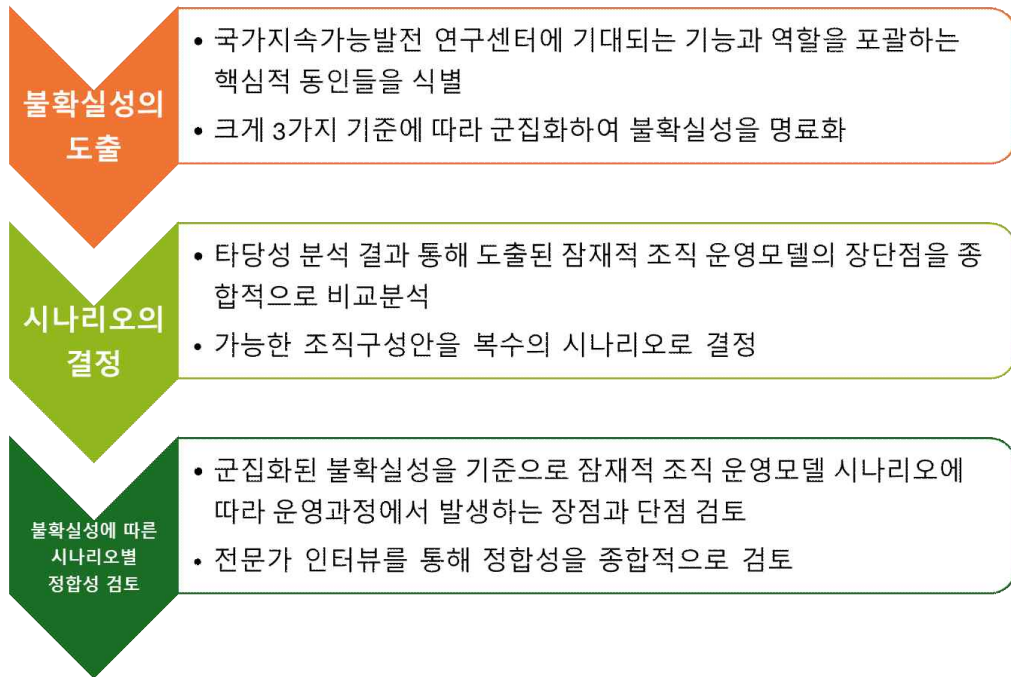
◁그림 V-2> Wigt & Cairns(2011)의 절차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절차 (배정환 & 박진희, 2013)



○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에 기대되는 핵심적 기능과 역할에 따른 조직운영 추진 전략에 대한 탐색적 및 규범적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Lindgren & Bandhold (2003)의 TAIDA 기법과 Wright & Cairns (2012)의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불확실성의 도출) 첫째,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법령분석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에 기대되는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는 핵심적 동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크게 3가지 기준에 따라 군집화하여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시나리오의 결정) 둘째, 앞 장에서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통해 도출된 잠재적 조직 운영모델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함.
- (불확실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합성 검토) 셋째, 첫번째 단계에서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군집화된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잠재적 조직 운영모델 시나리오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새로 설립될 예정인 연구센터의 위상과 역할, 유관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운영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최적의 조직구성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V-3> 분석의 절차



2.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위원회 기능별 센터 역할 분석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내용 분석

(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제시된 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국가 지속가능 발전 연구 센터 설립 필요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술되어 있지 않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 27조 및 시행령 제 22조에서 국가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향후 주요 사업 수행과 재정 지원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설계를 위해 연구센터가 담당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성 존재.

<표 V-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근거조항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에 가장 적합한 조직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함. 이를 통해 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음.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국가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목표를 전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핵심 연구와 정책제안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센터가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함.

나. 연구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

-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은 기초와 응용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확장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 제안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강원택 외(2006)에 따르면 정책연구기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정책 결정자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함.
 -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의회 등에 전문가를 공급하는 인력 풀의 역할을 함.
 - 여론조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결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분석하여야 함.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활동을 담당함
 - 선거 등 정치적 변화와 깊게 연관되어있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의 공유
- 그러나,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경우 기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센터들에게 기대되는 역할들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 부문의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

시할 수 있어야 함.

- 그러므로,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목표를 구현하는데 있어 연구센터가 수행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령분석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할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 법 규정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분석을 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구체화하였음.

2)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3대 잠재적 기능 도출

- 분석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총 11가지의 하위기능을 식별하였음.
 - (1)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3)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5)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6)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8) 추진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의, 조정, 점검), (9)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 (10)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11)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의 하위 기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됨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경우 일반적인 연구기관들에서 기대되는 역할인 조사/연구/전문인력 공급 및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부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독려하기 위해 목표의 충족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 또한 요구되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나리오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반영하여 총 11개 하위 잠재적 기능들을 군집화하여 3개의 잠재적 기능을 식별하고자 했음.

- 첫째,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은 전통적인 연구기관들에 기대되는 기능으로 전문가 인력 풀 지원, 정책 홍보 및 교육,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및 조사·연구, 해외 정책 동향 분석, 온라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지식 생산과 전파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을 의미함.
 - 하위 잠재적 기능은 (1)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4)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5)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으로 구성됨.
- 둘째, 정부 지원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이행, 추진계획의 수립·협의·조정·점검,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제·개정 지원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포괄함.
 - 하위 잠재적 기능은 (1)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2)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3) 추진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의, 조정, 점검), (4)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으로 구성됨.
- 셋째,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속가능 발전 지표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 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촉진하는 역할을 의미함.
 - 하위 잠재적 기능은 (1)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으로 구성됨.
-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잠재적 기능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III-2>와 같으며 기존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기관들이 수행가능한 조사, 연구, 교육 기능과 정부 지원 기능에 더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조율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인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을 추가로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항부터 4항은 기본법에 명시된 기능을 정리한 결과임.

<표 V-2> 3대 잠재적 기능

분류	정의	하위기능
조사, 연구, 교육 기능	- 전문가 인력 풀 지원, 정책 홍보 및 교육,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및 조사·연구, 해외 정책 동향 분석, 온라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촉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지식 생산과 전파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정부 지원 기능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이행, 추진계획의 수립·협약·조정·점검,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을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 추진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약, 조정, 점검) .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 조사, 연구, 교육 기능

가.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생산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를 온라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를 쉽게 제공하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자료와 접수·생산된 자료를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발전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위원회, 기업·시민사회단체, 해외 기관 등이 협력하여 연구, 정보교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함.

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고, 학교 교육 연계, 모범 기업·단체 인증, 조사·연구, 대중매체 홍보,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함.

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의 현황을 수집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책 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국내 제도·정책을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기업·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마.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가능하도록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적절히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는 연간 운

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본전략, 중앙추진계획, 법령 집행, 지속가능발전 시책, 국내외 협력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해야함.

<표 V-3> 조사, 연구, 교육 기능관련 법적 근거

분류	기능	법적 근거
조사, 연구, 교육 기능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를 쉽게 제공해야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필요 - 시행령 17조(자료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자료와 접수·생산된 자료를 공개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이해관계자 협력하여 연구, 정보교환, 기술개발, 지원 추진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참여 및 실천을 유도 . 학교 교육 연계, 모범 기업·단체 인증, 조사·연구, 대중매체 홍보,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인식개선 필요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31조(국제규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책 동향 수집·분석하여 국내 제도·정책을 정비, 지원체제 구축, 기업·국민에 정보 제공하여 대응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계획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본전략, 중앙추진계획, 법령 집행, 지속가능발전 시책, 국내외 협력 등 관련 자료전달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운영해야함.

(2) 정부 지원 기능

가.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대해서 지원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함. 5년마다 재검토되며, 수립과 변경 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가기본전략은 대통령령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변경은 분야별 시책 담당 부처 변경,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별 지표 내용 변경, 법령 반영, 오류 정정, 국가기본전략 본질 영향 미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사항 변경을 포함함.

나.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전략을 토대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신규 연구센터의 지원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이 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되며, 수립 및 변경 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추진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의, 조정, 점검)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분야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 추진계획을 적절히 수립 및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나 조정을 하

여야 하며,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포함한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며, 변경 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중앙추진계획은 환경, 목표, 전략, 진행 상황, 자원,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하며, 국가기본전략, 추진 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수립·변경되며, 관계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변경 시 국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을 반영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상호 협의·조정 시 국가·지방 기본전략, 추진 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은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 기본전략, 추진 상황,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을 상호 협의·조정하며, 필요 시 업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중앙추진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며, 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해야 함.

라. 정책의견 제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

-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추진 결과에 따라 정책의견이 제시 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 또한, 지속가능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및 행정계획을 제·개정 시 이를 관계 기관장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따라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행정계획을 제정·개정할 때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들 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법령안 및 중장기 행정계획안은 관계 기관 통보 후 국가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15일 이내에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표 V-4> 정부 지원 기능관련 법적 근거

분류	기능	법적 근거
정부 지원 기능	-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 고려하여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필요 - 시행령 제2조(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 공유로 전략적 목표달성 지원 필요 - 시행령 제3조(국가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한 규정
	- 지방기본전략	-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p>수립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전략 보완 위한 20년 단위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 필요. 5년마다 재검토되며, 수립 및 변경 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필요.
<p>– 추진 계획의 지원 (수립, 이행, 협의, 조정,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은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포함한 중앙추진계획 수립/이행하고, 변경시 국가위원회의 심의필요.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 수립/이행하며, 변경 시 지방위원회 심의 필요. – 시행령 제4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추진계획은 환경, 목표, 전략, 진행 상황, 자원, 국제 협력 등 포함, 국가기본전략, 추진 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등을 고려해 수립·변경, 관계 기관에 조사·연구 의뢰 및 인터넷 게재필요. – 시행령 제5조(중앙추진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 시 국가위원회 심의를 필요, 심의 결과에 따라 계획을 반영. –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상호 협의·조정 시 국가·지방 기본전략, 추진 상황 점검,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내용 고려 필요 – 기본법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은 추진계획에 대해 상호 협의·조정가능하며, 필요 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의견 청취 – 시행령 제7조(중앙추진계획 등의 협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 기본전략, 추진 상황, 지속가능발전 평가, 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해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협의·조정. 필요 시 업무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협의를 활성화. – 기본법 제11조 (추진상황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2년마다 추진계획의 상황 점검, 필요시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수정·보완. – 시행령 제8조(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온라인조사등으로 중앙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관계 기관에 조사·연구 의뢰하며, 점검 결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에 통보필요.
<p>– 정책의견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법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p>안 및 법령 제·개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하여 정책의견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장은 존중 및 반영 필요 -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 미치는 법령 및 행정계획을 제정·개정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 필요,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 필요. -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 법령안 및 중장기 행정계획안은 관계 기관 통보 후 국가위원회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15일 이내에 국가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

(3)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설정된 지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 달성 수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지표 개발·보급과 평가 수행은 일반적으로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중요 역할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국가위원회·지방위원회는 이를 활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며,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조례로 정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예산 활용, 관련 기관 통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효율성·

일관성·활용도를 높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 투입 행정비용 대비 행정효과, 자료요청, 평가전문기관 의뢰, 결과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서 정함.

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 설정된 중앙추진계획의 이행 수준과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표해야함. 특히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수행해야 할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과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조례로 정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국가 지속가능 발전 추진 현황, 평가 결과, 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관계기관 의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관보,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표 V-5>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관련 법적 근거

분류	기능	법적 근거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수행	<p>· 기본법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국가위원회·지방위원회는 이를 활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며,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조례로 정함.</p> <p>시행령 제10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국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예산 활용, 관련 기관 통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지표의 신뢰성·효율성·일관성·활용도를 높여야 함.</p>

		<p>시행령 제11조(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국가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 투입 행정비용 대비 행정효과, 자료요청, 평가전문기관 의뢰, 결과 통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에서 정함.</p>
	<p>-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p>	<p>- 기본법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과 평가 결과 종합하여 보고서 작성하고, 공표필요.</p> <p>- 시행령 제12조(국가보고서의 작성)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평가 결과, 정책 방향, 주요 과제 종합적 보고, 관계기관 의견 및 연구 결과를 활용해 작성, 관보,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등으로 외부 공개.</p>

3) 잠재적 기능분석 결과의 종합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3대 잠재적 기능 도출

- 식별된 3대 잠재적 기능은 (1) 조사, 연구, 교육 기능, (2) 정부 지원 기능, (3)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는 「지속가능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3대 잠재적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기 설립된 국내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후 활용가능한 직간접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기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이 강조되었음.
- 초기에는 지속가능발전 대응에 필요한 정책적 지식 제한적인 상황이었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관련 연구와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였으며,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광범위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식을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특히 기대되었음.

- 특히, 대학에 설립된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등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며, 연구자들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로 집중하였음.
-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초적인 정책 지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에 위치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정책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의 경우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정책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식별된 세번째 기능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기능의 경우 기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관들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임.

(2)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기능

- 이처럼 대학 및 연구원 산하 연구기관들은 첫 두가지 기능인 조사, 연구, 교육 기능과 정부지원 기능을 적절히 관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저변이 확대되고 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기관들의 경우 한계가 존재함.
- 또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의 경우 여러 정부기관에서 서로 파편화되어 관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는 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국적 맥락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설정하고 세부 지표를 개발하였고,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의 경우 환경부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UN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SDG 지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 따라서,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경우 기존 연구기관들이 수행가능한 첫 두가지 기능인 조사, 연구, 교육 기능과 정부 지원 기능도 중요함
-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기관들 간의 상충을 완화하고 지표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원 부설 연구기관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뒤의 3절에서는 가능한 잠재적 연구센터 조직구성안의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수행해야 할 세가지 잠재적 기능, 특히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 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조직구성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역할

1)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조직구성안 검토

(1)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조직구성안 개요

-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기관의 현황 및 운영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적 조직 구성안을 총 4가지로 도출하였음.
- 1안은 독립 법인 정부출연연구원의 형태로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에 위치하는 하위조직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 법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설립.
- 2안은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의 형태로 기존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에 위치하는 연구센터들(예.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정책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연구팀)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는 상위 기관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조실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기타 출연연으로 예상됨.
- 3안은 대학에 부설된 연구센터 설치의 형태로 기존의 내 설치된 연구부서들(예.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4안은 2안과 3안의 절충안의 형태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공동으로 학연 네트워크에 기반한 독립적인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2) 조직구성안별 특징

(1)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예: 출연연 형태)

가. 기관 형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하는 안.
 - 2안과 달리 하위조직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 법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기능과 역할을 전담하게 되는 형태로 설립되어 국가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정책지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함.
 - 독립성을 유지하며 기관 부설 연구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연구를 진행가능.
 - 연구주제의 선정에서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진행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
-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 예산을 활용하며(약 80%~90% 수준), 부족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연구·조사 수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부금을 통해 예산을 운용함
 - 주요 운영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여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의뢰하는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함.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범위

-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평가를 지원가능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기능.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가능.
 - (정부 지원 기능) 국내외 지속 가능성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을 제안가능.
 - (지속가능발전 평가지원 기능) 독립기관이므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가능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평가기준 및 결과 도출과정에서 주도적 지원가능.

다. 인력 및 조직 구성

- 독립 법인 연구센터로 설립될 경우 기존 출연연의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법에서 도출한 3대 기능을 직접 주도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다른 안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조직규모가 3~4실(과) 50~100명 정도로 규모가 커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규모의 경우에도 다른 안들에 비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100여명 규모의 기존 출연연과 비교하였을 때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정부 지원 기능 및 평가 기능을 주도하기 위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ALIO 경영공시 상 2023년 기준 통일연구원(100명) 약 156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105명) 약 155억, 한국행정연구원(118명) 약 210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4명) 약 340억 정도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라. 위원회 지원 형태

- 연구센터 내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조실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위원회 지원가능
 - 연구 아젠다 결정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함. 연구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정기적인 협의가 용이함.
 - 사무국 기능과 관련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

(2)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예: 국조실, 경사연 등 산하기관)

가. 기관 형태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산하 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존 연구기관 산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함
 - 출연연 산하에 연구센터로 설치되어지는 경우, 연관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연구기관의 전문분야에 집중된 연구는 기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연구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의 연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예산은 정부 출연(연) 예산으로 편성하여, 센터가 설치될 정부출연(연)의 예산에 예산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새로운 연구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만,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정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연구 집중을 초래할 수 있음.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범위

- 출연연 산하에 연구센터로 설치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주무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역할 수행.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나 1안 대비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정부 지원 기능) 국내외 지속 가능성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원제공 가능
 - (지속가능발전 평가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나, 센터 자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한 평가지원 위주의 기능에 집중

다. 인력 및 조직 구성

- 출연연 등 기관 부설 연구센터로 설립될 경우 기존 출연연내 존재하는 연구센터들(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공공기관연구센터 등)과 비교하였을 때 기본법에서 도출한 3대 기능을 직접 주도해서 관리하기에는 인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
 - 다른 안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기존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산하 연구센터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조직규모가 3~4팀 20~30명 정도로 예상되어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기존 부처들 간의 협업의 중개자로 역할.
- 유사 연구센터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교육 기능, 정부 지원 기능 및 평가 기능을 주도하기 보다는 부처 간 조정기능에 집중한다면 1안에 비해 예산 규모의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ALIO 경영공시 상 기존 연구센터들의 경우 임직원 한명당 1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20명~30명 정도의 연구센터로 운영될 경우 약 20억~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라. 위원회 지원 형태

- 정부 출연(연)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협업 가능
 - 소속 연구원 내에서 다른 센터들과의 협업과 기능조정이 용이하며, 다학제적 연구와 통합적 접근이 가능.

(3)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가. 기관 형태

-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연구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공모를 통해 대학교 내 산하 연구센터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미함
- 대학의 연구인력(교수, 박사, 대학원생 등)과 행정인력(교직원,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음.
 - 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교수 및 연구진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학 내 행정인력의 지원으로 연구의 행정적 절차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음.
 -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인 연구계획 수립 및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그러나, 기존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에 이미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어 비효율이 발생가능.
- 예산은 사업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지급하거나, R&D예산 편성을 통해 중장기 연구과제예산으로 지원 가능
 - 1안과 2안과 달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장점이 있음. 출연연과는 달리 대학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데 장점이 존재함.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범위

- 대학 산하에 연구센터로 설치되는 경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주무부처들에 대한 지원기능이나 평가기능보다는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치중되어질 수 있음.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가능하며 정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

점에서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 저변확대를 위한 지식생산 기능

- (정부 지원 기능 및 지속가능발전 평가기능) 정부의 각 부처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자료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 수행. 또한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지원이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권한이 부족하여 조정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함.

다. 인력 및 조직 구성

- 대학 부설 연구센터로 설립될 경우 대학 내 교수 등 연구인력 위주로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기능들에 비해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관부설로 설치되는 2안과 비교하였을 때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아지게 될 수 있음.
 - 다른 안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대학 내 기존 교수진이 주축이 되므로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이들의 연구관련 전문성을 활용가능하여 유리한 점이 있음.
 - 전임구성원 기준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혹은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센터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대학 내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센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2안의 조직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슷하거나 더 소규모로 설립되어질 수 있음. 인적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해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기존 부처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유사 연구센터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교육 기능에 치중되며 정부 지원 기능 및 평가 기능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1안 혹은 2안에 비해 예산 규모의 경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라. 위원회 지원 형태

- 대학 소속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원하기 용이하다는 장점 존재.

- 대학 소속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이 센터의 구성원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및 해외 학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4)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가. 기관 형태

- 출연연과 대학 공동으로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
 - 예상되는 학연 네트워크 사례는 세종시 경사연 산하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
 - 다만, 현행법상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출연연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의 적용을 받는데 학연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분류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음. KDI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 부칙 제9조에 따라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특별법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연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함.
- 기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동시에 학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 전문분야에 제한되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음.
 - 대학과 출연연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안과 3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연구가 가능함
- 협업하는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아젠다 설정이 제한될 수 있으나 대학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독립성을 어느정도 확보 할 수 있음.
 - 다만, 출연연과 대학의 여러 연구진들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어젠다 설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음. 연구의 독립성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질 수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나 국무조정실이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연구지식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질 수 있음.
-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 예산을 활용하며 (약 80%~90% 수준), 부족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연구·조사 수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

부금을 통해 예산을 운용함

- 정부 출연예산을 편성하여 연구센터를 설치하게 되므로 2안과 유사함.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범위

- 대학과 기관간의 학연네트워크 형태로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치중될 수 있는 3안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주무부처들간의 긴밀한 협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안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진들의 장기적 관점에서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정책 결정 및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정부 지원 기능) 대학 부설로 설치될 경우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원제공 가능
 - (지속가능발전 평가기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공 가능하고 신규 연구센터 뿐만 아니라 대학 및 기관 내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공신력 확보 및 직접적 지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다. 인력 및 조직 구성

- 학연 네트워크 기반 연구센터로 설립될 경우 대학 내 교수 등 연구인력 및 출연연 내 연구원들로 조직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본법에서 도출한 세가지 기능 모두에 대응이 가능함.
 - 다른 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학 내 기존 교수진과 기관 내부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므로 인건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이들의 연구관련 전문성을 활용가능하여 유리한 점이 있음.
 -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고, 출연연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의 적용을 받는데 학연 네트워크 모델의 조직 구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 인력들의 소속이 불분명해지거나 기존 소속 기관과의 기능 중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에 학연네트워크 모델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경우가 없어 기존의 벤치마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그러나, 2안 혹은 3안의 조직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두가지 모형의 중간수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짐.

라. 위원회 지원 형태

- 출연연과 대학 소속의 연구원들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
 - 대학 및 연구원 소속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이 센터의 구성원으로 조사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및 해외 학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상대적으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집중하여 학술연구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간접적 지원에 치중되어지는 3안에 비해 국가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표 V-6> 조직구성안별 특징 검토

조직구성안	기관형태	주요기능 및 역할범위	인력 및 조직구성	위원회 지원형태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위 정책지원 및 연구 전담 · 독립성 높음 · 출연금 예산 활용 및 연구·조사 수탁사업,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위 정책조정 및 평가과정에 대한 주도적 지원 · 규모가 크고,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목표 전반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연구센터 이므로 규모 큼 (3~4실 100여 명 수준 예상) · 150~200억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지원 (정책 및 평가 지원) ·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국조실과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연구기관 산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 · 기존 연구기관 전문성 활용가능 · 독립성 낮음 · 정부 출연(연) 예산으로 편성. 연구센터 설치 시 예산을 증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위 정책조정 및 평가과정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의 가능성 · 1안 대비 규모가 작아 기존 부처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조정 위주로 운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 연구센터로 규모 중간 (3~4팀 20~30명 수준 예상) · 30~50억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지원 (정책 및 평가 지원) ·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국조실과의 정기적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연구인력의 분야별 높은 전문성 활용 ·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수행 · 독립성 매우 높음 · 사업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강조 · 규모 및 권한의 제약으로 조정 및 평가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한계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부설 연구센터로 규모 작음. 교수 및 연구인력 위주로 상주인원 적음. (10여명 수준 예상) · 5~10억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적 지원 (학술연구 위주로 지속가능발전 저변확대) · 전문가 네트워크 및 교내 연구인력의 전문분야 활용가능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출연연 인력의 전문성 · 2안과 3안의 장점을 취합 · 독립성 중간 · 정부 출연(연) 예산으로 편성하여 연구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및 평가기능을 보완하여 대학 부설 모형의 한계를 극복 · 대학 및 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가용 자원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 상 인력의 소속이 모호 · 2안의 기관산하 연구센터 수준 혹은 그보다 작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 (3~4팀 15~20명 수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적 지원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 및 직접적 정책 지원가능) · 대학과 출연연의 전문가 네트워크 시너지 높음

4.시나리오별 장단점 및 기대효과 분석

1) 3대 잠재적 기능별 시나리오 분석

(1) 분석 목표 및 방법

가. 분석 목표

- 각 조직구성안이 구현해야할 잠재적 기능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2절에서 3대 잠재적 기능(조사, 연구, 교육기능, 정부지원 기능, 지속가능발전 평가기능)과 3절에서 4가지 조직 구성안(독립법인연구센터, 기관 부설 연구센터, 대학 부설 연구센터, 학연 네트워크)을 도출하였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정합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 이를 통해 잠재적 조직구성안 별로 도입시 발생가능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잠재적 조직 구성안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성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분석 방법

- 조직구성안 별로 개별 기능을 수행했을시 발생가능한 상황에 기반하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조직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에 기반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이해해 보고자 하였음.

(2) 분석 결과

가. 조직구성안 별 시나리오 분석 I: 조사, 연구, 교육기능

① 독립 법인 연구센터(1안) 시나리오

-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독립법인 연구센터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특화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대학이나 기관부설 연구센터에 비해서 연구/조사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출연연의 기존 조사연구와의 범위가 중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구의 독립성 및 방향성) 독립법인 연구센터의 특성상 실무 중심의 연구가 특징이 됨.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학계의 지식을 융합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다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대학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함.
- (연구기능의 중첩 가능성) 기존에 존재하는 출연연(예, 경사연, 환경연 등)과 조사연구 기능이 중첩되어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출연연과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 신규 연구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회의적 시선이 존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교육) 신규 연구기관 설립 계획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들을 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② 기관 부설 연구센터(2안) 시나리오

-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기관 부설 연구센터의 경우 상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및 연구 자원에 기반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상위기관의 조정을 통해 연구기능의 중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상위기관 내부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 (연구의 독립성 및 방향성) 소속 기관이 연관 분야의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학에 비해 실무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장기적 및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가 어려움. 또한 소속 기관의 방향성에 따라 연구 아젠다 설정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혹은 독립법인에 비해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연구기능의 중첩 가능성) 독립적인 법인인 연구센터의 경우, 기존의 출연기관의 조사 및 연구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위 기관은 소속 기관들의 연구 기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상대적인 이점이 있음.
- (이해관계자 교육) 상위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독립법인에 비해 조직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함.

③ 대학 부설 연구센터(3안) 시나리오

○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대학부설 연구센터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이론을 개발 및 혁신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가장 적합한 안임.

- (연구의 독립성 및 방향성) 대학의 경우 독립 법인 및 기관 산하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상대적으로 출연연의 경우 실무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반면, 학내 기관으로 설치될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학내 여러 전문가들과 그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혁신적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 (연구기능의 중첩가능성)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해 주로 정책지원을 수행하는 출연연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연구기능의 중첩가능성이 높지는 않음. 그러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대학 기관이 설립될 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진부화가 발생하며 연구센터 운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교육)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기초 인프

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모형으로 볼 수 있음. 대학의 경우 기존에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발전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④ 학-연 네트워크 모델(4안) 시나리오

-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학연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전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전문가들 간 조율이 쉽지 않고 한국에서 학연 네트워크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 존재.
- (연구의 독립성 및 방향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학계와 출연연의 여러 전문가 그룹과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조사 및 연구기능의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출연연과의 수직적 구조가 아닌 연구 주제에 따라 문제 지향적으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애자일(agile)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음. 다만, 한국적 맥락에서 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및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잘 작동하는 선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우려가 존재함.
- (연구기능의 중첩 가능성) 기존 존재하는 출연연의 조사연구 기능과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거시적, 종합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하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연구기능의 확보 가능.
- (이해관계자 교육) 대학에 존재하는 교육관련 기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안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표 V-7>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시나리오 분석

조직구성안	조사, 연구, 교육 기능
<p>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실무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대학에 비해 장기적, 거시적 관점 어려움 - 기존 존재하는 출연연의 조사연구 기능과 중첩될 우려 존재함 -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직접 확보하여 연구진행 가능
<p>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에 비해 실무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어 장기적, 거시적 관점 어려움 - 상위 기관의 방향성에 따른 연구 아젠다 설정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에 비해 독립성 확보가 어려움 - 기존 존재하는 출연연의 조사연구 기능과 중첩될 우려 존재하나, 독립 법인 연구센터에 비해 상위기관이 조정이 유리함 - 상위 기관이 가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독립법인에 비해 조직규모가 작아 직접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움
<p>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 - 학내 여러 전문가 관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혁신적 주제 연구 가능 - 출연연의 조사연구 기능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이론적 연구를 수행함 -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운영모형
<p>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학계 및 출연연의 여러 전문가 그룹과 협업이 용이하여 조사 및 연구기능의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연구 주제에 따라 문제 지향적으로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가 용이함. - 한국적 맥락에서 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및 연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잘 작동하는 선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아 우려 존재. - 기존 존재하는 출연연의 조사연구 기능과 중첩될 우려 존재 - 대학에 존재하는 교육관련 기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나. 조직구성안 별 시나리오 분석 II: 정부 지원 기능

① 독립 법인 연구센터(1안) 시나리오

○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로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하기에 있어 독립 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바람직할 수 있음. 다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의 경험이 부족해 거버넌스 관리가 어려울 수 있음.

- (정책 지원의 용이성) 지속가능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력 위주로 연구센터가 운용됨으로서 연구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국조실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조직 규모 및 대응가능성)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기관산하에 위치할 때에 비해 독립 법인으로 설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원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종합하면 50명~100명 정도로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독립 법인으로 설치될 때에 더 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 정부지원 기능과 함께 평가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함.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성공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독립 법인 연구센터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고 거버넌스 관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협력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② 기관 부설 연구센터(2안) 시나리오

○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 정책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소속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정책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하나,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기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설센터라는 점에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정책 지원의 용이성) 지속가능발전 정책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 형태로 상위기관에서 정책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연구센터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음.
- (조직 규모 및 대응가능성)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설 센터의 경우 정책지원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 지속가능센터의 규모에 대한 해외사례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프랑스의 지속가능발전부의 경우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환경생태과를 포함하는 2개 대부처기반으로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미국의 환경청인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경우 대통령 지속 기구로 환경위 CEQ(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가 설치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권한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관 부설 연구센터로 설립되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독립법인에 비해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데,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부여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기존의 대부분의 출연연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에는 필수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 없어 한계가 존재하나, 공조를 통해 상위기관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독립법인에 비해 유리함.

③ 대학 부설 연구센터(3안) 시나리오

-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대학부설 연구센터는 1안과 2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지속가능위나 국조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함.
- (정책 지원의 용이성) 대학부설 연구센터의 경우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비해 정책지원기능이 후순위 기능이라는 점에서 독립 법인으로서의 연구센터나 기관 부설 연구센터 형태에 비해 한계가 있음.
- (조직 규모 및 대응가능성)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1안이나 2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내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험과 역량이 1안과 2안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④ 학-연 네트워크 모델(4안) 시나리오

-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학연 네트워크 모델은 대학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책지원기능을 출연연과의 연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력의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구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정책 지원의 용이성) 대학의 지속가능발전 전문성에 기반하여 출연연의 기존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접근이 될 수 있음.
 - (조직 규모 및 대응가능성) 출연연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시에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2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수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대학 및 출연연에서 모두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 없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협력의 관리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음.

<표 V-8> 정부 지원 기능 시나리오 분석

조직구성안	정부 지원 기능
<p>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연구와 실무의 간극 완화가능 -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 법인은 정책 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좀 더 여유가 존재 -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나 협력기능 확보가 어려움
<p>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조직형태로, 상위 기관에서 정책 지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규 연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음 -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설 센터의 경우 정책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 - 기존의 출연연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 없어 한계가 존재하나, 상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독립법인에 비해 유리함
<p>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비해 정책지원 기능이 후순위 기능이라는 점에서 독립 법인으로서의 연구센터나 기관 부설 연구센터 형태에 비해 한계가 존재 -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원하는데 있어 부설센터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정책지원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 없어 독립법인에 비해 한계 존재
<p>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기존 출연연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인 접근이 가능. - 출연연과 대학의 인적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대학 및 출연연에서 모두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 없고,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가. 조직구성안 별 시나리오 분석 Ⅲ: 평가 기능

① 독립 법인 연구센터(1안) 시나리오

-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독립 법인으로 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 개발에서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정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음.
 - (평가의 공신력 확보) 독립 법인으로 설립된 연구센터이므로 상위 기관의 영향력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수준을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지표개발의 전문성) 신규 기관이라는 점에서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평가를 진행한 경험이 많은 출연연 산하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 또한 평가지표의 활용에 있어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나 통계청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기능적 중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기 위한 권한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서 결과의 반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필수적인데 독립법인의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단순한 선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문제가 있음.

② 기관 부설 연구센터(2안) 시나리오

-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기존의 유사한 평가경험이 많은 출연연 및 기관 부설로 연구센터가 설치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수행가능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환류를 진행하기 위한 권한을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객관성 확보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음.
 - (평가의 공신력 확보) 기존의 출연연 및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위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평가과정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됨. 외부 전문가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

고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들이 납득 가능한 평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함.

- (지표개발의 전문성) 소속 기관에서 기존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함. 특히, 국조실 산하에서 진행되는 환경연의 환경영향평가 나 노동연의 고용영향평가 등 유사한 평가들이 수행되어왔다는 점에서 연계성 확보에 용이함.
- (평가 및 보고서 결과의 반영) 국조실이나 지속위 산하에 국가지속가능 발전 연구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기관 간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③ 대학 부설 연구센터(3안) 시나리오

-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 학내외 네트워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평가의 공신력 확보) 대학 산하에 설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지표개발의 전문성) 지표개발 과정에서 학내외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환경, 보건, 복지, 경제, 농업, 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서 결과의 반영) 정부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 선언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④ 학-연 네트워크 모델(4안) 시나리오

-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학연네트워크 모형은 2안의 평가결과 및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환류기능과 3안의 전문성 확보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출연연과 대학의 네트워크에서 중심축

이 모호할 경우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음.

- (평가의 공신력 확보) 학계와 출연연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각적으로 평가를 수행가능하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출연연에 비해 대학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존재함.
- (지표개발의 전문성) 3안과 동일하게 지표개발 과정에서 학내와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학과 출연연 중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평가 및 보고서 결과의 반영) 학연네트워크는 대학 부설 연구센터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국조실과의 연계를 통해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연네트워크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과 「사립학교법」 중 대상 법령이 모호하여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전에 학연네트워크가 성공한 사례가 아직 한국에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표 V-9>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시나리오 분석

조직구성안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p>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신력 확보 가능 - 지표개발 과정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필요한데 독립법인의 경우 권한이 약할 수 있어 선언 수준에 머물 수 있음
<p>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출연연 및 기관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위 기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신력 확보를 위해 평가과정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 - 유사한 평가들이 경사연 산하 기관에서 수행되어 왔으므로 연계성 확보 가능 (예. 환경연의 환경영향평가, 노동연의 고용영향평가 등) - 국조실이나 지속위 산하에 설치될 경우 소통이 용이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정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p>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산하에 설치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목표의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공신력 확보 가능 - 지표개발 과정에서 학내외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환경, 보건, 복지, 경제, 농업, 통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정부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 선언 수준에서 머물 수 있음
<p>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각적으로 평가를 수행가능하므로 평가의 공신력 확보 가능. - 3안과 동일하게 지표개발 과정에서 학내외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학연네트워크는 대학 부설 연구센터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국조실과의 연계를 통해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 대학과 출연연 중 중심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2)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종합

(1) 분석결과 요약

가. 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안)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대학에 비해 실무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독립성있게 생산할 수 있으나, 출연연간 기능 중첩으로 인해 자원 투입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것 또한 용이함.
- (정부 지원 기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무적 경험이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부설 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및 조정을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함. 그러나, 거버넌스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버넌스를 주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 독립법인 연구센터이기 때문 객관성 확보가 가능하여 공신력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지표 경험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의 결과를 환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경우 3안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기능은 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조정권한을 가진 국조실이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2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한 협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의 경우 한계가 존재함.

나. 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립(안)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대학에 비해 실무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식을 생산할 수 있으나, 소속 기관의 전략적 방향성에 의해 연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립성은 1안에 비해 부족할 수 있음. 출연연간 기능 중첩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속 기관의 조정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음. 독립적인 연구 기관인 1안에 비해 기관의 하위 부서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인력 및 자원 부족으로 교육기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 (정부 지원 기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무적 경험이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지원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소속 기관의 전문성 활용할 수 있음, 부설 기관이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정책지원 및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EPA 사례처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및 국조실의 충분한 권한부여가 필요할 수 있음. 소속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격버넌스를 주도하기 상대적으로 쉬움.
-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소속 기관의 영향에 의해 평가에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시선이 있을수 있어 공신력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전문성있는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연, 노동연 등 국조실 산하 기관들의 경우 평가 경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음. 국조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나머지 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권한이 강하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의 결과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주요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경우 3안에 비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기능은 3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함. 다만, 1안의 독립 법인 설치에 비해 산하 연구센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을 수 있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할 수 있음. 조정권한을 가진 국조실이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하에 설치될 경우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가 용이함.

다. 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안)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1안과 2안에 비해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적 주제에 대한 연구를 독립성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연과의 기능 중첩으로 인해 자원 투입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음. 대학 내 존재하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므로써 교육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 (정부 지원 기능) 1안과 2안에 비해 연구진들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

무적 경험이 부족하고, 조사, 연구, 교육 기능에 비해 정책 지원 기능은 후순위라는 점에서 정책지원에서 한계가 있음. 대학 내 연구자원을 활용하고 사업비성 예산을 산악협력단에 지급하고 R&D 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좀 더 규모가 큰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연구만을 전담하는 1안이나 2안에 비해 한계가 존재함. 교내 연구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학계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함.

-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대학 내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표를 개발하고 공신력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조정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결과보고서의 결과를 환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따라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경우 1안과 2안에 비해 학내외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정부 지원 기능은 1안과 2안이 상대적으로 장점이 존재함. 정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환류를 위한 조정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2안에 비해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의 경우 제한됨.

라.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안)

-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실무경험에 기반하여 적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안과 3안의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 출연연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자원 투입의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학연네트워크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 연구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효성이 존재함. 대학 내 존재하는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므로써 교육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 (정부 지원 기능) 대학의 전문성과 출연연의 정책지원 경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통해 2안과 3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또한 출연연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지원이 용이하고 보다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존재함. 교내 연구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경험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하여 가치중립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는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계 및 출연연과의 연계성을 통해 공신성 있는 지표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2안에서처럼 조정권한을 가진 국조실이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가 용이함.
- 따라서, 조사, 연구, 교육 기능의 경우 대학 및 출연연의 장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확보 할 수 있어 장점이 있음. 3안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지는 정부 지원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조정권한을 가진 국조실이나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에 기반한 환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 그러나, 이전에 말한 것처럼 출연연 및 대학 중 네트워크의 주도권이 불확실 한 경우 협력과정에서 조율이 어려울 수 있고, 한국적 상황에서 학연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대학과 출연연이 서로 다른 법 산하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학연네트워크로 설립되어지는 경우 그 분류가 다소 모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표 V-10> 시나리오 분석결과의 종합

조직 구성안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정부 지원 기능			지속가능발전 평가 기능		
	독립성	중첩 가능성	이해 관계자 교육	지원 용이성	조직 규모, 대응성	이해 관계자 거버넌스	평가 공신력	지표 개발 전문성	평가 환류
1안. 독립 법인 연구 센터	실무적 연구 중심, 독립성 확보 가능	기능적 중첩 가능성 有	교육 기능 확보 가능	정책 지원 용이	정책 지원 및 조정을 위한 인력 확보 가능	거버넌스 주도 경험 부족	객관성 확보 용이	2,3안 대비 약함	평가 환류 권한 약함
2안. 기관 부설 연구 센터	실무적 연구 중심, 소속 기관의 영향	기능적 중첩 가능성 有, 상위 기관 조정 가능	규모의 한계로 교육 기능 약함	소속 기관 전문성 확보해 지원 용이	1안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아집 권한 조정 필요	소속 기관 네트워크 활용 가능	전문성 있는 평가 가능, 객관성 확보 노력 필요	국조실 산하 기관 연계 용이	평가 환류 권한 존재
3안. 대학 부설 연구 센터	혁신적 연구 가능, 독립성 매우 높음	출연연과의 기능적 중첩 가능성 낮음	대학 인프라 활용 가능	정책 지원 기능이 후순위	대학 내 자원 확보의 상대적 어려움	거버넌스 주도 기능 약함	전문성 확보 가능, 공신력 높음	학내 네트워크 활용 전문성	평가 환류 권한 매우 약함
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	높은 편이나 소속, 선례가 없음	출연연과의 기능적 중첩 가능성 有	대학 인프라 활용 가능	전문성과 지원 기능 상호 보완	출연연 대학 인적 물적 자원 동시 활용	거버넌스 주도 경험 부족	전문성 확보 가능, 공신력 높음	학내 및 출연연 연계 용이	평가 환류 권한 존재

제6장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 방안

- 제1절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모델 도출
- 제2절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제3절 결론: 연구요약

VI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 방안



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모델 도출

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운영모델 도출 방향

- 본 절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시 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도출하였음
- 센터 설립 초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에 제시된 운영모델을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맞추어 축소된 형태로 출범하되 중장기적으로 아래 모델을 향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모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먼저 조직구성 및 기능별 업무분장 안을 도출한 뒤, 센터의 운영 규정(안)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함

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1) 조직구성

가. 조직구성 방향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조사/연구/교육, 정부 지원, 지속가능발전 평가라는 3대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내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고,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센터는 지속가능발전 연구 및 교육, 정부 정책 지원,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추면서도, 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함
- 동시에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설계하

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존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속가능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부서를 확보하되, 전체적인 조직구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

○ 따라서,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3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1센터 4부 8팀으로 구성한다.
- 4부는 기본법을 기준으로 도출된 3대 잠재적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부, 정책지원부, 평가 및 국제협력부, 운영부로 구성되며 개별 부 내에 팀은 도출된 하위기능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음.

나. 조사 및 연구부

○ 조사 및 연구부는 첫번째 잠재적 기능인 조사, 연구, 교육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기관들에 기대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로 조사팀, 연구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책 홍보 및 교육, 정보 수집과 연구, 국제 동향 분석, 온라인 시민 참여 촉진과 같이 지속가능발전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함.
- 장기적 관점에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저변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동시에 정책적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한 지식을 생산하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역할을 함.

다. 정책지원부

○ 정책지원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두 번째 잠재적 기능인 정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전략지원팀, 법제지원팀으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 국가 및 지방 전략의 수립과 이행, 정책 조정 및 법령 제·

개정 지원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실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조사 및 연구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적 및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의견 제안을 통해 개선방향성을 타진하고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라. 평가 및 국제협력부

- 평가 및 국제협력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수준을 평가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번째 잠재적 기능인 지속가능발전평가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로 평가팀 및 국제협력팀으로 구성.
- 지속가능 발전 지표 체계의 구축,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직접 수행거나 수행주체를 지원하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을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함.
-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함.

마. 경영지원부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운영팀으로 구성됨.
- 예산 수립, 자금 조달, 비용 관리 등 총무 및 예산관련 업무, 인력의 채용과 관리, 센터 업무의 자체평가, 공모 및 발주사업 등을 주관하는 등 경영지원관련 역할을 수행함.

<표 VI-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

구분	부명	팀명	주요업무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사 및 연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연구, 교육기능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기관들에 기대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서로 조사팀, 연구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책 홍보 및 교육, 정보 수집과 연구, 국제 동향 분석, 온라인 시민 참여 촉진과 같이 지속가능발전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국내외 협력 등 관련 자료전달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운영)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도·정책 정비 방향성 검토에 대한 사항 · 학술적 연구, 정보교환, 기술개발 등 지원에 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비전의 도출에 대한 사항
		교육홍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교육 및 홍보로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 · 일반인 및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 (학교 교육 연계, 모범 기업·단체 인증, 조사·연구, 대중매체 홍보,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 주민 참여 및 온라인 참여 촉진과 관련된 사항
	정책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로 전략지원팀, 법제지원팀으로 구성. ·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정책의견 제안을 통해 개선방향성을 타진하고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지원 제공 	
	전략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변경 지원 관련 사항 ·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이행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관련 사항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법제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관련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재·개정 지원, 법령안 및 중장기 행정계획안 및 검토 관련 사항
평가 및 국제 협력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수준을 평가하거나 이를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서로 평가팀 및 국제협력팀으로 구성. ·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
	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 및 보급 지원 관련 사항 ·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원 관련 사항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달성, 투입 행정비용 대비 행정효과, 자료요청, 전문가 위촉을 통한 평가 수행 혹은 위탁, 결과 통보 등)
	국제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국외기관과의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 · 글로벌 협력 및 정보 교류 강화에 관한 사항
경영 지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운영팀으로 구성 · 예산 수립, 자금 조달, 비용 관리 등 총무 및 예산관련 업무, 인력의 채용과 관리, 센터 업무의 자체평가, 공모 및 발주사업 등을 주관
	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수립, 자금 조달, 비용 관리 등 예산관련 사항 · 인력의 채용과 관리 등 인사관련 사항 · 센터 업무의 자체평가, 공모 및 발주사업 등을 주관하는 등 경영지원 관련된 사항

(2) 업무분장 및 세부 사업내용

가. 조사 및 연구부

- 조사 및 연구부는 조사팀, 연구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계함.
 - 조사 및 연구부를 총괄하고 팀 간 업무조정을 위해 부장 1명을 배치
- 조사팀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함. 또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국내 및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력들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지원을 위한 인력(3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지속가능발전기본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국내외 협력을 위한 관련 자료수집 및 품질관리를 강조하고, 공공부문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여야하므로 정보망의 구축 및 관리는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예상됨
- 연구팀은 국내 제도와 정책의 정비 방향성을 검토하고, 학술적 연구, 정보 교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음.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며 국내 제도 및 정책 정비 방향성을 검토하고 관련 지표 수집 및 통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박사급 연구원이 최소 3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구 및 과제 지원 관련 인원 또한 배치되어 연구 협력을 지원해야 함
- 교육홍보팀은 이해관계자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교 교육과 연계하거나 모범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주민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촉진하는 업무도 맡고 있음.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담당할 인원과 홍보를 담당할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업무분장을 고려하였을 때, 부장 1명, 팀장 3명, 팀원 13명, 총원 17명 정도로 예상됨.

<표 VI-2> 조사 및 연구부 업무분장 예시

부 명	팀명	인원	담당업무
조 사 및 연 구 부	총괄	1 (부장)	· 조사 및 연구부 총괄 · 팀 간 조율 및 관리
	조사팀	1 (팀장)	· 지속가능발전 조사업무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행규정 및 제도 검토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기업·국민에 정보 제공 총괄
		2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정보 수집 및 분석
		2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분석
		5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국내외 협력 등 관련 자료전달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지원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수집된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 정보망에 최신화 및 품질관리
	연구팀	1 (팀장)	· 지속가능발전 연구지원 총괄 및 중장기 비전의 도출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지원 및 외부전문가와 조율
		3	· 국내 제도·정책 정비 방향성 검토 · 국내외 제도·정책, 지표, 통계자료 및 동향의 수집·분석 ·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2	· 학술적 연구, 정보교환, 기술개발 등 지원에 대한 사항 · 연구과제 협약 및 대형과제 기획 · 사업공고 및 공지사항 안내 ·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비 관리
		2	· 정부 및 공공기관 용역 관리 ·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비 관리
	교육 홍보팀	1 (팀장)	·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총괄 및 관리 ·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 이해관계자(정부, 공공기관, NGO, 기업 등)와의 협력 및 소통
		3	·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교육 자료 및 교재 개발
		3	· 대중매체(신문, TV, 라디오), 뉴미디어 협력 및 콘텐츠 제작지원 ·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 온라인 참여 촉진 캠페인 운영

나. 정책지원부

- 정책지원부는 전략지원팀, 법제지원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계함.
 - 정책지원부를 총괄하고 팀 간 업무조정을 위해 부장 1명을 배치. 특히 정책지원부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이 강조
- 전략지원팀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지원을 담당함. 또한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변경 및 이행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진행함.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변경 및 지원을 위해 인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장 조사 및 피드백 수집을 위해 인원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법제지원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재·개정 지원과 법령안, 중장기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담당하고.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분석을 위한 변호사 혹은 이에 준하는 행정법에 익숙한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책 분석을 수행하고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의견제출을 담당할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표 VI-3> 정책지원부 업무분장 예시

부명	팀명	인원	담당업무
정책지원부	총괄	1 (부장)	· 정책지원부 총괄 및 팀 간 조율 · 유관기관 대외협력 담당
	전략지원팀	1 (팀장)	· 전략 지원 방향설정 및 의사결정 · 지속가능발전 국가, 지방기본전략 수립/변경 지원 ·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 협의 및 조정 · 정책 제안 및 개선방안 도출
		4	·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 현장 조사 및 피드백 수집 후 이행계획 조정 · 관련 보고서 작성
		4	· 지속가능발전 지방추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 현장 조사 및 피드백 수집 후 이행계획 조정 · 관련 보고서 작성

법제 지원팀	1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 지원 방향 설정 및 업무 조정 . 법령 재·개정 과정 조율 및 지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 재·개정 과정 지원 . 법령 분석 및 재·개정 관련 자료 준비 .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 정책 분석 및 의견 제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검토 및 중장기 행정계획안 업무지원 . 법제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

다. 평가 및 국제협력부

- 평가 및 국제협력부는 평가팀, 국제협력팀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계함.
 - 평가 및 국제협력부를 총괄하고 팀 간 업무조정을 위해 부장 1명을 배치. 특히 평가 및 국제협력부의 경우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이 강조되므로 부장의 역할이 중요.
- 평가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며,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 행정비용 대비 효과, 자료 요청 및 결과 통보 등을 관리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의 평가를 전문가를 위촉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요청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평가보고서에 의거하여 기관별 개선사항 협의 및 협조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정을 지원할 수 있음.
- 국제협력팀은 국제협력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며, 글로벌 협력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글로벌 협력을 위해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국제협력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4> 평가 및 국제협력부 업무분장 예시

부명	팀명	인원	담당업무
평가 및 국제협력부	총괄	1 (부장)	· 평가 및 국제협력부 및 팀 간 조율 · 유관기관 대외협력 담당
	평가팀	1 (팀장)	· 지속가능발전평가 계획 총괄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 지속가능발전평가 관리 및 팀 조율 · 기관 요청 및 협조 관리
		4	·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개발지원 · 지표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4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달성 평가지원 · 자료 요청 및 수집,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기관 개선사항 협의 및 협조 요청, 관리
		3	· 평가 관련 행정 업무 수행 · 외부 평가 전문가 협의 관리
	국제협력팀	1 (팀장)	· 국제 협력 전략 수립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외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 · 기관 요청 및 협조 관리
		3	·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 국제회의 및 포럼 지원을 통한 국제기관과의 관계 유지
		3	· 국외 기관들과의 네트워킹 지원 · 국제 협력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라. 경영지원부

- 경영지원부는 운영팀으로 구성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계함.
 - 경영지원부를 총괄하고 업무조정을 위해 부장 1명을 배치
- 운영팀은 예산 수립과 자금 조달, 비용 관리, 인사 채용과 관리, 센터 업무의 자체 평가 및 공모, 발주 사업 주관 등 경영지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며 사업계획, 연구센터 예산관리, 인사, 총무, 문서 관리등의 일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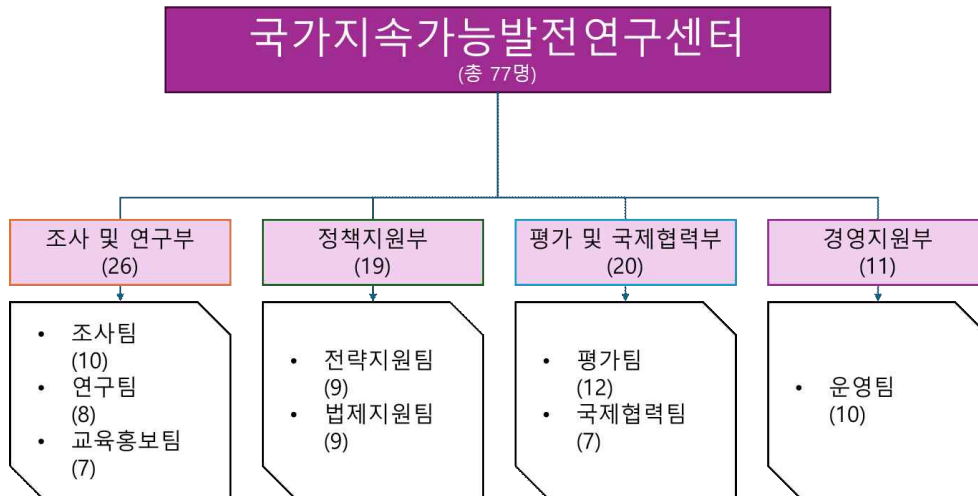
<표 VI-5> 경영지원부 업무분장 예시

부 명	팀명	인원	담당업무
경 영 지 원 부	총괄	1 (부장)	· 운영팀의 업무 조정 및 관리 · 센터장의 활동에 대한 지원
	운영팀	1 (팀장)	· 중점사업계획, 인원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지원 · 연구센터 규정의 개정/재정 및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 조직 개발 및 조직 개편에 대한 업무 총괄
		3	· 예산 수립 및 예산계획 수립 · 비용관리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 연구센터 재무보고 및 결산조정 지원
		3	· 조직개편 및 조직도 체계변경 및 개선 담당 ·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 직원 교육 및 개발 계획 수립 · 성과평가 및 각종 인사행정관련 담당
		3	· 문서 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 회의 및 행사 준비 등 기타지원업무 수행

○ 위에서 논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조직구성안을 토대로 조직도 예시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 1센터 4부 8팀으로 구성되며, 총원은 80여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센터장 1명에 각 부별로 부장 1명씩을 포함하여 조사 및 연구부 26명, 정책지원부 19명, 평가 및 국제협력부 20명, 경영지원부 11명)

<그림 VI-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도 예시



3) 연구센터 설립·운영 규정(안) 예시

(1) 설립·운영 규정(안) 예시

- 위에서 제시한 조직구성안을 기준으로 설립 및 운영 규정안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VI-6>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운영 규정(안) 예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이 연구센터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안)(이하 센터)이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 ① 이 센터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① 이 센터는 주된 사무소를 ○○도 ○○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 ① 연구원은 2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고취, 정보교환, 자료수집 및 정리사업 등을 수행
 4. 국가기관 및 외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의 조사·연구 및 용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국제/국내학술세미나, 정책세미나, 센터내부세미나, 초청강좌 등을 위한 전문가 육성 및 파견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총서 발간
 8.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 및 운영
 9.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센터장 1인
 3. 이사 약간 명 이내 (원장 포함)
 4. 감사 약간 명 이내
- ②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 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센터장)

-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및 정책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으로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이사회)

- ① 연구센터 운영의 목적과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연구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③ 이사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제9조 (조직구성)

- ① 센터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 및 팀을 구성한다.:
 - 1. 조사 및 연구부: 조사팀, 연구팀, 교육홍보팀
 - 2. 정책지원부: 전략지원팀, 법제지원팀
 - 3. 평가 및 국제협력부: 평가팀, 국제협력팀
 - 4. 경영지원부: 운영팀
- ② 각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및 연구부
 - 가. 조사팀: 해외제도 및 정책동향 조사, 정보수집,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및 운영 등
 - 나. 연구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수행 및 지식 생산
 - 다. 교육홍보팀: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홍보 등
 - 정책지원부
 - 가. 전략지원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지원
 - 나. 법제지원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 평가 및 국제협력부
 - 가. 평가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수행
 - 나. 국제협력팀: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업무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경영지원부
 - 가. 운영팀: 센터 인력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기타 행정 업무 수행
- ③ 센터장은 필요에 따라 팀별 업무량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구성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부서장)

- ① 각 부에는 부장을 둔다.
- ② 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 ③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팀장)

- ① 각 팀에는 팀장을 둔다.
 - ② 팀장은 해당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원들의 업무를 조정·관리한다.
-

③ 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인건비)

① 인적 구성원의 인건비는 목적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장이 정한다.

제3장 인사

제13조 (임용)

-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특별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 ③ 연구직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제14조 (승진)

-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 실적, 센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 ②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평가)

- ①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의 정기 평가를 받는다.
- ② 연구직의 경우, 연구 실적, 학술활동,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③ 행정직의 경우, 정책 지원 실적, 법제 개선 기여도, 전략 수립 참여도 등을 평가한다.
- ④ 평가 결과는 승진, 보수,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4장 복무

제16조 (복무원칙)

- ① 모든 직원은 센터의 사명과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실천하고 증진해야 한다.

제17조 (겸직 및 외부활동)

- ① 직원은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연구직 및 행정직 직원의 학술활동과 자문 등의 외부활동은 장려하되, 센터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연구 및 정책 윤리)

- ① 모든 연구 및 정책 지원 활동은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② 연구 및 정책 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윤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 (재원)

- ①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출연금
 - 2. 연구용역 및 정책자문 수입
 - 3. 교육 및 홍보 사업 수입
 - 4. 기부금 및 후원금
 - 5.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 (예산)

-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③ 확정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1조 (결산)

-
-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 ② 센터는 매년 독립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2조 (연구비관리)

- ①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사업은 연구비중앙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6장 연구 및 정책 지원 관리

제23조 (실적)

- ① 연구센터장은 매 2년마다 연구기관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학술연구위원회의 조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연구과제 및 정책 지원 과제 선정)

- ① 연구과제 및 정책 지원 과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의 연계성, 시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② 연구과제 및 정책 지원 과제 선정 절차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성과 관리)

- ① 모든 연구 결과물과 정책 지원 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② 주요 연구 성과는 학술지 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의 방식으로 공유한다.
- ③ 주요 정책 지원 성과는 정책 제안, 법령 개정안, 전략 보고서 등의 형태로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제26조 (해산 및 폐지)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센터를 해산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1. 연구센터의 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다를 때
 - 2. 연구센터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27조 (재산의 귀속)

- ① 연구센터가 해산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연구센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28조 (기타)

- ① 기타 필요한 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규정의 변경)

- ①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세부규정)

-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1조(시행일)

- ① 이 규정은 20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소요 예산 및 조달 계획

가. 소요 예산

- 일반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소요예산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음.
 - 알리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이 공개되어 있으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경우 초기 소요예산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해당 부분을 산출에서 고려함
-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가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된다고 가정하여 2024년 기준 수입 및 지출 현황자료의 기관별 지출 예산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 V-7>과 같다.
 - 평균 임직원 규모는 203.8명이고, 지출 항목별로 인건비는 180.7억, 경상운영비는 27.3억, 사업비는 219.5억으로 나타남.
 - 각 기관별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임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약 8,798만원, 임직원 1인당 경상운영비는 약 1,49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임직원 1인당 경상운영비는 약 9,843만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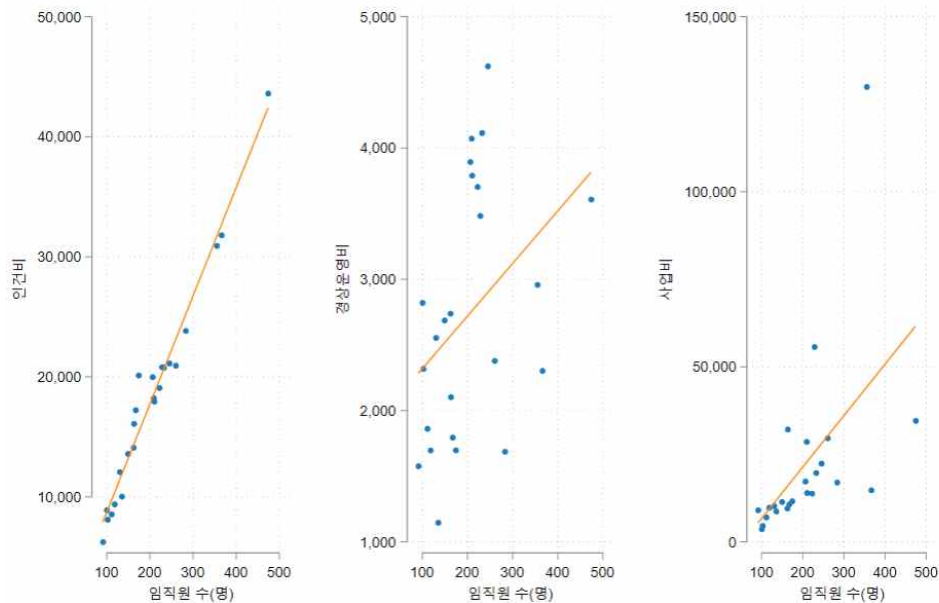
<표 VI-7>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출 (2024년 예산기준, 출처: ALIO)

기관명	임직원 총원 (명)	인건비 (백만원)	경상 운영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임직원 1인당 인건비 (백만원)	임직원 1인당 경상 운영비 (백만원)	임직원 1인당 사업비 (백만원)
한국경제개발원	474	43,617	3,609	34,631	92.0	7.6	7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66	31,812	2,304	14,802	86.9	6.3	4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5	30,928	2,959	129,992	87.1	8.3	366.2
국토연구원	283	23,843	1,688	17,013	84.3	6.0	6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0	20,949	2,380	29,662	80.6	9.2	114.1
한국교통연구원	245	21,130	4,624	22,399	86.2	18.9	91.4
한국환경연구원	232	20,772	4,116	19,738	89.5	17.7	85.1
한국교육개발원	228	20,823	3,484	55,736	91.3	15.3	24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2	19,088	3,705	13,849	86.0	16.7	6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0	17,954	3,791	14,025	85.5	18.1	66.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9	18,244	4,073	28,615	87.3	19.5	136.9
산업연구원	206	19,990	3,895	17,293	97.0	18.9	83.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4	20,137	1,699	11,651	115.7	9.8	67.0
에너지경제연구원	167	17,239	1,796	10,796	103.2	10.8	64.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	16,104	2,104	32,152	98.8	12.9	197.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2	14,118	2,740	9,600	87.1	16.9	59.3
한국노동연구원	149	13,599	2,688	11,467	91.3	18.0	77.0
한국법제연구원	135	10,042	1,147	8,757	74.4	8.5	64.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	12,086	2,555	10,275	93.0	19.7	79.0
한국행정연구원	118	9,393	1,698	9,797	79.6	14.4	83.0
건축공간연구원	111	8,563	1,863	7,047	77.1	16.8	63.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2	8,115	2,319	4,611	79.6	22.7	45.2
통일연구원	100	8,910	2,822	3,691	89.1	28.2	36.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1	6,254	1,578	9,094	68.7	17.3	99.9
평균	2038	18,071.3	2,734.9	21,945.5	88.0	14.9	98.4

- <그림 V-2>를 통해 확인하였을 때,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모두 임직원 수에 비례하고 있으므로 변수를 통해 예측값을 계산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예상되는 조직규모에 따른 지출예산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그림 VI-2> 임직원 수 대비 비용 항목별 규모



- 임직원 수를 독립변수로 한 비용 항목들에 대한 예측 회귀분석 결과 표는 다음 <표 V-8>과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

터의 예상 조직규모에 따른 지출액을 추정하였음.

- 앞 절에서 제시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구성안을 기준으로 총 임직원의 수가 약 70명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지출예산 추정액을 추정한 결과는 <표 V-8>로 정리하였음
- 만약 임직원이 70명일 경우 인건비 약 60억원, 경상운영비 약 22억원, 사업비 약 23억원 총액 105억원으로 추정됨
- 만약 임직원이 75명일 경우 인건비 약 65억원, 경상운영비 약 22억원, 사업비 약 30억원 총액 116억원으로 추정됨
- 만약 임직원이 80명일 경우 인건비 약 69억원, 경상운영비 약 22억원, 사업비 약 38억원 총액 129억원으로 추정됨
- 유사 연구센터 소요예산 추정에서 경상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자료에 나타난 인건비 대비 제반경비 비율 28%를 적용하여 계산한 값(원두환 외, 2021)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표 VI-8> 임직원 수에 따른 지출 회귀분석 결과

비용 변수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상수항	-299.1 (693.8)	1918.9*** (315.3)	-8009.4 (12564.7)
임직원 수(명)	90.12*** (2.700)	4.003** (1.467)	147.0* (81.09)
관측치	24	24	24
R-squared	.968	.15	.286

* 괄호 안에는 강건표준오차, * p<.10 ** p<.05 *** p<.01

<표 VI-9> 임직원 수에 따른 지출추정 결과

예상 임직원 수 (명)	추정된 인건비 예산 (백만원)	추정된 경상운영비 예산 (백만원)	추정된 사업비 예산 (백만원)	추정된 총 지출 예산 (백만원)
65	5,558.7	2,179.1	1,545.6	9,283.4
70	6,009.3	2,199.1	2,280.6	10,489.0
75	6,459.9	2,219.1	3,015.6	11,694.6
80	6,910.5	2,239.1	3,750.6	12,900.2
85	7,361.1	2,259.2	4,485.6	14,105.9
90	7,811.7	2,279.2	5,220.6	15,311.5
95	8,262.3	2,299.2	5,955.6	16,517.1

나. 조달 계획

- 조직 구성안에서 제시된 임직원 수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금출자가 필요함.
- <표 V-7>은 국무조정실 산하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수입 출처를 정리한 표로 총 수입의 상당부분을 정부직접지원(즉,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평균 약 39.4%).
-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의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한 수입액인 사업수익의 경우 참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다른 산학협력단이나, 다른 민간기업체)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센터의 경우 출연금을 통한 정부직접지원과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사업수입을 통한 정부간접지원이 주 수입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VI-10>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입 현황 (2024년 예산기준, 출처: ALIO)

기관명	임직원 총원 (명)	정부 직접지원	정부 간접지원		총 수입 (백 만원)
		출연금 (백만원)	사업수입 (백만원)	위탁수입 (백만원)	
한국경제개발원	474	46,106	32,185	0	84,5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66	37,818	0	0	48,9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5	25,327	94,098	47,701	167,606
국토연구원	283	22,185	18,385	0	45,53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0	21,305	19,831	10,460	55,344
한국교통연구원	245	18,858	22,578	4,515	55,691
한국환경연구원	232	21,745	21,489	0	47,483
한국교육개발원	228	22,219	59,974	0	85,48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2	29,816	2,796	0	36,7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0	23,871	9,795	0	35,7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9	22,543	28,049	0	50,932
산업연구원	206	24,965	0	0	43,9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4	15,217	14,703	0	35,131
에너지경제연구원	167	11,631	0	7,489	30,8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63	17,285	12,065	16,680	51,66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2	16,914	8,325	0	27,243
한국노동연구원	149	15,849	10,499	0	28,079
한국법제연구원	135	13,874	8,879	0	21,6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0	16,087	0	0	25,006
한국행정연구원	118	13,906	0	0	21,340
건축공간연구원	111	11,887	5,435	0	17,47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2	13,379	1,611	0	15,045
통일연구원	100	10,926	387	0	15,45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1	9,959	6,902	0	16,926
평균	203.8	20,153	15,749	3,619	51,021

○ 또한, 초기의 조직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위탁 사업을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립 초기 2년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건물의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금에 대한 초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의 경우 임직원 수 75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33억(11,694.6백만원 x 2)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기관이 배치되는 건물의 5년간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는 자본금이 필요함. 사무실은 임직원 수 7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무직 노동자의 1인당 사무실 점유면적을 17.75m²(5.37평/인)으로 추정되고 있고(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이에 따라 총 사무실 면적 1,331.25m²(402.7평)이 필요함.
- 사무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세종시 기준 평균적인 사무실 임대료 10만원/평/월(<https://www.officefind.co.kr/>)을 기준으로 약 24억(10만원*402.7평*60개월)으로 추산됨
- 따라서, 초기 납입자본금의 규모는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사업비 약 233억, 임대료 약 24억의 합으로 약 257억원 정도로 추산됨.

2.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1)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도출

- 본 절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각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각 기관별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며 어떤 방식의 협력 방안이 가능한지 제시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출범에 앞서 미래에 예상되는 협력 방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는 만큼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된 두 가지 주요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함.

2)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언 (1): 네트워크 허브

(1) 협력 거버넌스 전략: 네트워크 허브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 연구기관 간 협력을 구현하는데 있어 신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중심 축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네트워크 허브는 다양한 기관, 조직, 개인이 상호 연결되고 협력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플랫폼을 의미. 독립된 형태의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형성됨.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 독립된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음.
- 정부부처, 시민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들이 현재의 독립된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여러 제약조건들로 인해서 실질적 의미의 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대학에 있는 연구인력들이 겸임교수(affiliation) 제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구기관에 물리적으로 소속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형태로 협력함으로써 기존 조직간 경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 허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의 중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상호작용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네트워크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유연성: 네트워크 허브는 위계적 구조와 달리 유연한 구조를 가지며,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 이는 조직 간의 경직된 구조를 탈피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함.
 - 협력 증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 자발성에 기반하는 네트워크 조직은 매우 효과적임. 또한 중앙집중식 관리가 아닌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음. 또한 네트워크 허브는 각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가능함.
 - 다양한 관점의 통합: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참여자들이 조직 간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해짐. 이는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리함.

(2)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가. 중앙정부의 역할

- 네트워크 허브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야함.
- 현재 협력적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 없는 이유는 법적 제도에 의해서 제약받기 때문으로 보임.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에 영향을 받고,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두가지 법률 조항 모두에 중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호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나. 지자체의 역할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함.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민들 및 지역 내 전문가들의 시각을 반영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 공공기관의 역할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하여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하여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함.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작업을 줄이고, 협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협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연구와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함.

라. 민간단체의 역할

- 기업 및 여러 민간단체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민간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부문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민간 부문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협력의 창의성을 높여야함. 민간 부문의 경험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야함.

3)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제언 (2): 애자일 조직

(1) 협력 거버넌스 전략: 애자일 조직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첫째, 현재 한국에서는 조직 간 및 조직 내 부서 간의 장벽(silo)으로 인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둘째, 공공부문은 법적 제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연한 협력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중심으로 모여, 애자일(Agile)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 애자일(agile):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피드백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팀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여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론
 - 고정된 부서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팀워크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표를 가짐.
- 애자일 관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의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유연성: 조직이 환경 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정된 구조를 탈피하고 유연한 조직구조를 채택할 수 있음. 특히 이는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문제대응적 의사결정: 전통적인 관료적 의사결정 과정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현장에 위임하여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통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 자율성 부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 비영리 부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중앙에서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자율성은 하향식 접근의 한계를 극복

하고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함.

- 연결성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극대화함. 이는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물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만듦.

(2) 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

가. 중앙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정책을 애자일 방식으로 양방향 소통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정책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게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애자일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플랫폼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함.
-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달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함.

나.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애자일하게 수립함.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략을 개선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해야함.
- 지자체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애자일하게 대응하여 SDGs를 공동으로 달성하기위해 노력해야함. 지역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

다. 공공기관의 역할

- 공공기관은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기반으로 애자일한 협업 도구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정보와 자원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여,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함.
- 지속가능목표 관련 프로젝트를 애자일 방식으로 관리하며, 반복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높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조정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함.
-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지역 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원해야함.

라. 민간단체의 역할

- 민간단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애자일하게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공동 작업을 추진해야함. 여러 시민단체, 기업 등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서 적용가능한 아이디어들을 형성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과 개선 제안을 제공해야함.

3. 결론: 연구요약

- 이번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최적의 조직형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구성안을 도출하였음.
- 제1절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가지속발전연구센터의 운영 방향성을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정리하였음. 또한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방향성을 정리하였음.
- 제2절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 대한 법령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3대 잠재적 기능인 조사·연구·교육 기능, 정부지원 기능,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기능을 도출하였음.
- 제3절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도출한 3대 잠재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의 조직구성안을 검토하였음. 독립 법인 연구센터, 기관 부설 연구센터, 대학 부설 연구센터, 학연 네트워크 모델의 4가지 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분석되었음.
- 제4절에서는 각 조직 구성안인 독립 법인 연구센터, 기관 부설 연구센터, 대학 부설 연구센터, 학연 네트워크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3대 잠재적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개별 구성안들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적의 조직구성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제5절에서는 제4절에서 분석한 조직구성을 기반으로 센터가 수행할 3대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직설계 방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음. 또한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하였음.
- 제6절에서는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였음.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활용가능한 네트워크 허브 접근과 에자일 접근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여러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검토하였음.

-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달성해야 할 잠재적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안들을 분석하였음. 또한, 이러한 조직구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직 구성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신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향성을 모색하였음.

참 / 고 / 문 / 헌 /

[국 내 문 헌]

- 김병완 · 오수길 · 안병철 · 홍성운 · 한순금 · 김현순. (2018). H지방정부의 SDG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H. 세종: 환경부.
- 강원택. (2006).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SERI 연구에세이 45). 삼성경제연구소.
- 김상일 외. (2005). 서울시 업무공간 수요 예측 및 공급가능성 진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정렬, 장지호, 이도형, & 함요상. (2011). 전환기 정부기업관계의 논리와 전망 : 전문가 설문과 시나리오 분석. 한국행정연구, 20(1), 125-157.
- 박나리(2017). 공공부문 투명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2010-2015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고객만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4), 219-253
- 배정환 & 박진희. (2013). 국내 테러발생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5(6), 117-152.
- 성정희, 최지은, 김해동, 권순환, 이희섭, & 이태동. (2022). 해외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비교 연구: 한국 K-SDGs 발전 방안. 사회과학논집, 53(2), 1-21.
- 우창빈, 이주하, & 김태균.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추진 전략: 한국의 국제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4(2), 269-298.
- 이재완.(2015). 경영정보공시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공공기관 이슈포커스, 14, 20-24
- 이정석, 안소은, 김현노, 홍한움, 정행운, & 강선우. (2019).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 기본연구보고서, 2019, 1-406.
-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정연경, 최지은, 성정희, & 이태동. (2023).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변천 과정 고찰: 역사적 신제도주의 통합적 관점 적용. 환경정책, 31(4), 1-30.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9),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 통계개발원(2023).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
- 허경선. (2010).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와 활용: 알리오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44-74

[국 외 문 헌]

- Alexander, D. C. (2004). A Delphi study of the trends or events tha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California charter schools. *Digital Abstracts International*, 65 (10), 3629. (UMI No. 3150304).
- Bensoussan, B. E., & Fleisher, C. S. (2012). *Analysis without paralysis: 12 tools to make better strategic decisions*. NJ: FT Press.
- Birdsall, I. A. (2004). It seemed like a good idea at the time: The forces affecting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for an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Digital Abstracts International*, 65 (07), 2756. (UMI No. 3142229).
- Dalkey, N., & Helmer, O. (1963). An experimental application of the Delphi method to the use of experts. *Management science*, 9(3), 458-467.
- Delbeq, A., Van de Ven, A., &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 and Delphi processes*. Glenview, USA: Scott, Foresman and Company.
- Gustafson, D. H., Shukla, R. K., Delbecq, A., & Walster, G. W. (1973). A comparison study of differences in subjective likelihood estimates made by individuals, interacting groups, Delphi groups and nominal group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9(2), 280 ? 291.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 Lindgren, M., & Bandhold, H. (2003). *Scenario planning*. London: Palgrave.
- Meadowcroft, J.(2010).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AGE Handbook of Governance*. M. Bevir. London, Sage.
- Monkelbaan, J.(2019). *Gover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ingapore: Springer.
- Nambisan, S., Agarwal, R., & Tanniru, M. (1999). Organisational mechanisms for enhancing user innov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MIS Quarterly*, 23(8), 365 - 395.
- Rosenbaum, J. (1985). A College and University Curriculum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Careers in Non-Broadcast Private Telecommunications: A Delphi Method Survey of Professional Video Communicators. *Digital Abstracts International*, 46 (09), 2548. (UMI No. 8525512).

- Rowe, G., & Wright, G. (1999). The Delphi technique as a forecasting tool: issues and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5(4), 353-375.
- Skulmoski, G. J., Hartman, F. T., & Krahn, J. (2007). The Delphi method for graduate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search*, 6(1), 1-21.
- Wright, G., & Cairns, G. (2011). *Scenario thinking: Practical approaches to the future*. Berlin: Springer.
- Wynekoop, J. L. & Walz, D. B. (2000). Investigating traits of top performing software developer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13(3), 186 - 197.

[온라인 자료]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s://ncsd.go.kr/>

권해영 (2021. 9. 18). 정부, 개도국 온실가스 줄여 'NDC 40%' 달성...국외 감축 확대 검토.

통계청 지표누리(지속가능목표) <https://www.index.go.kr/sdg>

[법 률 정 보]

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 시행령).

부 록



부록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및 조사 대상자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전문가 델파이 1차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2.1)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성 보강 및 관련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가칭: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고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한국정책학회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을 보호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1.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근거법령’, ‘3.기본법에서 도출한 연구센터의 잠재적 역할’, ‘4. 조직구성안 개요’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에 근거, 정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2007년 처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법의 지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불완전한 하위법으로 법적 지위 변동되고,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학술적 관계, 법률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회복해야한다는 주장 등에 따라 2021년 12월 국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다시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통과하고 2022년 7월 시행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 대통령 소속인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와 제20조는 각각 국가위원회의 기능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과 국가위원회의 업무와 관계 등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각 주체들의 해석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위원회의 예산·인력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본법에서 도출한 연구센터의 잠재적 역할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제7조) 수립 지원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제8조) 수립 지원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제9조) 지원
-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제14조) 지원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5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제16조) 작성 지원

제6장 보칙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제27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홍보(제28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제31조) 지원

4. 조직구성안 개요

<p>제1안.</p> <p>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p> <p>(예: 출연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정책지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독립 연구기관 ▪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연구주체의 선정, 정책보고서 작성의 독립성),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기능함. ▪ 연구아젠다 결정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함 ▪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 예산을 활용하며(약 80%~90% 수준), 부족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연구·조사 수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부금 통해 예산 운용
<p>제2안.</p> <p>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산하 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존 연구기관 산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 ▪ 기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장점;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에 제한되는 한계 공존 ▪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 평가지원센터 ▪ 정부 출연(연)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협업 가능함
<p>제3안.</p> <p>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연구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공모를 통해 대학교 내 산하 연구센터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미함 ▪ 대학의 연구인력(교수, 박사, 대학원생 등)과 행정인력(교직원, 공무원 등)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지원을 수행함. 연구의 독립성과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는 장점이 있음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소속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이 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 ▪ 예산은 사업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지급하거나, R&D예산 편성을 통해 중장기 연구과제예산으로 지원 가능
<p>제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연과 대학 공동으로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 ▪ 위 2안과 3안의 장점을 취합하는 형태

자료를 참고하여 중요도 설문 및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아래 표는 앞서 제시된 기본법 및 시행령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잠재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범위를 적시한 것입니다.

조사, 연구, 교육 기능	정부 지원 기능	평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 추진계획 수립 지원 ▪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1-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1)	(2)	(3)	(4)	(5)	(6)	(7)

1-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1-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	(2)	(3)	(4)	(5)	(6)	(7)

1-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1-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2-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2-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1)	(2)	(3)	(4)	(5)	(6)	(7)

2-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2-4. ‘평가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	(2)	(3)	(4)	(5)	(6)	(7)

2-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2-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작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3-1. 아래 표에 적시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3-2. '조사, 연구, 교육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과 운영	(1)	(2)	(3)	(4)	(5)	(6)	(7)

3-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	(2)	(3)	(4)	(5)	(6)	(7)

3-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	(2)	(3)	(4)	(5)	(6)	(7)

3-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3-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4-1.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4-2.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4-3.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4-4.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학연 네트워크(제4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조사, 연구, 교육기능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4-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기능	
이유	

4-7.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8.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4-9.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10.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1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4-12.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5.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5-1.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	(2)	(3)	(4)	(5)	(6)	(7)

5-2.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은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	(2)	(3)	(4)	(5)	(6)	(7)

5-3.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	(2)	(3)	(4)	(5)	(6)	(7)

5-4.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의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	(2)	(3)	(4)	(5)	(6)	(7)

5-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개선사항	
이유	

5-7.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8.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9.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

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10.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1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12.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5-13. 위 표에서 제시한 5가지의 개선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델파이 조사 대상자

- 구체적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45명)의 주요 인적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1라운드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인적사항>

소속(계열)	성별	나이	직위	전공
학계	여	47	교수	과학기술사학과
학계	남	51	특임교수	사회학
학계	남	58	교수	물정책
학계	남	45	센터장	사회과학
학계	남	61	교수	환경관리
학계	남	53	교수	조경학
학계	여	71	연구교수	국제학
학계	남	52	교수	토목환경공학과
학계	남	51	교수	환경공학
학계	남	57	교수	정책학
학계	남	51	교수	사회정책학
학계	여	51	교수	환경공학
연구기관	남	55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연구기관	여	54	부연구위원	도시계획
연구기관	남	53	본부장	토목및환경학
연구기관	남	49	수석연구원	기후에너지
연구기관	남	56	연구위원	경제학
연구기관	남	53	선임연구위원	환경공학
연구기관	여	49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연구기관	남	63	연구위원	지리학
연구기관	여	48	연구위원	건강교육학
연구기관	남	38	소장	환경공학

소속(계열)	성별	나이	직위	전공
연구기관	남	50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연구기관	남	50	본부장	환경자원경제학
연구기관	여	48	부연구위원	이학
연구기관	남	45	연구위원	교육학
연구기관	여	57	책임연구원	환경계획학
연구기관	여	58	부연구위원	교통공학
연구기관	여	49	부연구위원	행정학
연구기관	여	50	부연구위원	국제학
연구기관	남	61	연구위원	사회학
연구기관	여	55	연구위원	도시공학
연구기관	남	47	센터장	경제학
연구기관	남	52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
연구기관	남	58	부장	경제학
연구기관	여	56	선임연구위원	식품경제학
연구기관	남	49	연구위원	경제학
연구기관	여	59	연구위원	교육학
연구기관	남	61	부원장	경제학
연구기관	남	60	센터장	사회복지학
연구기관	여	51	실장	성평등정책
연구기관	남	48	실장	환경계획학과
연구기관	여	43	단장	국제학
시민사회	남	43	사무처장	도시환경정책
사기업	남	45	상무	환경공학

자료: 저자 작성

- 1라운드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45명)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보다 간략히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음
- 7월 9일까지 1라운드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15명)과 9월 5일까지 2라운드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12명)의 주요 인적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2 라운드 설문지: 전문가 집단 인적사항 요약>

	소속(계열)	성별	나이
1라운드 전체 대상 집단	학계(12명), 연구기관(31명), 시민사회(1명), 사기업(1명)	남성(29명), 여성(16명)	평균 52.4세
1라운드 응답자 집단	학계(6명), 연구기관(9명), 시민사회(0명), 사기업(0명)	남성(8명), 여성(7명)	평균 53.3세
2라운드 응답자 집단	학계(4명), 연구기관(8명), 시민사회(0명), 사기업(0명)	남성(6명), 여성(6명)	평균 53.5세

자료: 저자 작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전문가 델파이 2차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 취지를 고려하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성 보강 및 관련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문연구기관(가칭: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제2차 설문조사**입니다. (귀하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제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제2차 델파이 설문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1차 델파이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적시하였습니다**. 설문 응답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고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공동연구원: 권남호 교수 (nhkwon@ssu.ac.kr, 02-820-0514)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을 보호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문을 시작하시기 전에 ‘1.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근거법령’, ‘3.기본법에서 도출한 연구센터의 잠재적 역할’, ‘4. 조직구성안 개요’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2.1)에 근거, 정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관련 제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효과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2007년 처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반법의 지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불완전한 하위법으로 법적 지위 변동되고,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소속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학술적 관계, 법률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회복해야한다는 주장 등에 따라 2021년 12월 국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다시 완전한 형태로 복원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한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통과하고 2022년 7월 시행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 대통령 소속인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와 제20조는 각각 국가위원회의 기능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는 각각 국가위원회의 구성과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무조정실과 국가위원회의 업무와 관계 등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각 주체들의 해석과 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위원회의 예산·인력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검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 효과성 예측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근거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국무조정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분야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관계 법령 및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④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목적 외로 활동한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기본법에서 도출한 연구센터의 잠재적 역할

<p>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제7조) 수립 지원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제8조) 수립 지원 ▪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제9조) 지원 ▪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제14조) 지원 <p>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제15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제16조) 작성 지원 <p>제6장 보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제27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 홍보(제28조) 지원 ▪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제31조) 지원 	
---	--

4. 조직구성안 개요

<p>제1안. 독립 법인 연구센터 설립 (예: 출연연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정책지원과 연구를 전담하는 독립 연구기관 ▪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연구주체의 선정, 정책보고서 작성의 독립성),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평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기능함. ▪ 연구 아젠다 결정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에 관한 사항은 국무조정실과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한 조정이 필요함 ▪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출연금 예산을 활용하며(약 80%~90% 수준), 부족한 예산은 공공부문의 연구·조사 수탁 사업을 수행하거나, 기부금 통해 예산 운용
<p>제2안. 기관 부설 연구센터 설치 (예: 지속위, 국조실, 경사연, 출연연 등 산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산하 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 혹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존 연구기관 산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치 ▪ 기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장점;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분야에 제한되는 한계 공존 ▪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 정부 출연(연)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 국무조정실 - 연구기관 기능조정 및 협업 가능함
<p>제3안. 대학 부설 연구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연구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공모를 통해 대학교 내 산하 연구센터로 설치하는 방안을 의미함 ▪ 대학의 연구인력(교수, 박사, 대학원생 등)과 행정인력(교직원, 공무원 등) 활용하여 분야별 전문연구를 수행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책지원을 수행함. 연구의 독립성

	<p>과 분야별 전문성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는 장점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소속의 폭 넓은 전공분야의 연구인력이 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 ▪ 예산은 사업비성 예산을 편성하여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지급하거나, R&D예산 편성을 통해 중장기 연구과제예산으로 지원 가능
<p>제4안. 학연 네트워크 모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연과 대학 공동으로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 ▪ 위 2안과 3안의 장점을 취합하는 형태

자료를 참고하여 중요도 설문 및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중요 사항]

이하 문항은 1라운드 델파이 설문 문항과 유사성이 높습니다. 기존 문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귀하가 1라운드 설문에서 답변하신 점수(밑줄로 표시)와 모든 설문 응답자의 평균과 중위값을 표시하였으니 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관식 문항의 경우 1라운드 설문 답변 결과를 요약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1-1.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우리나라는 2000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EU)을 비롯한 영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국가들이 최근 확정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관점에서 아래 설문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설문 문항 내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내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강화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규제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국내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강화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규제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규제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2.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 공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국제 기구와 규제 기관들이 제정한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 스탠다드들이 등장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등의 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관점에서 아래 설문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설문 문항 내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보와 지식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3. 조직 거버넌스 통합

국내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정책연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연구팀 등의 연구원들과,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등의 대학 연구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기관들이 분산되어 운영되는 경우, 분산된 기관들 사이에서 중복연구와 연구예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통합 및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부 부처가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정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타 부처의 정책과 상충하거나 같은 부처 내에서조차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직 거버넌스 통합’ 관점에서 아래 설문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설문 문항 내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현재의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분산 정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에 부정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 통합을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조직 거버넌스 통합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4.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의 정책·제도의 보편적 원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 방향의 기본 원칙으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의 성과(효과)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의 계획과 목표 수준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관점에서 아래 설문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설문 문항 내용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를 보다 잘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평가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기능의 범위와 중요성

아래 표는 앞서 제시된 기본법 및 시행령을 토대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가 잠재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 범위를 적시한 것입니다.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정부 지원 기능	평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 정보 보급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추진계획 수립 지원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2-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0,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1, 중위값=6)	(1)	(2)	(3)	(4)	(5)	(6)	(7)

2-2.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및 운영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차 설문 결과: 평균=6.0,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2-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국가지속가능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6.4, 중위값=7)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1, 중위값=5)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8, 중위값=6)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차 설문 결과: 평균=5.3, 중위값=5)	(1)	(2)	(3)	(4)	(5)	(6)	(7)

2-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의 중요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6.5, 중위값=7)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5.3, 중위값=5)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6.1, 중위값=6)	(1)	(2)	(3)	(4)	(5)	(6)	(7)

2-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법률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의 목적으로 설립 가능하다고 적시. 지속가능발전정보는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사용 -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각심을 키우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 &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 조사와 연구: 각 부처의 업무 영역 조율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 - 정부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행정 지원을 통해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역할하는 것이 현실적 - 평가: SDGs 세부 목표의 달성 수준과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 & 국가지속가능발전 계획의 방향성 설정 및 계획 수립, 각 행정부처의 행정계획 등 청사진이 국가지속가능발전 계획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평가

2-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p>-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낮은 기능 & 지방기본전략은 지자체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 정보를 이용하여 자체 고유 목적에 맞춰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p> <p>- 교육 및 홍보: 관련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미 수행중</p>

3.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의 효과: 개선의 정도

3-1.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1,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3-2.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및 운영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차 설문 결과: 평균=6.0, 중위값=6)	(1)	(2)	(3)	(4)	(5)	(6)	(7)

3-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6.3, 중위값=7)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4.9, 중위값=5)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5)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차 설문 결과: 평균=5.1, 중위값=5)	(1)	(2)	(3)	(4)	(5)	(6)	(7)

3-4. '평가 기능' 관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예상되는 기능의 개선 정도를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정도, 7: 매우 높은 개선정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6.4, 중위값=7)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5.3,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3-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및 평가: 센터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공개하여 정보 보급 및 관련 자료의 주기적 갱신 - 조사와 연구: 현재 지속가능 관점에서 수행되는 조사 및 연구 성과물은 부족 & 센터가 설립된다면, 균형잡힌 시각에서 접근 가능 & 위탁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체계화, 전문가 풀 구성, 국내외 네트워크 마련 등을 통해 조사연구기능이 확충 - 정부지원과 평가: 정부 계획 수립 및 제도 정착 지원, 평가지원 등은 연구센터 수준에서 충분이 가능 -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센터가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단일화된 창구 역할 수행 - 평가: 평가 주체, 체계, 방법, 내용, 활용 등에 대한 합의가 수월해질 것

3-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 전과 비교하여 설립 후 가장 작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제한적 역할만 수행할 것 - 교육 및 홍보: 해당 기능은 이미 여러 조직에서 진행중 - 지자체 단위의 평가, 보고서 작성: 현재도 각 단위에서 수행중

4.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설립 효과 측정 기준(기능)

4-1. 아래 표에 적시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1,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2, 중위값=6)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1, 중위값=6)	(1)	(2)	(3)	(4)	(5)	(6)	(7)

4-2.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및 운영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및 연구 (1차 설문 결과: 평균=6.2, 중위값=7)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해외 제도 및 정책 동향과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1차 설문 결과: 평균=6.2, 중위값=6)	(1)	(2)	(3)	(4)	(5)	(6)	(7)

4-3. ‘정부 지원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6.5, 중위값=7)	(1)	(2)	(3)	(4)	(5)	(6)	(7)
지방기본전략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1, 중위값=5)	(1)	(2)	(3)	(4)	(5)	(6)	(7)
추진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홍보 (1차 설문 결과: 평균=5.3, 중위값=6)	(1)	(2)	(3)	(4)	(5)	(6)	(7)

4-4. ‘평가 기능’ 관점에서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중요도, 7: 매우 높은 중요도)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6.4, 중위값=6)	(1)	(2)	(3)	(4)	(5)	(6)	(7)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1차 설문 결과: 평균=5.3, 중위값=6)	(1)	(2)	(3)	(4)	(5)	(6)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6)	(1)	(2)	(3)	(4)	(5)	(6)	(7)

4-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높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센터의 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의 역할이 가장 클 것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센터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 - 조사와 연구: 조사연구 활동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 - 연구 성과물: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 정부지원 기능: 주요 지원 기능/체계별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작성 & 정책에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4-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잠재기능들 중 연구센터 설립의 효과를 측정 (설립 전-후 비교)하는데 가장 중요성이 낮은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효과 측정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원: 관련 보고서는 연구나 정보 공유의 결과물 & 보고서 작성과 배포 업무는 이미 수행 - 지자체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센터 설립 이후에도 각 지자체 단위에서 별도의 연구 과제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5.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기능 수행 능력

5-1.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0,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2, 중위값=6)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6.3, 중위값=7)	(1)	(2)	(3)	(4)	(5)	(6)	(7)

5-2.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8,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9, 중위값=6)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8, 중위값=6)	(1)	(2)	(3)	(4)	(5)	(6)	(7)

5-3.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6)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4.4, 중위값=4)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4.5, 중위값=5)	(1)	(2)	(3)	(4)	(5)	(6)	(7)

5-4.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학연 네트워크(제4안)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의 예상되는 기능 수행 능력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수행 능력, 7: 매우 높은 수행 능력)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정보망 구축 및 조사·연구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4.9, 중위값=5)	(1)	(2)	(3)	(4)	(5)	(6)	(7)
정부 지원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4.2, 중위값=4)	(1)	(2)	(3)	(4)	(5)	(6)	(7)
평가 기능 (1차 설문 결과: 평균=4.2, 중위값=4)	(1)	(2)	(3)	(4)	(5)	(6)	(7)

5-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사업 발굴 및 적극적 수행이 가능 & 예산 및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 & 중립적인 관점에서 독립적인 연구 수행 가능 - 정부 지원 기능: 정부 산하의 독립적 기관의 경우 정부 지원 업무가 가장 원활하게 수행 & 국가차원의 정책조정, 모든 정책/부처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의 방향성을 녹이고 추진하는데 도움 - 평가: 독립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의 객관화

5-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나아가 정부 지원으로 확장되는 것은 어려움 & 정부 지원에 치우친 업무로 조사나 연구 등의 역할은 다소 미흡 - 정부 지원 기능: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정부와의 객관적 관계 유지 - 기존 연구원들에서 수행하던 연구(환경연) 등과의 업무분담, 차별성 부각 - 독립 기관과 정부 간 적절한 역할 및 기능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필요에 의한 기관 운영의 가능성

5-7.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연구의 기능은 수행 가능하지만, 각 연구 기관의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힘들 수 있음 &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 & 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연구추진 용이 - 정부 지원 기능: 정부 기관의 부설 센터가 될 경우 정부 지원 역할이 우선될 것임 & 기관 부설로 오히려 상대 부처가 명확하다면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화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 평가: 기존 평가 업무 등의 체계를 반영한 평가 기능이 우수할 것

5-8.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독자적 사업 추진에 한계 - 타 부처나 관련 기관과의 협업 어려움 & 평가에 있어 적극적 협력 및 성과를 만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 정부 산하(중간 조직이 포함되나) 연구기관인 만큼, 정부 지원과 연구 이외의 업무가 가장 어려울 것 -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고루 담당하기에는 한계 -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향적 정책 추진의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부족

5-9.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학술적인 부분, 조사나 연구, 교육 기능 수행이 가장 용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 수행 가능

5-10.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 기능에 한계 - 평가: 평가에 있어 관련 자료 구축이나 지방정부 등의 협조 등에 어려움 - 정부 지원 기능: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경향을 이해하기에는 한계 & 부처, 정부와의 파트너쉽 어려움

5-1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능** 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학술적 부분의 수행이 용이, 다만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5-12.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

높이 있다면, 해당 기능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이유	-----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 정부 지원 기능에 한계: 정책 및 제도 지원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 평가 기능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6.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조직 구성안 별 개선 사항

6-1.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독립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차 설문 결과: 평균=6.0, 중위값=6)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차 설문 결과: 평균=6.2, 중위값=6)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차 설문 결과: 평균=3.7, 중위값=4)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차 설문 결과: 평균5.6, 중위값=6)	(1)	(2)	(3)	(4)	(5)	(6)	(7)

6-2.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차 설문 결과: 평균=5.5, 중위값=6)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차 설문 결과: 평균=5.7, 중위값=6)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차 설문 결과: 평균=5.2, 중위값=5)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차 설문 결과: 평균=5.6, 중위값=6)	(1)	(2)	(3)	(4)	(5)	(6)	(7)

6-3.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차 설문 결과: 평균=4.4, 중위값=4)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차 설문 결과: 평균=4.5, 중위값=4)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차 설문 결과: 평균=4.7, 중위값=5)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차 설문 결과: 평균=4.7, 중위값=5)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차 설문 결과: 평균=3.9, 중위값=4)	(1)	(2)	(3)	(4)	(5)	(6)	(7)

6-4. 앞에서 소개한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가지 조직구성안 중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의 예상되는 센터의 기능 **개선 사항**을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매우 낮은 개선, 7: 매우 높은 개선)

센터의 기능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법정업무 절차 및 내용 (1차 설문 결과: 평균=4.1, 중위값=4)	(1)	(2)	(3)	(4)	(5)	(6)	(7)
정책의 일관성 (1차 설문 결과: 평균=4.1, 중위값=4)	(1)	(2)	(3)	(4)	(5)	(6)	(7)
연구 효율성 (1차 설문 결과: 평균=4.1, 중위값=4)	(1)	(2)	(3)	(4)	(5)	(6)	(7)
예산 절감 (1차 설문 결과: 평균=4.7, 중위값=4)	(1)	(2)	(3)	(4)	(5)	(6)	(7)
유관기관들과의 협조체계 (1차 설문 결과: 평균=4.2, 중위값=4)	(1)	(2)	(3)	(4)	(5)	(6)	(7)

6-5.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 연구를 통한 제도 운영 및 정책 개선 가능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수행 - 평가: 정부 정책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인 평가 - 조사와 연구: 독자적인 연구 수행 가능 - 책임과 의무를 가진 별도의 조직이 있다는 것은 조사연구교육, 정부지원, 평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의 의미

6-6.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독립 법인 연구기관(제1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절감 효과는 낮을 것임 - 연구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음

6-7.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독립적인 센터(제1안) 보다는 예산 절감 가능 & 기존 연구인력의 활용, 연계 용이 - 법정 업무절차: 상급 기관의 지휘에 따른 법정 업무 절차 측면의 개선은 기대됨 - 정책 일관성: 정부 산하 기관이므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 -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

6-8.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기관 부설 연구센터(제2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협조: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에는 오히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기존 연구 기관은 고유 업무가 담당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음 -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의 관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취약

6-9.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와 연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가능 하므로, 연구의 효율성은 높을 것 & 대학의 특성 상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및 조사가 체계적 - 예산 절감: 기존 조직과 연구인력을 이용

6-10.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대학 부설 연구센터(제3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 - 정책 일관성이나 연구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 예상 - 관심 분야의 변화 등으로 연구의 지속성을 확보 어려움 - 지속가능발전 정부 지원 및 평가 기능: 정부 지원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어려움

6-11.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절감: 인력 구성이 용이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클 것 - 조사와 연구: 학연 네트워크로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 및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6-12.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가 **학연 네트워크(제4안) 형태로 운영될 때 가장 낮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조직이 아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정업무에 있어 한계 - 국가 단위 큰 계획 수립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쉽지 않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움 - 사업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여 전반적으로 효과적 사업 추진에 한계 - 정부 지원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움 - 예산 확보 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취약

6-13. 위 표에서 제시한 5가지의 개선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선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	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 1라운드 설문 답변 내용 요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정책 반영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지속가능발전계획이 실질적인 국가정책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법, 제도에 반영 - 행정계획 평가의 환류에 대한 사항 강화 - 현재 단순히 검토하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행정계획에서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체계 마련 - 기존 연구기관과의 역할 또는 역할 구분에 대한 내용 숙고 - 기존에 관련 연구원에서 하고 있던 연구 및 업무들과 어떻게 차별화하고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논의 - 국제협력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

오랜 시간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